

발간 등록 번호

11-B190031-000197-08

Shaping the Future with EDCF

한국의 개발협력

Journal of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2017 NO. 2



국토인프라 글로벌 개발협력 연계 시장진출전략
공적개발원조와 민간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개도국 민간부문개발 증진을 위한 국별 지원 방안과 적용
양허성 차관원조의 중장기 발전방안
2016년 DAC 회원국 ODA 잠정통계 주요 내용
솔로몬군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인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한국의 개발협력

Journal of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2017년 제2호

한국의 개발협력

발행 : 2017년 9월
발행인 : 은성수
발행처 : 한국수출입은행
편집인 : 김태수
주소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전화 : 02-3779-6114(대표)
팩스 : 02-784-1030(대표)
홈페이지 : www.edcfkorea.go.kr

본 발간물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수출입
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국제개발협력 동향

- 03 국토인프라 글로벌 개발협력 연계 시장진출전략
(김성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 29 공적개발원조와 민간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이훈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II. 한국의 개발협력

- 67 개도국 민간부문개발 증진을 위한 국별 지원 방안과 적용
(임소영 산업연구원 글로벌전략연구단)
- 93 양허성 차관원조의 중장기 발전방안
(박복영, 권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국제학연구원)

III. 분야별 개발협력 논의동향

- 147 2016년 DAC 회원국 ODA 잠정통계 주요 내용
(김다정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심사역)

VI. 개발협력대상국 분석

- 167 솔로몬군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조재동 한국수출입은행 심사역)
- 183 인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김찬수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조사역)

EDCF

I . 국제개발협력 동향

국토인프라 글로벌 개발협력 연계 시장진출전략
김성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이훈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국토인프라 글로벌 개발협력 연계 시장진출전략¹⁾

김성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1. 서론

글로벌 개발협력은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빈곤감소와 저개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성장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서울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개발행동계획을 이끌어내었다. 이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연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와 더욱 심화된 빈곤문제 그리고 향후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저개발국 지원의 필요성이 있었다. 그 후 2015년, UN총회에서는 MDGs를 잇는 새로운 글로벌 목표인 2030지속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였다. 정부 중심에서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의 참여 확대와 경제성장 및 사회, 환경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넓은 범주의 개발 목표를 수립

1) 본고는 김성일 외(2011), 『G20시대의 국토인프라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과 시장진출전략』, 국토연구원,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빈곤종식,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 향상과 원리, 에너지접근 보장, 경제성장 촉진 및 일자리 증진, 인프라시설 구축 및 산업화와 혁신 증진,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이행수단과 글로벌파트너십 강화 등이다.

이러한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저소득 국가 및 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 방식의 재검토와 원조의 효과성을 넘어 개도국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에 기초한 차별화된 개발협력 전략을 새롭게 추구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특히 국토인프라 분야도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로 이미 2010년 서울개발컨센서스에서 제시된 9개 분야 중에서도 국토인프라 분야의 글로벌 개발협력이 최우선 과제였다. 그간 우리나라는 원조에 의한 국토인프라 구축으로 경제발전의 기반을 강화하였고, 이제는 원조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였다. 단순히 우리의 필요에 의해 원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로서 수원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는 인프라 건설 자체의 하드한 협력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인프라의 계획, 집행, 평가 등 관리능력과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 등 소프트한 부분의 협력부분도 존재한다.

한편, 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가입에 따라 진정한 개도국의 발전성과를 위한 국토인프라

분야의 개발협력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대규모 개발원조에 소요되는 재원의 다각화를 위해 민간자본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²⁾ 따라서 이러한 글로벌 개발협력의 추진방식의 전환에 대응하여, 국토인프라 분야의 글로벌 개발협력과 시장진출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본고는 변화하는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에 대응하고 개도국 인프라 개발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면서,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진출과의 연계전략과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국토인프라 개발협력과 해외진출 현황

1. 글로벌 개발협력과 국토인프라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에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개도국과의 파트너로서의 협력체제로 보고자 한다.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이며, 다수의 선진 공여국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국토인프라 분야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2) 2015년 7월 제3차 개발재원총회에서 SDGs 이행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다.

견인하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 인프라 투자에는 대규모의 자본투자와 장기간의 투자회임기간 소요로 민간의 자본만으로는 적정투자수익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간 유·무상원조에 의한 개발협력만으로는 대규모 인프라 시설투자 등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인프라개발의 협력파트너로서 대규모 투자재원의 확보를 통한 인프라 투자지원으로 실질적인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 하에 개발협력을 통한 인프라분야의 시장진출 전략을 통해 개도국과의 상생협력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이는 개도국의 개발효과성을 제고를 위한 인프라투자는 종전의 개발원조(유·무상원조)만의 협의의 개발협력만으로는 불가능하여, 민간기업, 민간투자자본, 공적 및 정책금융과의 결합을 통해 가능하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국토인프라는 국토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물적 고정자본형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건설 프로젝트로 구현되며 여기에는 토목, 건축, 플랜트 등 다종다양한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국토인프라 분야의 개발 협력 대상은 국가 전반의 인프라 공간 계획과 개별 인프라의 종합적 구축계획 및 집행을 모두 포함한다. 즉, 국토인프라 부문별 마스터 플랜의 수립과 이러한 마스터플랜하의 세부 프로젝트 기획 및 설계, 시공, 유지운영 등이 글로벌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국토인프라 분야 해외진출 현황

1) 원조형 국토인프라 해외 진출 현황

공적개발원조(ODA)란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재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원조형 해외진출 실질적인 증여 형태의 무상원조(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등)와 차관 형태의 유상원조(EDCF 등) 그리고 국제기구(다자간개발은행 포함) 출연과 국제기구 출자 등이 포함된다.

유상원조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EDCF다. EDCF의 2015년 실적을 살펴보면, 전년(5.1억 달러) 대비 9.8% 증가한 5.6억 달러며 양자간 원조 중 유상 원조 비중은 36.7%로 201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2015년 유상원조(EDCF)의 분야별, 지역별, 국가별 실적을 보면, <표 1>과 같이, 분야별 실적은 크게 교통, 통신, 에너지, 수자원 및 위생, 교육 등이 있으며, 이중 교통부문 비중이 31.5%(1.8억 달러)로 가장 높으며 에너지부문이 24.5%(1.4억 달러)로 두 번째로 높다. 이는 국제개발협력 형태의 사업이 대부분 인프라 건설 즉, 도로, 발전소, 상하수도 등의 프로젝트가 주요한 투자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역별 실적으로는 아시아가 63.6%(3.3억 달러)로 가장 높다. 2016년까지 국가별 유상원조(EDCF) 누계실적은 베트남이 총 49건(10.5억 달러)로 49개 개도국 중 가장 높다. 반면, 중남미 및 중동 등의 다른 지역에서의 진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표 1〉 2015년 유상원조(EDCF)를 통한 해외진출 실적: 분야·지역별 실적
(단위: 천달러)

분야	교통	통신	에너지	수자원,위생	교육	기타	계
금액	177,364	19,158	138,126	94,187	35,827	69,854	563,250
비중	31.5%	3.4%	24.5%	16.7%	6.4%	17.56%	100%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기타	계
금액	331,097	160,645	40,718	30,618	-	563,250
비중	58.8%	28.5%	7.2%	5.5%	-	100%

출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한편, 무상원조 형식의 자금으로는 KOICA다. 2015년 무상원조 실적을 살펴보면, 총 9.7억 달러로 전년(8.8억 달러)대비 9.6%가 증가하였으며 총 585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프로젝트의 수에 비해 건별 원조규모가 50만달러 안팎으로 작은 원인은 KOICA 기금을 통한 발주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OECD DAC 가입이후 최근 5년간 양자 간 원조 중 무상원조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무상원조 실적 중 KOICA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58%(5.6억 달러)다. 2015년 무상원조(KOICA)의 분야별, 지역별, 국가별 실적을 보면, 〈표 2〉와 같이, 분야별로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등으로 이중 교육부문 비중이 20.9%(1.2억 달러)로 가장 높고 기술환경에너지 부문이 17.9%(1억 달러)로 전체의 40%에는 미치지 못한다. 무상원조 사업도 대부분이 교육시설 및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별 실적을 보면, 유상원조(EDCF)에 비해 지역별 다변화현상이 뚜렷하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으로 원조가 분포되어 있다. 유상원조와 더불어, 국가별 무상원조도 베트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 2015년 무상원조(KOICA)를 통한 해외진출 실적: 분야·지역별 분석
(단위: 천달러)

분야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 에너지	기타	계
금액	92,813	117,682	92,981	82,890	101,005	75,880	563,250
비중	16.5%	20.9%	16.5%	14.7%	17.9%	13.5%	100%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기타	계
금액	223,425	122,282	60,699	21,218	135,626	563,250
비중	39.7%	21.7%	10.8%	3.8%	24.0%	100%

출처: KOICA(한국국제협력단)

2) 비원조형 국토인프라 해외 진출 현황

비원조형 실적은 원조와 연계되지 않은 순수 해외진출로 최근 5년간(2012-2016년) 이러한 형식의 해외건설 실적은 총 2,704억 달러다. 전반적으로 해외건설 수주는 2014년을 정점으로 유가하락 등 중동발주의 위축 등으로 이후 대폭 감소하였다. 아울러, 금융조달형 진출방식도 줄어들고 있다. 일반도급형의 비중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 시공사 금융제공형 및 투자개발형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시공사 금융제공형 및 투자개발형 비중은 2013년 이전에는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013년을 기준으로 감소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자개발형 실적은 총 600억 달러로 전체 실적의 2.35%에

그친다. 시공자 금융제공형의 실적도 2600억 달러로 전체 실적의 10%에 미달한다. 시공자 금융제공형과 투자개발형 사업의 부진으로 신규 수요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표 3〉 금융조달방식에 따른 해외건설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일반 도급형	61,218	94.36	51,810	79.45	56,939	86.26	41,504	89.94	26,976	95.69	238,447	88.17
시공자 금융제공형	3,432	5.29	10,900	16.71	6,904	10.46	3,291	7.13	1,119	3.97	25,646	9.48
투자 개발형	230	0.35	2,502	3.84	2,167	3.28	1,349	2.92	97	0.34	6,345	2.35
해외 건설 합계	64,880	100.00	65,212	100.00	66,010	100.00	46,144	100.00	28,192	100.00	270,438	100.00

출처: 해외건설협회

3) 시사점

최근 해외건설시장에서 발주되는 프로젝트의 형태가 대규모화 되어 가면서 시공자로 하여금 금융조달능력까지 요구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일반 도급형 프로젝트보다는 투자개발형 프로젝트의 발주가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저개발 국가에 대한 선진국들의 공여 한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조의 규모의 확대와는 별개로 여전히 국제개발협력 형태의 프로젝트 수주에는 우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분야 및 지역에 편향된 실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개발협력 시장에서의 위치를 명확히 보여준다.

III. 개도국의 국토인프라 구축여건과 경쟁역량 진단

1. 개도국 인프라 구축 여건 분석

(저발전국) 개도국의 국토인프라 여건 분석을 위해 OECD 및 UN(IBRD), ADB, AFDB 등의 통계자료 중 국내총생산, 주체별 고정자본형성, 건설 부가가치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세계은행이 국민소득 수준에 따라 (저)개발도상 국가로 구분하고 있는 19개 국가를 대상국가로 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국토인프라 구축여건은 개발도상국가의 국토인프라 구축여건과 공적개발원조의 고정자본형성 기여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4 그룹으로 유형화하였다.

〈표 4〉 개발도상국가의 인프라 구축여건 유형화

구 분		공적개발원조의 고정자본형성 기여도	
		고	저
인프라 구축여건	양호	제1그룹 국가	제2그룹 국가
	악화	제3그룹 국가	제4그룹 국가

출처: 저자 작성

분류된 유형에 따라, 국토인프라 구축여건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위 인프라 구축여건의 유형화에 따라 다양한 개발원조와 금융조달을 통한 진출전략이 가능할 것이다.

〈표 5〉 유형구분에 따른 구체적인 예시

구분	특 성	대상 국가(예시)
그룹1	국토인프라 구축여건 양호, 공적개발원조기여도가 높은 국가 (5% 이상)	마이크로네시아,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그룹2	국토인프라 구축여건 양호, 공적개발원조기여도 낮은 국가 (5% 이하)	베트남, 과테말라, 모로코, 앙골라, 중국, 튀니지, 인도, 이집트,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그룹3	국토인프라 구축여건 악화, 공적개발원조기여도가 높은 국가 (5% 이상)	탄자니아, 키르기스스탄
그룹4	국토인프라 구축여건 악화, 공적개발원조기여도가 낮은 국가 (5% 이하)	필리핀, 인도네시아

출처: 저자 작성

2. 국토인프라 분야 경쟁역량 분석

국토인프라 개발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금조달 및 확보다. 자금조달 및 확보 차원에서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 사업은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양자 간 개발사업(KOICA/EDCF), 둘째, 다자간개발사업이다. 이에는 ‘다자간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주도형 개발 사업’과 MDB의 지원으로 수원국이 계획하여 주도한 사업유형이 포함된다. 셋째, 투자개발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이다. 이에는 순수 민간 투자사업과 MDB 자금을 활용한 PPP 사업으로 구분되며,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세계은행(WB)의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와 ADB의 PSOD(Private Sector Operation Department)가 있다.

이들 글로벌 개발협력 사업들의 특성과 프로세스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업형태별 경쟁 역량 요소들로 기획 및 발굴단계 24개, 수주 및 마케팅 28개, 엔지니어링·시공 및 사후관리 15개를 추출하였고 이를 중요도-성과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경쟁역량수준은 엔지니어링·시공 및 사후관리단계가 4.63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획 및 발굴단계(4.55), 수주 및 마케팅단계(4.33)가 가장 낮았으며, 중요도와 경쟁역량수준간의 갭(차이)은 수주 및 마케팅, 기획 및 발굴, 엔지니어링·시공 및 사후관리 순으로 파악되었다.

〈표 6〉 글로벌 개발협력사업 사업단계별 Gap분석

구분	중요도	경쟁역량수준(성과)	GAP
기획 및 발굴 단계	5.50	4.55	0.96
수주 및 마케팅 단계	5.41	4.35	1.06
엔지니어링·시공 및 사후관리 단계	5.17	4.63	0.54

출처: 저자 작성

글로벌 개발협력을 통한 시장진출역량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조사 결과, 중요한 역량요소들의 중요도 대비 현재수준은 55.8%~84.8%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80% 이상인 역량요소들은 계획 경험, 경험이 풍부한 선진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역량, 현장 중심 상시 사업발굴 역량, 통합조정 및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 전담조직, 공기업 및 민간기업 공동의 전담회사 설립, 기술적 지원 및 자문, 교육,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제협력 지원 전문기구의 설립 등이다. 하지만, 이들 중 역량수준의 중요도와 현재수준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항목은 계획 경험, 경험이 풍부한 선진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역량, 현장 중심 상시 사업발굴 역량으로, 그 외 사항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국토인프라 글로벌 개발협력 연계 시장진출전략

1. 연계 진출전략 기본방향

다음으로 전략설정을 위한 환경분석을 하였다. 글로벌 개발협력 사업 경쟁역량 분석, 글로벌 개발협력 연계시장진출을 위한 역량요소 설문조사, 개발협력을 위한 개도국의 국토인프라 구축 전망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글로벌 개발협력을 위한 전략 환경을 SWOT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다음의 <그림 1>은 글로벌 개발협력 연계 진출 전략 도출을 위한 SWOT 분석의 결과이다.

〈그림 1〉 전략설정을 위한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발전, 국토계획 등 인프라 개발경험 축적 • 정부의 개발협력 인식과 지원의 확대 • 해외진출 기술 및 경험의 축적 • 투자개발형 진출 지원 확대(해외건설특화펀드 등)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적 개도국 인프라 여건 진단 및 정보공유체계의 미흡 • KSP 후속 사업화 능력의 미흡 • 대규모 사업 금융조달 능력의 미흡 • 상시사업발굴 부족, 개발자문 컨설팅기반의 취약 • PPP 방식의 해외진출 경험부족 	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가시적 환경조성 • 한국형 경제발전 및 국토개발모델에 대한 개도국의 기대 증가 • 수원국(원조대상국가)의 경제성장 및 인프라 수요의 증대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개발협력에 있어서의 국가 간 경쟁심화 • 비구속성원조 확대 등 개발협력 여건의 변화 	T

출처: 저자 작성

이상의 전략 환경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2가지 전략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즉, 개도국의 국토인프라 구축 여건 및 역량수준에 맞는 맞춤형 글로벌 협력 연계 시장접근 전략의 추구, 대규모 국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자원 및 참여기관을 통한 개발협력과 시장 진출 전략 등이다.

2. 연계 진출 세부전략

1)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수요에 따른 맞춤형 글로벌 개발협력 강화

(1) 글로벌 개발협력사업의 구분

개발도상국가의 국토인프라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사업은 ① 공적개발원조(ODA, EDCF)사업 ② 국제기구 및 국제개발은행과 제휴 또는 연계한 국제협력사업 즉 다자간 협력사업 ③ 민간기업(공기업 포함)이 주도하는 국제협력사업 즉 PPP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는 대상국가의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인프라에 대한 무상 또는 장기차관 방식 등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사업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모면이나 사업 성격면에서도 한계는 있다. 이에 비해서 국제기구, 개발은행과 제휴 또는 연계한 국제협력사업 즉 다자간 협력사업은 대상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국토인프라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건설업체 등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간기업(공기업 포함)이 주도하는 국제협력사업, 즉 PPP사업은 경제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과 국토인프라 구축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등 국제협력 사업을 매우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 방식은 경제성장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토인프라 구축 여건에 따른 글로벌 개발협력 방향

개발도상국가와의 국토인프라 글로벌 개발협력은 대상국가의 국토인프라 구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국토인프라 구축이 증가추세에 있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고정자본형성에 있어서 공적개발원조의 기여도가 높은(5% 이상) 국가의 경우(그룹1 국가)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안정적인 국토인프라 지원을 통한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들 국가군과의 글로벌 개발협력 방식은 국제기구, 개발은행과 제휴 또는 연계를 통한 다자간 협력을 추진하고, 아울러 공적개발원조 등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간 주도의 개발협력방식은 경제여건이 성숙되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자개발은행(MDB)사업과 연계하여, 민간자본의 투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룹2의 국가는 향후 인프라 구축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공적개발원조의 국토인프라형성 기여도가 낮은 국가군으로 이들 국가는 민간자본의 역할을 통한 PPP방식의 국제협력이 가능한 국가이며, 시장진출연계를 위한 여건이 잘 구축된 국가군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과의 협조융자 등 혼합금융 조달을 통한 시장진출도 가능하다.

그룹3의 국가는 향후 인프라 구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공적개발원조의 국토인프라형성 기여도가 높은 국가군으로 무상원조를 통한 국토인프라 지원과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과 제휴 또는 연계를

통한 다자간 협력사업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룹4의 국가는 향후 인프라 구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공적개발원조의 국토인프라형성 기여도가 낮은 국가로 민간기업(공기업 포함)이 주도하는 국제협력사업, 즉 PPP사업을 추진하되,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과 제휴 또는 연계한 다자간 협력사업과 공적개발원조를 적정히 혼합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개발협력 방향은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실제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개도국의 분야별 인프라형성 수준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수요조사의 결과를 통해 국가별 원조전략 계획을 토대로 다양한 개발원조의 접근방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 7〉 국토인프라 구축 여건에 따른 글로벌 개발협력 방향

구분	특성	대상국가(예시)	개발협력기본방향
그룹 1	국토인프라 구축여건 양호, 공적개발원조기여도가 높은 국가 (5% 이상)	마이크로네시아,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안정적인 국토인프라지원 ②+①+③
그룹 2	국토인프라 구축여건 양호, 공적개발원조기여도가 낮은 국가(5% 이하)	베트남, 과테말라, 모로코, 앙골라, 중국, 튀니지, 인도, 이집트,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국토인프라지원 확충 ③+①+②
그룹 3	국토인프라 구축여건 악화, 공적개발원조기여도가 높은 국가(5% 이상)	탄자니아, 키르기스스탄	경제원조와 안정적 국토인프라지원 병행 ①+②
그룹 4	국토인프라 구축여건 악화, 공적개발원조기여도가 낮은 국가(5% 이하)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토인프라지원 확충 ③+②+①

주 : ① 공적개발원조(EDCF, KOICA)사업 ②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과 제휴 또는 연계한 국제협력사업 즉 다자간 협력사업 ③ 민간기업(공기업 포함)이 주도하는 국제협력사업 즉 PPP사업

(3) 인프라 분야별 글로벌 개발협력 강화

향후 수요가 예상되는 인프라 분야일수록 글로벌개발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에 있어 중요한 분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이 국제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이들 분야의 글로벌 개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토인프라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의 중요성 대비 개발협력 역량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은 철도, 수자원, 도시개발 등의 분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자원 분야의 글로벌 개발협력의 중요성이 높은 대신 역량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해 이 부문의 개발협력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이어 도시개발분야 및 철도 분야의 중요성과 역량수준에도 차이가 있어, 글로벌 개발협력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수요에 따른 맞춤형 글로벌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별 인프라 구축수준과 향후 여건전망과 글로벌 개발협력 분야를 설정하고, 이러한 개발협력을 위한 사업추진 방식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분야와 사업추진방식은 개도국(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하고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맞춤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국토인프라 계획 등 글로벌 개발협력의 사업화 연계 강화 전략

우선, 글로벌 개발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도국의 국토인프라 계획에서 출발하여, 프로젝트의 기획 및 발굴, 수주마케팅, 엔지니어링,

시공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체계적인 사업화 연계 강화 전략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개도국 국토인프라 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한 글로벌 개발원조의 경우에, 후속 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및 발굴, 타당성 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실제 사업화로 진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개도국 국토인프라 계획지원, 타당성 조사 사업이 실제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토인프라 분야의 개도국 계획지원 등 유무상원조 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국토인프라 분야의 전담조직체제의 정비가 우선 요구된다. 계획지원을 통해, 신규 글로벌 개발협력가능 사업을 기획, 발굴하고, 이에 대한 수주마케팅, 설계엔지니어링, 시공 및 관리운영 등 일련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사업화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에는 여러 가지 역량이 요구되고, 이러한 역량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국토인프라 분야의 기획발굴 단계 및 수주마케팅 단계의 역량 수준과 중요도간의 차이가 큼은 이미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역량과 중요도의 차이에 따라 핵심역량, 우선적 확보역량, 전략적 강화역량, 잠재경쟁우위 역량에 따른 대응체제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역량강화 분야와 기업차원의 역량강화 분야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관협력을 통한 Total Service 개념의 해외 인프라 시장진출 전략의 수립이다. 이는 국토인프라 분야의 글로벌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인프라 분야의 전국단위의 계획수립(개별 단위사업의 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설계, 실시설계)과 시공, 유지관리, 운영과정 등 토탈 서비스 기능의 진출을 도모하여, 고부가가치의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인프라 계획의 수립과 개발사업의 인허가, 인프라 시설의 PM, 자원조달,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및 ODA운영 주체(정부 및 위탁업무 기관), 인프라 공기업, 연구기관 등의 역할이 중요하고, 설계 및 시공의 경우 민간 기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글로벌 개발협력과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진출이 유효한 전략이다. 민관협력은 파트너 간의 신뢰, 명백한 제도적 장치, 민간의 자율성 보장 및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한 협력 연계 체계를 구축 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3) 대규모 개발협력사업을 위한 다각적인 금융활용 전략

(1) 국제개발은행의 증자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용성 강화

세계은행(WB)과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개발금융기관들은 증자를 통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왔다.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도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왔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증자를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형태로 증액, 이 과정에서 선진국의 의결권 비중은 낮추고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의 의결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이 결과, 미국과 일본은 기존의 1, 2위 의결권 순위가 유지되지만 중국은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의결권 순위 3위로 부상하여 이들 국가를 추월하였다. 향후 각국 정부들은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국제 개발금융기관 증자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및 발언권 강화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들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이나 협상 채널을 확보 하려는 움직임은 한층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여, 국제개발금융기관의 증자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활용하는 등 개도국 해외시장개척 및 협상채널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 개발협력자금 등 포괄금융을 통한 국제협력 전략

국토인프라 분야의 글로벌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계획분야의 진출이 중요하지만, 실제 이를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첫째, ODA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발 금융의 확보가 중요하다. ADB는 ODA 자금 수혜 시 비조건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대형 프로젝트 건의 경우 Parallel Co-financing(한 프로젝트에 대해 다양한 재원조달)방식을 추진하기도 한다. 최근 수십억 달러대 프로젝트가 수행되면서 이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ADB 단독 추진이 어려워, PPP 방식, Co-financing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개발금융으로는 세계은행(WB),

대륙은행(ADB, AfDB, IDB, EBRD), 지역은행(서아프리카 개발은행, 동아프리카 개발은행, 남미개발은행 등) 등을 활용한다.

또한 ADB내 PSOD(Private Sector Operation Department)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에 ADB가 Lender 또는 equity Partner로 참여 하기도 한다. 이 경우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투자 유치가 및 Risk 감소 효과를 볼수 있는 바, 이런 방식의 ADB와 협력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ADB 사업은 90% 이상이 수혜국 정부 보증을 동반한 차관사업이지만 PSOD 민자사업 참여 경우 정부 보증없이 Loan이 가능하고, 25% 이하 지분 유지 한도 내에서 Equity투자도 가능하다.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MDBs(다자간개발은행) 및 국제기구에 KTF 지원을 증가하는 방식을 통해 다자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개발 및 국토 개발 등은 개발금융의 기틀 없이는 불가능하며, 국가 간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글로벌 개발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유명무실한 개도국 지역경제공동체의 빈곤퇴치를 위한 가시적 도구로서 인프라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은행의 창출 및 지원이 중요하다.

포괄적 금융전략을 통한 인프라 시장 진출은 다음 4단계로 가능하다.

- ① 제1단계로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수요 파악 및 사업의 발굴, 타당성 조사(개도국 국토 및 경제개발계획 파악, 진출국 투자관련 공무원 초청 연수)를 수행, ② 제2단계로는 다각적인 금융조달 방안 검토다.

진출대상국의 지원 등 협력가능성 검토, ODA 원조, EDCF 등 재정지원 가능성 검토, 국제개발은행의 신탁기금 활용성, 민간의 자금 활용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③ 제3단계로는 금융지원의 분야 및 대상의 설정 및 조정이다. ④ 제4단계는 사업 수행체제의 검토다. 여기에는 사업참여방식의 검토, 운영 주체 등 사업추진체제의 검토 등이 해당된다.

둘째, 다각적인 협조유자의 활성화(프로젝트 규모의 대형화와 투자 개발형 진출 활성화)다. 선진 수출신용기관(ECA), 다자개발은행(MDB) 등을 통한 양자다자간 협조유자는 제한된 재원으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양허성 개발협력 자금인 EDCF 지원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한 협조유자도 활성화하여야 한다. 수출금융 지원 프로젝트의 주변사업(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 건설)을 EDCF로 간접지원(혼합신용)할 경우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진 ECA 및 MDB 등과의 포괄적 협력 체계 구축, 다자기구와의 협조유자 지원 규모 확대, 수출금융의 협조유자, 혼합신용의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 특히 혼합신용(수출금융+EDCF)을 통한 Co-financing은 단독 지원이 어려운 해외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해 지원조건이 양호한 EDCF 자금과 수출자금을 혼합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차주국 수요, 지원절차, 사업구조, 국가 신용도 및 상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기업이 참여하는 개도국의 개발사업에 대해 대외 금융지원

수단을 연계 활용함으로써 공적재원의 가용성을 높이고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지원조건이 양호한 원조자금과 수출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대규모 사업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track record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아울러, 선진공여국 및 신흥공여국과의 개발협력체계 구축하여 선진 ODA 기관들과는 유상원조 중심의 포괄적 협력체제를 적극적으로 마련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참여를 위해 MDB와 공동참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토인프라 분야의 개발협력 연계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인프라 펀드 등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조성 및 활용성 증대, 글로벌 개발협력 사업에서의 수주 마케팅 능력의 제고, 사업수행 체제의 선진화, 국토인프라 분야의 국제협력과 시장진출을 위한 조직 체제 정비, 기획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개발컨설팅 산업기반 조성, 설계·엔지니어링 역량의 강화와 사업화 연계협력체제 강화 등 자금조달, 조직체계, 산업기반조성 등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V. 결론

본고는 국토인프라 분야의 글로벌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발협력연계 시장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한 글로벌 개발환경은 과거의 원조효과성 논의에서 개발효과성으로

그 중점이 이동하였다. 실질적인 개도국과의 파트너로서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대규모 투자비용을 수반하므로 공적개발원조기관 간의 다각적인 협조, 국제개발은행의 활용, 민간자본의 활용을 통한 재원조달과 협조체제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통한 개도국의 경제발전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소득격차 완화 및 빈곤 감축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과거의 무상원조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보다는 EDCF와 국토부의 글로벌인프라 펀드, 해외건설 특화 펀드 등 공공과 민간의 투자자본을 활용하여 무상원조와 결합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글로벌 개발협력을 통한 개발원조 효과성에 기여하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도 부합한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자금으로서의 EDCF와 지식공유사업(KSP), 개별부처의 프로젝트 타당성지원 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행되도록 사업주체간 연계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EDCF의 역할, 기능,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 및 인력기반의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범부처 차원의 콘트롤 타워의 구축과 개발협력 연계사업 타당성과 금융을 연계하는 전문가 양성, 국제개발컨설팅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성일 외(2011), G20시대의 국토인프라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과 시장 진출전략, 국토연구원.

수출입은행. EDCF 가이드북.

수출입은행. 2015년 우리나라 ODA 확정통계.

수출입은행 (2016). 한국의 개발협력. (2016. No. 4)

수출입은행 (2017). 한국의 개발협력. (2016. No. 1)

한국국제협력단 (2009). 국제개발협력. (2009. No. 4)

한국국제협력단 (2016).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해외문헌

OECD. OECD Database - National Accounts.

UN. National Accounts Estimates of Main aggregate.

UN. National Accounts Official Country Data.

World Bank. World data Bank.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이훈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I. ODA와 PPP 연계 의의 및 동향

1. ODA와 PPP 연계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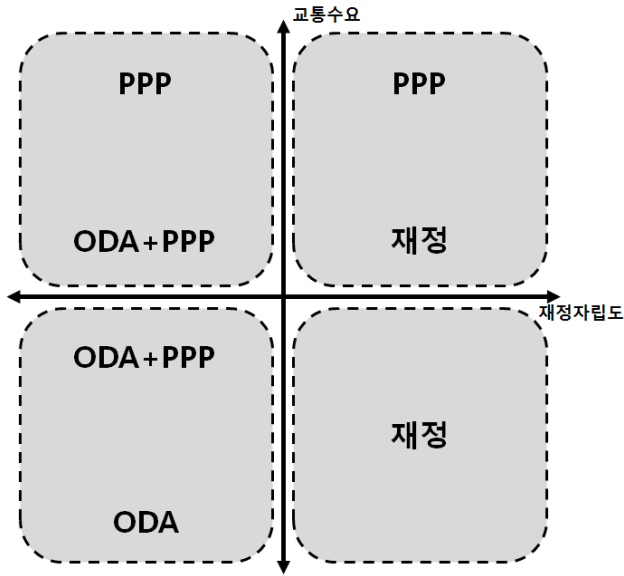
최근 좁은 의미의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은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협력관계를 대상으로 하나, 넓은 의미의 PPP는 정부와 민간부문은 물론 이용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사업에 PPP를 도입함에 따라 수원국 정부를 지원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ODA 사업에 PPP를 연계함으로써 더 많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 ODA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민간자본 유입이 없는 경우 ODA 예산만으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PPP를 접목하여 민간자본을 유입할

수 있다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수요 충족에 필요한 재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어 더 많은 교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 이후에 ODA 예산이 증가하고 확대되었다. 하지만 주요 원조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ODA 규모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 ODA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 개발도상국에 지원할 수 있는 교통 ODA 사업도 마스터플랜이나 타당성조사와 같은 개발조사사업과 도로개량 및 철도차량구매 등과 같은 소규모 교통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개발도상국에서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ODA와 PPP를 연계하여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교통사업은 추진유형에 따라 재정사업, ODA 사업, PPP 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재정사업은 수원국 국가재정으로 추진하고, ODA 사업은 원조기관이 지원하는 원조재원으로 추진하며, PPP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데 이 경우 수원국의 재정자립도와 교통수요정도에 따라 적절한 추진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와 교통수요의 관계를 고려하여 ODA와 PPP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림 1〉 교통수요 및 재정자립도에 따른 해외교통사업 추진유형



자료 : 저자 작성

2. ODA와 PPP 연계 동향

1990년대 이전은 민영화 태동시기로 볼 수 있다. 1990년 이전까지 대부분의 공공사업이 국영으로 운영되었으나 이러한 운영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초래하여 민영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0년대에는 민영화의 기대와 함께 민간자본이 대거 유입되었다.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던 민간부문의 참여규모는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경제위기로 민간부문 참여가 줄어든 이유로 개발도상국, 민간기업, 원조기관 모두

민간부문 참여에 과도한 기대를 걸고 있다가 경제위기라고 하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자, 내재되어 있던 문제가 표출되어 PPP 사업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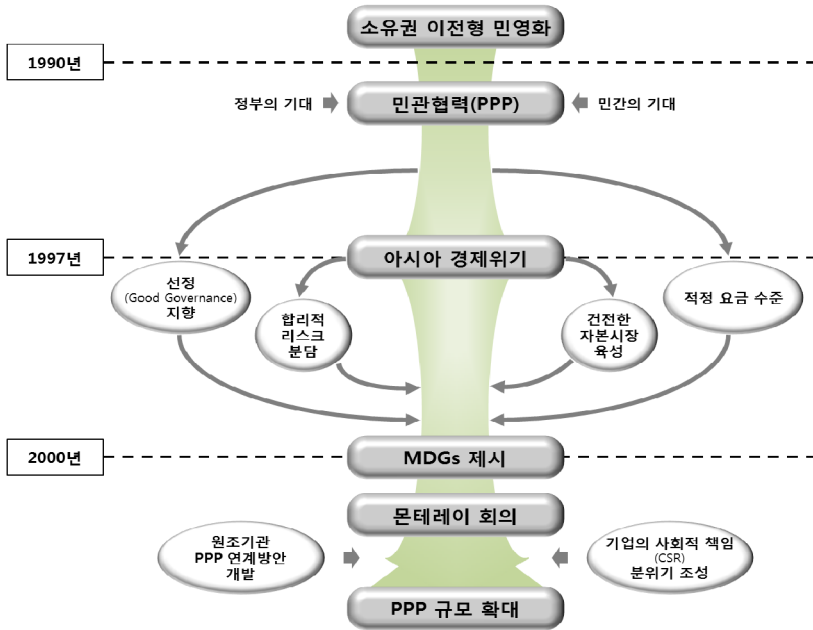
2000년대에 들어와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의제가 대두되었다. 세계은행(World Bank, 이하 WB)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소요규모에 대해 ODA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재원은 10%밖에 되지 않아 ODA이외의 예산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로 민간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2002년 3월 멕시코 몬테레이 회의(Monterrey Conference)를 기점으로 ODA와 PPP를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ODA 예산을 확대함은 물론 개발도상국 자체자금을 동원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인하며, 무역 촉진, 채무삭감, 글로벌 과세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이 모색되었다. 또한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OP(Bottom of Pyramid) 사업 개발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되어 민간부문의 국제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게 되었다.

민간부문을 개발원조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정책기조 덕분에 아시아 경제위기로 침체되었던 민간부문의 투자규모가 2004년을 기점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1997년의 투자규모를 뛰어넘어 2012년에는 1,814억 달러까지 성장하였다. 민간부문의 참여가 증가한 이유는 아시아

경제위기의 문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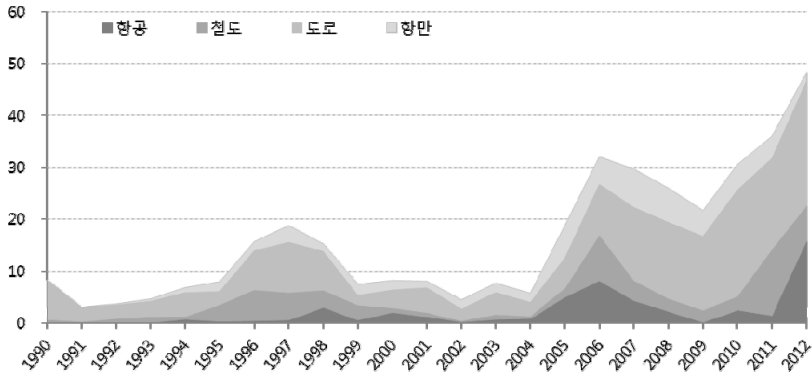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교통분야의 PPP 규모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04년 이후 증가추세로 돌아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로와 철도 비중이 높으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도로와 철도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항만과 공항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경제위기 전후의 가장 큰 차이는 PPP 사업 방식의 차이이다. 경제위기 이전에는 공공시설을 민간부문에 매각하는 것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경제위기 이후 민간부문이 직접 투자하여 건설하고 운영하는 PPP 방식이 증가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림 2〉 인프라 개발을 위한 PPP 변천 경위



〈그림 3〉 교통분야 세부항목 투자규모 추세

(단위 : 10억 달러)



자료: <http://ppi.worldbank.org>

II. ODA와 PPP 연계 의의 및 동향

1. 다자간 개발기구의 ODA와 PPP 연계 정책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은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 인프라 개발을 위한 PPP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ADB는 PPP 사업에 직접 대출 및 지분참여가 가능하며, PRG(Partial Risk Guarantee), PCG(Partial Credit Guarantee) 등의 보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PPP 제도와 정책, 그리고 PPP 사업의 발굴, 추진, 자금조달 등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기술지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ADB는 다양한 부서에서 PPP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역별로 PPP 제도에 대한 기술지문 사업을 수행하여 PPP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투융자나 보증과 같은 직접적인 금융지원도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정치적 위험과 같은 사업위험을 저감시켜 필요 재원을 조달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ADB는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대할 목적으로 여타 원조기구와의 협조융자 체제인 AIFI(Asian Infrastructure Financing Initiative)를 설치하고 금융조달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협조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WB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ODA 투자확대를 위해 WB의 금융 지원과 더불어 선진 원조국의 ODA 뿐만 아니라 민간재원을 통해 WB의 지원 규모를 상회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실현하고 있다. WB는 개발도상국 정부 또는 개발도상국 개발은행 및 개발기관이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에 대출하는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하거나, 개발도상국 정부의 보증 하에 WB가 직접 SPC 법인에 대출을 하기도 한다. 또한 WB는 ODA사업에 민간투자의 위험을 경감시켜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신용 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PRG와 PCG가 이에 해당한다. 더불어 PPP 사업 촉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관련 금융기관에 금융이나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WB의 민간부문기관(Private Sector Arm)으로 일컬어지는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에서는 개발도상국 정부의 개입 없이 개별사업에 직접 지원할 수 있고, PPP 사업에 대한 투융자나 보증 등을 제공하여 PPP 사업의 위험을 완화하여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한다. 이외에도 PPP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PPP 분야에 대한 GET(Global Expert Team)를 출범하여 관련 제도와 정책을 지원하고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2. 주요 원조국 사례 및 시사점

주요 원조국 사례로 미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개발에 대한 민관협력사업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ODA와 PPP 연계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GDA(Global Development Alliances)를 조직하여 해외사업에서의 민관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민관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둘째, ODA와 PPP 연계사업의 선정과정에 민간부문의 의견과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선정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민관협력을 위해 민관연계상담창구를 두어 민간부문의 제안안건을 채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민관정책회의를 개최하거나 수원국 현지에서의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ODA 태스크포스를 개최하는 등 민간부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ODA와 PPP 연계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체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JICA는 ODA와 PPP 연계사업 유형을 주변환경 정비형, PPP 인프라형, 신프론티어형 등으로 유형화하여 ODA와 PPP 연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각 유형별 사업에 대해 ODA 자금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지침화하고 있다.

넷째,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금과 보증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PPP Facility라고 하는 공적기금을 마련하여 민간부문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보증제도를 두어 민간부문이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부담 및 위험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교통 ODA 사업의 PPP 추진 사례 및 교훈

일본 JICA에서 수행한 STAR 고속도로 PPP사업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검토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시설은 특성 상 네트워크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STAR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JICA 지원으로 시행한 MMUSE, MMUTIS,

MMUEN 등의 마스터플랜에 근거하여 중장기 고속도로 추진방안을 검토하였고, STAR 고속도로도 이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둘째, JICA의 ODA 자금을 PPP사업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TAR 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을 JICA의 ODA 예산으로 건설하고 민간 부문이 나머지 구간을 건설한 후 민간부문에 운영권을 넘기고 있다. JICA는 이러한 사업방식을 좋은 모델로 권장하고 있다.

셋째, PPP 사업 추진을 위해 수원국의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또한 민간부문과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공공부문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교통사업의 경우 수원국에서 PPP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도를 정비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JICA는 PPP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BOT(Build-Operate-Transfer)법 제정과 담당자 전문성 양성을 위해 지속적 지원을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필리핀에서 ODA와 PPP를 연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용지확보 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필리핀에서는 용지확보를 위한 예산을 정부 측에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업자가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JICA의 『마닐라 수도권 고속도로 정비 민관협력방안

구축조사』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까지 감안하여 요금수준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로 WB의 자금융자로 이루어진 모잠비크 Biera 철도 사업을 살펴보았다. 이 사업은 다자간 원조기관인 WB의 자금융자와 민간기업의 자금을 활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WB는 모잠비크 경제발전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민간부문의 자금과 기술을 유인하여 철도사업을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WB에서 지원한 자금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기간에 엄격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자금이 당초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자금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금관리기관의 역량강화를 시행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도 교훈이라 할 수 있다.

III. 우리나라 ODA와 PPP 연계의 현황 및 과제

1. 국내 ODA 추진 현황

국내 ODA 규모는 2010년 OECD/DAC 가입으로 약 16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은 2012년 0.14%로 과거에 비해 서서히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규모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10〉

2008~2012년 한국의 ODA 지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ODA	802.3	816.0	1,173.8	1,324.6	1,597.5
양자간원조	539.2	581.1	900.6	989.6	1,183.2
무상원조	368.7	367.0	573.9	575.0	714.9
유상원조	170.6	214.1	326.7	414.6	468.3
다자간원조	263.1	234.9	273.2	335.0	414.3
ODA/GNI(%)	0.09	0.1	0.12	0.12	0.14

자료: OECD Stats, EDCF 통계 DB / 자료 업데이트 : 2014. 1. 3.

OECD/DAC 가입 이후 국내 ODA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ODA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원조하기에는 현행 ODA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교통분야에 대한 원조특징을 보면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은 마스터플랜이나 타당성조사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은 도로 개보수사업, 철도 차량지원사업 등 소규모 교통사업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한정된 ODA 재원으로 다양한 국가에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ODA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 우리나라는 막대한 재원을 소요하지 않고 원조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한국형 ODA 교통사업을 개발하고 이에 치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형 ODA 사업은 수원국 현지 상황에 부합하여 큰 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지만, 아프리카와

같이 교통인프라가 거의 전무한 경우 한국형 ODA 사업 시행에 따른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연계가 미흡하여 사업 간에 분절화 및 중복 투자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상원조는 KOICA에서 담당하고 유상원조는 EDCF에서 담당하고 있다. KOICA에서 시행하는 마스터플랜이나 타당성조사의 무상원조 결과와 연계하여 EDCF의 유상원조를 시행하는 것이 원조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국내 원조체계에서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별도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 상호간의 연계효과가 미흡하고, 무상사업과 유상사업의 연계사업을 선정하고 시행하는 일련의 사업추진체계가 부족하여 정책일관성과 사업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내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민간부문과의 연계 측면에서 본다면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체계화하여 민간부문과 연계하는 것이 보다 큰 원조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상호간 연계가 미흡한 관계로 원조 효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ODA 자금의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승인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KOICA나 EDCF 모두 사업이 발굴되고 신청되어 정부 간의 협정이 체결되어 자금이 투입되기까지 복잡한 절차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적기에 자금이 투입되지 못하여 원조효과가 저하되고 특히 교통사업의 경우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사업비가 상승하여 예산부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민간부문과 연계하여 ODA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민간부문 입장에서는 적기에 자금투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금투입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탄력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DAC에 가입한 이후 ODA 추진체계가 서서히 틀을 갖추어 가고 있지만 원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민간부문의 해외사업 추진 현황

민간부문의 해외건설 수주금액은 2010년 71,579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 민간부문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외실적 감소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낮다는 점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표 11〉 민간부문 해외건설 실적 추이
(단위 : 건,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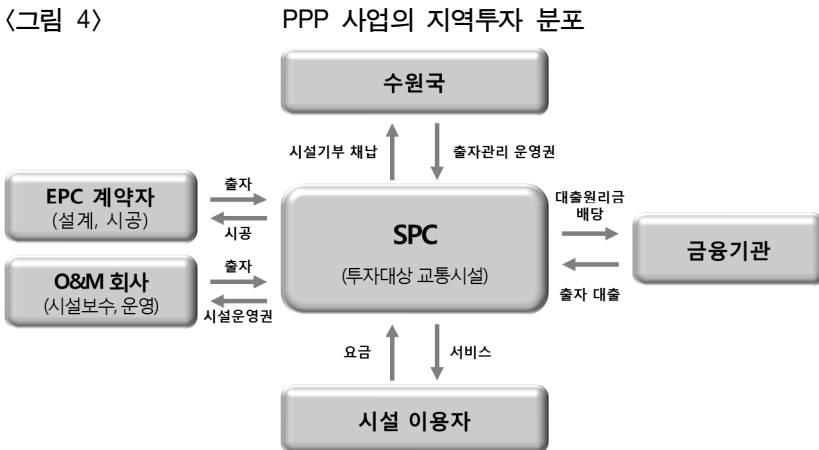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건수	641	559	593	625	620	-0.8
금액	47,640	49,148	71,579	59,144	64,881	8.0

자료: 해외건설협회 내부자료.

공종별로는 산업설비 수주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수주금액의 6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철도의 수주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고속철도의 기술을 앞세워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성과라고 판단된다.

민간부문의 해외교통사업의 진행단계는 일반적으로 사업사전평가 단계, 사업화 단계, 사업수행 단계, 운영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간부문은 SPC 설립 후 EPC 계약자 및 O&M 회사와 계약을 통해 시공 및 운영을 하고, 요금 수익으로 원리금 상환하며, 일정기간 운영 후 시설을 수원국 정부에 채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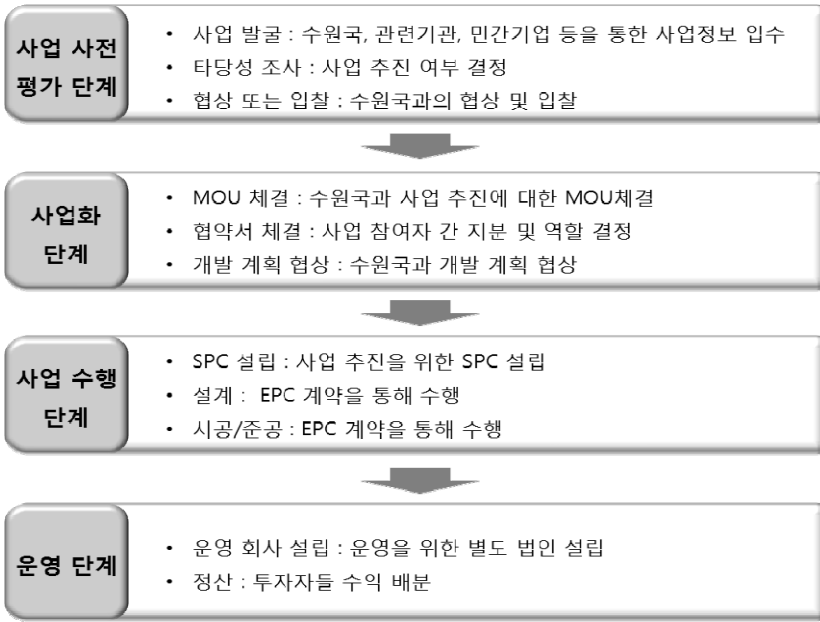
〈그림 4〉



자료: 김종섭(2013)

〈그림 5〉

민간부문의 해외사업 추진 절차



자료: 저자 작성

민간부문의 해외사업 진출은 주로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용역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KOICA나 EDCF 사업을 수주하여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최근 ADB나 WB와 같은 다자간 금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수주하고 있으나 경험과 실적 부족으로 사업수주는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에는 해외 현지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수주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사업의 경험과 실적이 축적되면서 해외 현지에서 수주하는 사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부문이 해외사업 추진 시 부딪힐 수 있는 애로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현지 사업을 발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들 수 있다. 국내 민간부문은 현지 정보와 네트워크가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사업을 발굴하는데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을 발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무효화되는 경우 민간부문의 해외사업 추진동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둘째, 해외 현지 법·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PPP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민간부문의 사업추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법·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 도중 해외 현지의 사업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사업 추진이 무효화 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이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감수해야 하는 위험부담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해외 현지에서 민간부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 문제이다. 민간부문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국내금융기관, 국제상업은행, 다자간개발은행, 현지금융 기관에서 조달된다. 국내금융기관과 국제상업은행은 사업추진에서 발생하는 위험부담을 떠안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국내 민간부문이 국내금융기관과 국제상업은행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현지금융기관도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에서의 사업추진 시 다자간 개발은행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자간개발은행의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일 수 있다. 여하튼 민간부문에서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ODA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해외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문제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세금과 회계가 우리나라와는 상이하여 해외사업 진출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민간부문은 개발도상국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개발도상국에서 부과하는 세금 규정이나 방침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국제회계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어 민간부문에는 사업 리스크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 외에도 토지보상, 인허가지연, 시공민원 등 해외 현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 정부지원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간부문의 해외사업 진출을 위해 KOICA의 개발조사사업,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 글로벌인프라펀드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추진사업에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충분한 자금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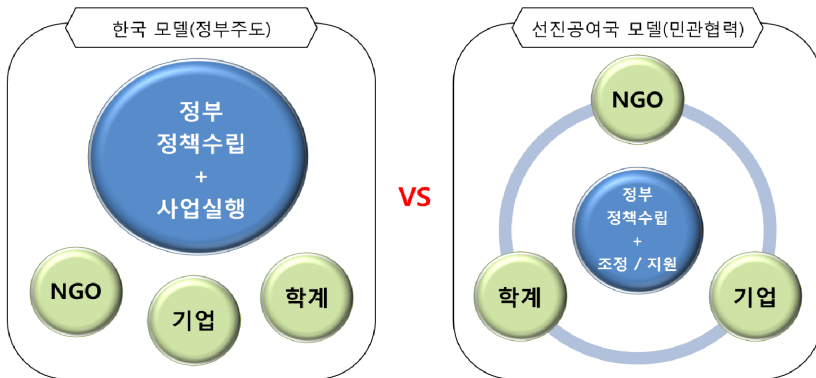
3. 우리나라 ODA와 PPP 연계 현황 및 과제

ODA와 PPP 연계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나라도 민관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0년에 발표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는 효율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 확대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개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민관협력 사업예산을 2010년 90억 원 수준에서 2015년 9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KOICA는 2010년에 「민관협력사업 시행세부 지침」을 작성하고 민관협력 사업을 비정부기구(Non Government Organization, 이하 NGO) 지원사업과 PPP 사업으로 구분하고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의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과 참여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

PPP 예산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PPP 수행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는 PPP가 활성화되기에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갖는다. 정부 주도의 현행 체제에서는 정부가 ODA 사업을 발굴하여 입찰을 통해 사업을 발주하게 되는데, 민간부문은 정부가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민간부문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정보력을

활용하여 ODA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선진공여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사업시행은 원조기관 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민간부문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원조기관은 사업추진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민간부문과의 연계가 취약하여 이것이 ODA와 PPP 연계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6〉 우리나라와 선진공여국의 민관협력 수행구조



자료: 기획재정부(2011)

국가재정운영계획 ODA 분야 보고서에서는 ODA와 PPP 연계와 관련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PPP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한다. 정부는 PPP 예산을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사업추진을 뒷받침하는 PPP에 대한 법·제도 규정이 아직 미비하다. 둘째,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정책방향성이 미흡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방안도

부족하여 PPP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PPP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지적한다. 원조기관이나 민간부문에서 PPP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ODA와 PPP 연계 방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민자사업 차관제도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EDCF는 2007년 개발도상국 인프라 건설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민자사업 차관(Public-Private Partnership Loan)을 도입하였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IV. 교통분야 ODA와 PPP 연계사업의 추진전략

1. 교통 ODA와 PPP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추진전략

교통분야에서 ODA와 PPP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SWOT 분석을 시행하였다. 내부환경의 강점과 약점, 외부환경의 기회와 위협을 분석하였으며 교통분야 ODA와 PPP 연계사업의 추진전략 도출을 위한 분석결과로 활용하였다.

〈그림 7〉 교통 ODA와 PPP 연계 추진전략 도출을 위한 SWOT 분석

내 부 환 경	S (Strength)	W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을 이룩한 경험 보유 • 교통인프라와 고도화된 지식기술 보유 • DAC가입에 따른 ODA 자금 증대 • 민간 부분의 해외시장 진출 관심 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민간 사업 발굴 능력 취약 • 자금조달 능력 부족 • 해외 사업 경험 부족 • 해외 민관사업추진을 위한 법·제도 미흡
외 부 환 경	O (Opportunity)	T (The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PPP시장의 지속적 성장 • 한국 성장 모델에 대한 관심 증대 • 소프트 교통인프라 정책의 중요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국 민관사업 법제도 정비 미비 • 수주 경쟁 심화 • 선진 공여국의 해외 민관 사업 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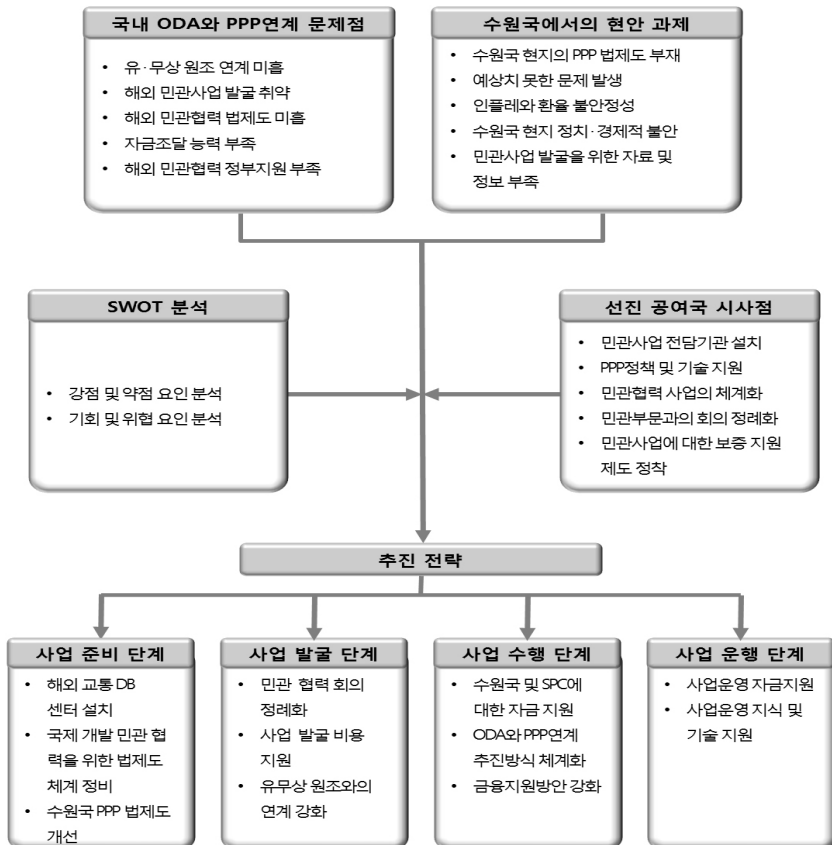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국내 현안과제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 민관협력사업의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해외 민관협력사업의 발굴 취약, 해외 민관협력 법·제도 미흡, 자금조달 능력부족, 해외 민관협력에 대한 정부지원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수원국 현안과제로 수원국 현지의 PPP 법·제도 부재 혹은 미흡, 예상하지 못한 문제 발생, 인플레이와 환율 불안정성, 수원국 현지 정치 및 경제 불안, 해외 민관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교통분야에서 ODA와 PPP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안되어야 한다.

국내 및 수원국 현안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도출함과 동시에 SWOT 분석결과와 선진 공여국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교통

ODA와 PPP의 연계 추진방안 도출에 활용하였다. SWOT 분석결과에서는 대내외 강점과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약점과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선진 공여국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현황에 부합하는 추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림 8〉 교통 ODA와 PPP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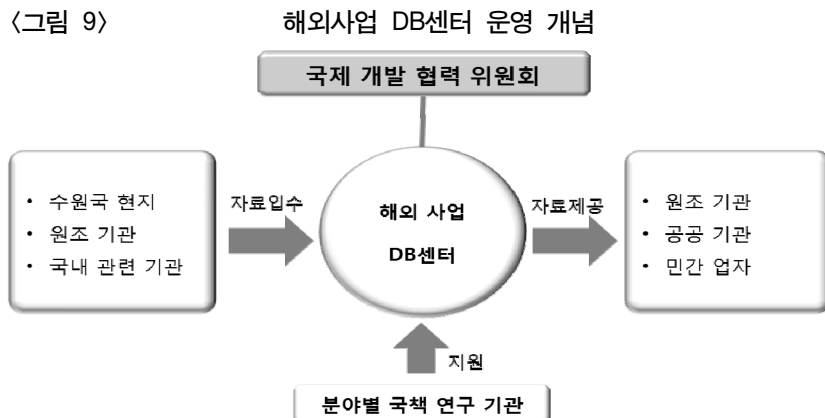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사업단계별 추진전략

(1) 사업준비단계

첫째, 해외사업 교통DB센터 설치를 제안한다. ODA와 PPP의 연계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현지 국가의 자료 및 정보 입수가 용이하지 않아, ODA와 PPP의 연계사업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급하게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지 국가, 특히 수원국의 교통인프라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 가공하여 자료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에 시의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ODA와 PPP의 연계사업 발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중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타당성조사 등의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



자료: 저자 작성

둘째, 해외 PPP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국제개발에서 민관협력이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PPP 확대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제도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ODA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방안에서 PPP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2010년에는 「민관협력사업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PPP 사업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PPP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민관협력사업 세부지침」에서 PPP 사업을 KOICA 내부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적 효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뿐 아니라 PPP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범위와 사업비 지원 규모도 제한을 받는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PPP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KOICA의 세부시행지침을 상위법에 두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원조기관과 정부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관계기관 및 관계부처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수원국 PPP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은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여 교통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것이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발도상국에서는 PPP 사업을 활용하여 교통인프라 구축을 꾀하고 있으나 PPP 사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PPP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SP는 우리나라의 PPP 지식과 경험을 수원국에

전수하여 수원국 자체의 PPP 법·제도를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KOICA가 시행하고 있는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PPP 법·제도 정비 및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2) 사업발굴단계

첫째, 민관협력 협의회 운영을 통한 PPP 사업 선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KOICA나 EDCF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ODA 사업은 수원국의 요청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사업선정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의견이나 제안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추진할 수 있는 PPP 사업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의견이나 제안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창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협의회 설치를 제안한다.

둘째, PPP 사업 발굴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민간부문에서 수원국 현지의 PPP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재무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부문에서는 특정사업이 PPP 사업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조사와 같은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 PPP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민간부문에서 PPP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비용을 ODA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PPP 사업의 발굴 역량은 증대되고 민간부문의 참여기회는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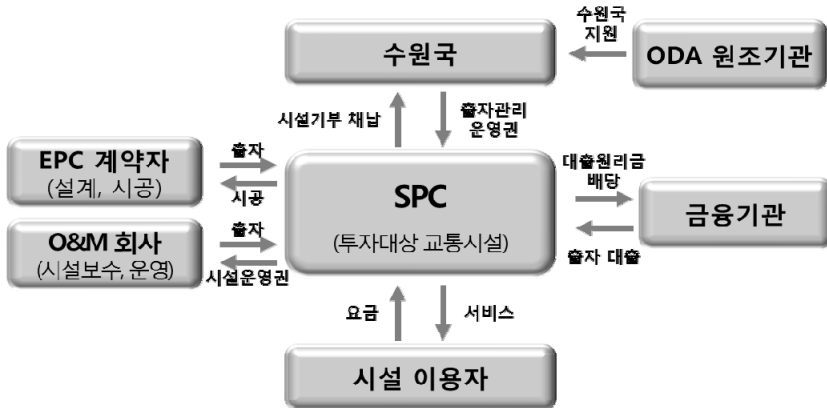
셋째, 유무상 원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유무상 원조분절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무상 원조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히 교통인프라와 같이 기술협력, 무상원조, 유상원조가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하는 사업은 유무상 원조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원조효과를 극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PPP 사업도 KOICA에서 추진하는 PPP 사업과 EDCF에서 추진하는 민자사업차관제도가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어 유무상 원조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KOICA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조사사업 중 PPP 사업 부문에 특화된 타당성조사 등을 KOICA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타당성조사 결과 PPP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사업은 EDCF 차관으로 지원하여 민간부문과의 협력관계를 조성한다면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연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PPP 사업의 후보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을 대상으로 KOICA가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EDCF 자금이 지원된다면 민간부문의 해외사업 진출 기회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업수행단계

첫째, 수원국 및 SPC에 대한 ODA 자금지원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수원국 정부에 대한 지원방법은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EDCF와 같은 원조기관이 수원국 정부에 ODA 자금을 제공하고 수원국 정부는 이 재원을 PPP 사업의 건설보조금이나 이주보상비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투자비의 일부를 수원국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재무성 다소 부족한 사업도 이러한 방식으로 PPP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SPC에 대한 지원방법은 EDCF 등의 ODA 자금을 이용하여 PPP 사업의 SPC에 직접 출자하거나 대출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7년 PPP 차관을 도입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SPC에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추진 사례가 없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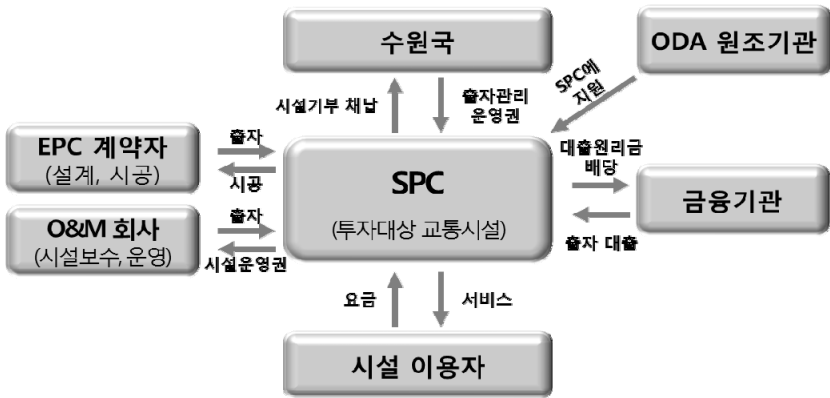
〈그림 10〉 수원국 정부에 대한 ODA 자금지원 개념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SPC에 대한 ODA 자금지원 개념도



자료: 저자 작성

둘째, ODA와 PPP 연계 추진방식을 체계화하여 지원해야 한다. 교통인프라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시설은 수요가 많더라도 투자비가 막대하여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경우 대규모 사업 중 일부를 ODA 자금으로 추진한다면 사업 수익성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ODA 자금을 투입하여 PPP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추진방식을 체계화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금융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부문이 독자적으로 해외 PPP 사업을 발굴하고 금융을 조달하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해외 PPP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떠안게 되는 위험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ODA와 PPP를 연계한 복합개발금융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민간부문이 해외사업 진출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금융조달이다. 그만큼 금융조달 방안이 민간부문의 해외사업 참여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금융 지원방안을 강화하여 민간부문의 해외사업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사업운영단계

첫째, 사업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교통사업의 경우 교통수요가 사업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시행자의 이러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운영수익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하 MRG)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실제 교통수요가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수원국 정부가 부족분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원국 정부가 MRG를 보전할 능력이 없을 경우 수원국 정부는 ODA 자금을 요청하여 이 재원으로 MRG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업운영 지식 및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운영단계에서 교통인프라의 운영 지식 및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ODA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SPC에서 수원국 측에 교통인프라 운영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을 전수하지만 SPC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ODA 사업을 통해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수원국 측에 전수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ODA 자금으로 전문가를 파견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ODA 자금과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접목하여 수원국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VI. 마치면서

국제사회에서 개발원조에서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방안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개발협력사업에 민간부문을 참여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ODA와 PPP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어 ODA와 PPP의 연계사업을 활성화하여 ODA 원조목표를 극대화하고 민간부문의 해외사업 진출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원고에서는 교통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ODA와 PPP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이론적으로는 ODA와 PPP를 연계함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크지만 실제 ODA와 PPP를 연계방안을 적용함에 있어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민간부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조달 방안은 개발도상국 진출에 있어 항상 걸림돌이 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또한 수원국 현지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개발도상국 진출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ODA와 PPP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방안을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가급적 빠르게 개선하여 ODA와 PPP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로 KOICA의 개발조사사업에 지원하는 자금의 일부는 ODA와 PPP의 연계사업을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시행해야 한다. KOICA의 개발조사사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에 ODA와 PPP의 연계사업 발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큰 어려움 없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KOICA의 사업이 수원국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되었는데 이제는 민간부문에서 선제적으로 ODA와 PPP의 연계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ODA 사업 선정 과정에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ODA와 PPP의 연계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개선이 필요하다. 본 원고의 추진전략에서도 제시하였지만 민관협력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의견을 상호교환하여 적절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해외 현지에서 PPP 사업에 대한 정보와 PPP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는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에서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ODA와 PPP의 연계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 KOICA에서 지원하는 마스터플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ODA 자금을 활용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유기적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전보다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협력관계가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무상원조로 추진된 개발조사사업의 결과가 유상원조로 이어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KOICA와 EDCF의 유기적 연계방안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해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사업 DB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본문에서도 설명하였지만 관련 자료가 분산되어 있어 자료 획득이 용이하지 않고 특히 개발도상국은 특성상 자료가 부재하거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 구축과 정보 제공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해외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실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곽재성(2012), 「국제개발과 민관협력, 이슈와 정책제언」, 『국제개발협력』, No.1.
- 국토연구원(2011), 『G20시대의 국토인프라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과 시장진출전략』.
-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영 ODA분야 작업반(2011), 『2011~2015년 국가 재정운용계획: ODA분야 보고서』.
- 김중섭 외(2013), 『개발도상국에서의 개발협력 효과증진을 위한 민관협력(PPP)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수출입은행.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a), 『ODA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발전방향 모색: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 _____(2011b),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 _____(2011c),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 문진수 외(2011), 『철도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 손혁상(2012), 「기후변화 대응과 민관협력사업(PPP): 미국 USAID의 GDA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No.1.
- 송병록(2103), 『해외 개발금융의 정책적 개선방안』, 글로벌 개발협력 역량강화 세미나 발표자료.
- 전시덕(2104), 『해외 PPP사업 및 EDCF를 활용한 복합금융 활성화 방안』, 제7차 해외개발금융포럼 발표자료.
- 오주현(2012), 『민관협력사업과 시민사회(CSO)의 참여』, 국제개발협력.
- 우상현(2103), 『해외 프로젝트에서의 민간금융기관의 역할』, 글로벌 개발협력 역량강화 세미나 발표자료.
- 이훈기 외(2010), 『ASEAN 국가 교통인프라 수준 진단을 통한 효과적 ODA사업 추진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 이훈기 외(2013), 『교통분야 종합평가, 캄보디아 3번국도 개보수 사업, 필리핀 GSO 도로확장 및 긴급준설사업 사후평가』, 한국수출입은행.

최민경(2008), 『우리나라 개발원조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개발연구원(2010), 『민간투자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한국국제협력단(2008),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수출입은행(2013),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투자 및
 개발차관 활용을 위한 연구』.
 ____ (2011), 『국제개발협력, 제4호 “PPP Approach in Development
 Aid”』.
 ____ (2012), 『국제개발협력, 제1호』.
 한국수출입은행 보도자료(2013. 9. 10), 「베트남 호치민市 외곽순환도로
 EDCF로 만든다」.
 ____ (2012. 6. 13), 「수출입銀, 우리 기업이 뚫는 유라시아 해저터널사
 업에 2억8천만달러 제공」.
 ____ (2011. 5. 2), 「수은, 우리기업 최초의 투자개발형 해외 수력발전
 사업에 PF금융 지원」.
 해외건설산업연구원 외(2008), 『국투자개발형 해외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한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

해외문헌

經濟産業省(2010), PPP政策タスクフォース報告書.
 ADB(2008a), Public-Private Partnership Handbook.
 ____ (2008b), Strategy 2020: The Long-term Strategic Framework
 of The Asian Development Bank 2008-2020.
 ____ (2012a), Classification of ADB Assistance for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1998-2010).
 ____ (2012b), Public-Private Partnerhips Operational Plan 2012-
 2020.
 AfDB(2011), Handbook on Infrastructure Statistics.
 ____ (2012), PrivateSector Deveopment Strategy of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2012-2017.
 Fay, M. & Yepes, T.(2003), “Investing in Infrastructure: What
 is needed from 2000 to 2010?”, WB.
 OECD(2006), Promoting Private Investment for Development:
 The Role of ODA.

OECD(2010), The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JICA(2005a), 途上国の開発事業における官民パートナーシップ導入支援に関する基礎研究.

_____(2005b), PPP(Public-Private Partnership)プロジェクト研究.

WB(1997), Toolkit for Private Participation in Water and Sanitation.

WB(2011), WBG & PPP: Thoughts for the G20(Draft)

웹사이트

공적개발원조, <http://www.odakorea.or.kr>(2014. 11)

미국 국제개발청(USAID), <http://www.usaid.gov>(2014. 11)

영국 국제개발부(DFID), <https://www.gov.uk>(2014. 11)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http://www.jica.go.jp>(2014. 11)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2014. 11)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2014. 11)

한국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2014. 11)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2014. 11)

KOICA, <http://www.koica.go.kr>(2014. 11)

WB, <http://ppi.worldbank.org>(2014. 11)

EDCF

II. 한국의 개발협력

개도국 민간부문개발 증진을 위한 국별 지원 방안과 적용
임소영 산업연구원 글로벌전략연구단

양허성 차관원조의 중장기 발전방안
박복영, 권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국제학연구원

개도국 민간부문개발 증진을 위한 국별 지원 방안과 적용¹⁾

임소영

산업연구원 글로벌전략연구단

1. 개도국 민간부문개발의 의의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개도국 민간부문의 중요성이 2000년대 이후 개최된 다양한 국제회의를 통해 주목받고 민간부문의 개발협력에 대한 참여가 주요 이슈로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이 개발협력의 주요 행위자로 급부상하고 민간부문의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여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간 개발협력을 위한 논의에서 민간부문의 역할 및 중요성은 주로 공급자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으나, 개도국 자립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개도국의 민간부문 개발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경제성장 및 개발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1) 저자의 산업연구원 보고서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 수립 방안 연구(2016)’의 내용 일부를 발췌한 원고임을 밝힘.

한편,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촉진하고 생산과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발전에 기여한다(OECD, 2015). 특히 전 세계 일자리의 약 90%를 제공하는 민간부문이 빈곤감소와 빈곤구조 개선을 위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다(OECD, 2015). 이에 전 세계 공여국들은 개도국 민간부문의 효과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지 기업활동에 필요한 법·제도 및 인프라의 구축, 비즈니스 환경개선 등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²⁾는 이와 같은 개도국의 민간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을 “개도국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현지 민간부문의 투자환경과 생산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제도, 시장기능 및 기업자원을 다루는 개발협력(OECD, 2016)”이라 정의하였다. OECD DAC 차원에서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때 DAC는 민간부문개발 지원에 관한 개발협력 지침서를 승인, 공여국들이 동의한 민간부문개발 지원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에는 민간부문개발 수행에 관한 기관 차원의 인식 제고, 현지 금융 시스템 등 현지 시스템의 활용, 현지 민간부문의 제약과 수요에 관한 면밀한 진단에 근거한 국별 전략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의 최소화, 기업 네트워크의 생성과 강화, 환경 및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원 제공, 현지 관습 및 문화적 성향 존중 등이 이에

2)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해당된다(OECD, 1995).

주로 빈곤층 생계의 직접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민간을 직접 지원하는 초기의 민간부문개발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민간부문의 발전을 위한 여건조성 등 민간부문이 직간접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도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 정책개발, 제도 및 능력배양 등 투자 및 기업환경 개선 사업의 개발 효과성이 더 크며, 따라서 제도 및 정책 변화, 시장접근성 개선과 같은 시스템 변화의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Schulpen 외, 2001; OECD, 2004).

공여기관들은 각자의 민간부문개발 정책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공유하고 개선하고자 각자의 경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업개발을 위한 공여위원회(DCED)³⁾’를 1979년에 설립하였다. 양자 공여기관, UN, 세계은행그룹 및 국제개발재단 등으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실제 지원 결과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고 실증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하는 지침과 표준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즉, DCED는 회원들 간 경험 공유와 학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며,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공통의 입장과 접근법을 취하도록 돕는다.

DCED 회원들이 보여주는 민간부문개발의 가장 보편적인 추세도 인프라, 근로자 숙련도 개선, 경제개혁 및 거버넌스 증진에 초점을

3) Donor Committee for Enterprise Development

맞춘 기업환경 조성에 있다. 이들 중 특히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행정 및 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관련 부처의 역량강화, 공공 재정관리 강화, 세금징수 개선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이 빈곤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빈곤층 친화적 시장 개발과 중소기업개발도 DCED 회원들의 주요 민간부문개발 정책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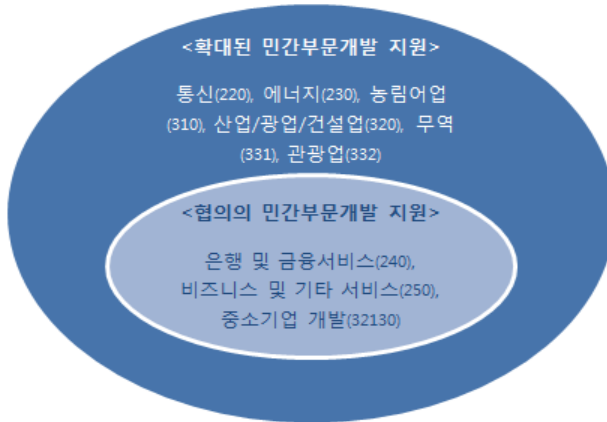
II.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

OECD DAC 회원국의 통계시스템(CRS)⁴⁾은 민간부문개발 지원 실적을 별도로 구분하여 산정하지 않고 민간부문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매우 제한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정도이다. 예컨대, 은행 및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 중소기업(SME) 개발 등 전체 공적개발원조(ODA)⁵⁾ 내 지원 비중이 매우 작은 몇몇 섹터가 민간부문의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한편, 민간부문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활동까지 아우르게 되면 통신, 에너지, 농림어업, 산업/광업/건설업, 무역, 관광업 등 보다 광범위한 사업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민간부문의 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만을 고려한 보수적인 관점인 전자를 협의의 민간부문개발로, 보다 더 광범위한 민간부문개발 활동을 포함하는 후자를 확대된 민간부문개발로 보고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을 살펴 보았다.

4) Creditor Reporting System

5)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그림 1〉 OECD DAC CRS 원조목적코드를 기준으로 하는
민간부문개발 지원사업 범위



출처 : 임소영 외(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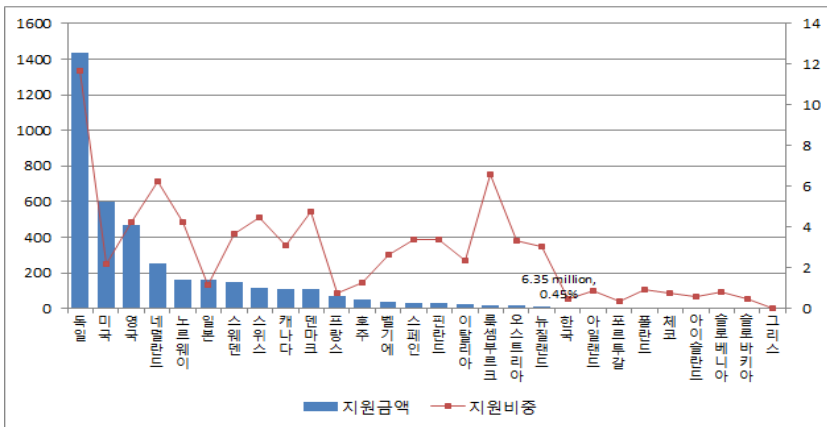
* () 안의 숫자는 CRS 원조목적코드를 의미함.

2012 - 2014년 간 OECD DAC 회원국들의 개도국 민간부문개발을 위해 지출한 지원규모는 협회의 민간부문개발의 경우 연평균 총 38억 7,400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는 전체 ODA의 약 3.7%에 해당된다. 확대된 민간부문개발 지원액은 이의 약 4배에 달하는 연평균 총 154억 7,900만 달러(전체 ODA의 약 14.6%)이다. 확대된 민간부문개발의 전체 실적 중 농림어업과 에너지 섹터에서 각각 약 30%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은행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상당 수준(약 14%)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간부문개발 지원의 절대 규모와 상대적 비중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여국이 독일이다. 특히 협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에서 독일은 더욱 두드러진 실적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독일이 은행 및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중소기업 개발 부문에서 다른 공여국들보다 훨씬 큰 규모의 지원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독일투자개발공사(DEG)⁶⁾와 같은 개발금융기관(DFI)⁷⁾과 지분투자⁸⁾라는 지원수단의 적극적인 활용이 있었다. 독일은 특히 은행 및 금융 서비스와 중소기업 개발 부문에서 지분투자 형태의 지원을 비중 있게 실시하였다. 실제로 독일이 2014년 은행 및 금융 서비스와 중소기업 개발 부문에 지출한 약 19억 달러 중 약 5억 8,480만 달러(약 30%)가 지분투자에 의해 지원되었으며, 이들 중 상당 부분이 DEG를 통해 지출되었다.

〈그림 2〉 2012-2014년간 OECD DAC 회원국의 협의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
(지출액, 백만 달러)



출처 : OECD DAC CRS 데이터를 활용한 임소영 외(2016)

* 은행 및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중소기업 개발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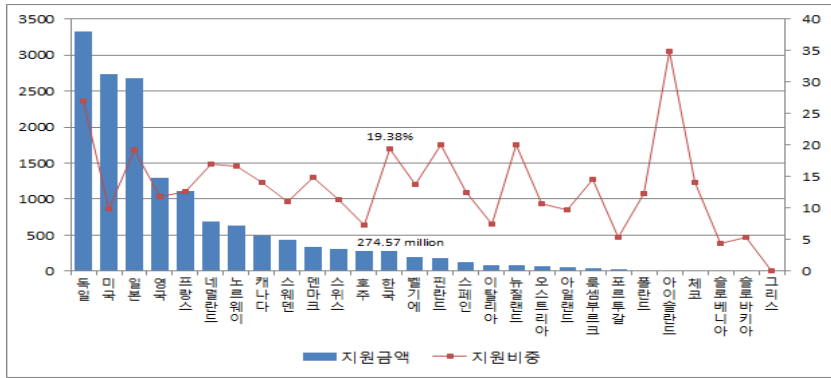
** 한국은 28개국 중 20위

6) Deutsche Investitions-und Entwicklungsgesellschaft

7)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

8) ODA 수단으로서 지분투자를 적극 활용하는 주요 국가는 독일, 영국, 노르웨이가 있으며,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 주요 공여국인 미국과 일본은 지분투자 수단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음. 우리나라도 지분투자의 방법으로 ODA를 제공하는 경우가 전무함.

〈그림 3〉 2012-2014년간 OECD DAC 회원국의 확대된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
(지출액,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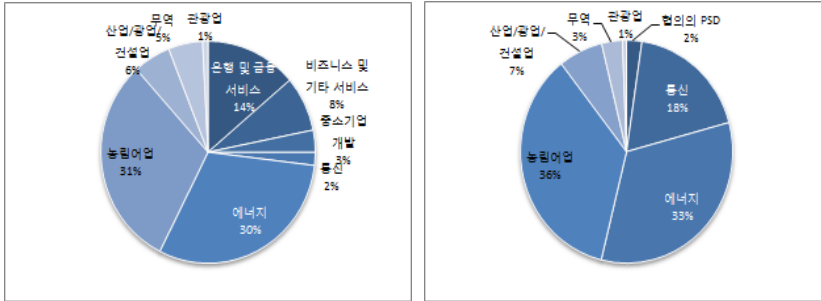
출처 : OECD DAC CRS 데이터를 활용한 임소영 외(2016)

* 은행 및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중소기업 개발, 통신, 에너지, 농림어업, 산업/광업/건설업, 무역, 관광업 섹터

** 한국은 28개국 중 13위

반면, 한국은 협의의 민간부문개발 지원에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여준다. 전체 확대된 민간부문개발 지원 실적 중 약 2% 정도만 은행 및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중소기업 개발에 할당되어, 동 분야들에 대해 25%의 지원 실적을 나타낸 DAC 회원국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인프라 개발 중심으로 지원하는 한국 ODA의 추세가 부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2012-2014년간 OECD DAC 회원국(좌)과 한국(우)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지출액의 섹터별 분포 비교(2014년 고정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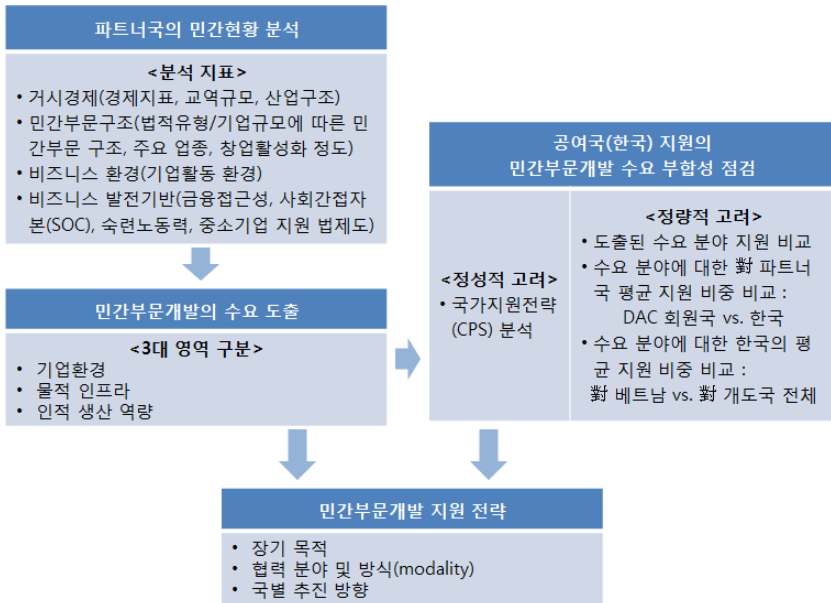


출처 : OECD DAC CRS 데이터를 활용한 임소영 외(2016)

III. 국별 지원 전략 프레임워크

모든 국가들은 각기 다른 발전단계와 기업환경 등 민간부문 발전에 관한 다양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OECD DAC(1995)이 민간부문개발 지원에 관한 지침에서 각국의 면밀한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한 국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개도국 민간부문개발 지원이 가능하려면 국가 여건과 역량에 부합하는 국별 맞춤형 접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국가 단위의 민간부문개발 전략 수립 프레임워크를 구상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단위의 민간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민간부문개발의 수요를 도출하고 공여국 입장에서의 지원 부합성을 점검한 후 지원 전략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별 지원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림 5〉 국별 민간부문개발 지원 전략 수립 프레임워크



출처 : 임소영 외(2016)

먼저 각국의 민간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 때 기준이 되는 분석지표로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민간부문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한 기준을 참고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의 거시경제, 민간부문 구조, 비즈니스 환경, 비즈니스 발전기반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업 환경, 물적 인프라, 인적 생산역량의 3대 영역으로 구분되는 민간부문개발의 수요를 도출한다.

이 때 도출된 민간부문개발 분야에 대해 공여국의 지원이 일관되게 이루어졌는지, 수요에 부합했는지를 점검하여 공여국의 지원방향을

조정한다. 국가협력전략(CPS)에서 규정된 중점지원분야를 검토하는 정성적인 점검과 함께 각 분야에 대한 공여국 지원 비중을 비교하는 정량적 점검을 함께 실시한다. 정량적 점검의 비교는 크게 두 가지 방법론으로 가능하다. 즉, 파트너 국가에 대한 전체 지원 금액 중 각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DAC 회원국들의 동일한 비중과 비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 분야의 지원 비중을 파트너 국가와 개도국 전체 지원에 대해 비교한다. 예컨대, 베트남의 수요 분야로서 에너지 분야가 도출된 경우, DAC 회원국과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전체 지원 중 에너지 분야 지원 비중을 비교하고, 또한 한국의 전체 지원 중 에너지 분야 지원 비중을 베트남 지원의 경우와 개도국 전체 지원의 경우로 구분하여 비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별 민간부문개발 지원 전략을 제시한다. 각 국가의 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요구되는 민간부문개발의 장기 목적을 설정한 후, 한국과의 협력 분야와 방식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국별 민간부문개발 추진방향과 유의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지원 전략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IV. 국별 민간부문개발 지원 방향 - 베트남

1. 베트남 민간부문 현황 및 수요

베트남은 최근 민간부문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경험하면서 국내 민간기업 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특히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가세가 뚜렷하여, 2016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13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베트남 수출의 약 71%를 차지하여 외국인직접투자와 대외무역 중심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⁹⁾ 그러나 베트남 민간부문은 국내 영세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한계를 보이며 민간부문의 GDP 기여비중도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주요 기업환경 결정요인 중에서는 창업여건, 전기접근성, 투자자보호 부문이 매우 열악하다. 창업환경에 대해서는 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금융, 정부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이 매우 취약하다. 전기 접근성 차원에서는 전력공급이 불안정하고 설치비용이 높다는 점이 장애요인이다. 투자자보호 부문에서는 합작 투자자 법정분쟁 시 미흡한 보호장치와 복잡한 세무규정, 채무자 파산 시 채권회수의 어려움 등이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의 취약점으로 꼽힌다.

9) KOTRA 이규선 실장 발표자료, “주력시장으로 부상하는 베트남 시장 동향 및 진출 전략”, 「2016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성과 공유세미나」(2016.9.28.).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는 현지 공급 품질, 경쟁 환경, 권한위임 의지, 마케팅 등과 관련된 비즈니스 성숙도가 낮으며, 기술수용력과 혁신도 미흡하다. 고등교육 및 훈련, 금융시장 관련 제도 및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기업 활동의 제약요인으로는 자금부족, 불안정한 정책, 숙련노동력 부족, 노동윤리 미흡, 부패 등이 지적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신용 접근 제한이 최대 제약요인이라고 발표된 바 있다.

도로와 전력공급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문제도 심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 차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실제로 ODA 등 해외자본을 통한 교통인프라 개발 투자 확대 계획이 잡혀 있어 동 부문의 사업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 약 580억 달러의 외국자본을 유치해 인프라 부문에서 총 127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베트남 정부는 높은 공공부채 비중으로 인하여 전체 인프라 사업비의 30~40%를 민관협력체제(PPP) 방식 중심으로 조달한다는 방침¹⁰⁾ 등 PPP 확대에 매우 적극적이다.

이와 같은 베트남 민간부문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안한 베트남 민간부문개발의 주요 과제는 (i) 협의의 민간부문개발 측면에서는 금융접근성 제고와 기업가정신 및 지속가능경영 교육, (ii) 확대된 민간부문개발 측면에서는 도로 인프라 확충 및 전기

10) KOTRA 이규선 실장 발표자료, “주력시장으로 부상하는 베트남 시장 동향 및 진출 전략”, 「2016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성과 공유세미나」(2016.9.28.).

안정성과 효율성 증진, 숙련노동자 육성을 위한 직업훈련이다.

2. 한국의 대 베트남 민간부문개발 지원의 수요 부합성

우리나라는 대 베트남 국가협력전략의 네 가지 중점지원분야로서 공공행정, 교육,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분야를 2016년 12월에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행정 분야에서 추구하는 내용 중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원과 교육 분야의 현대적 산업국가에 적합한 고급인력 양성, 교통 분야가 포함하는 도로 및 철도 등의 정책 및 관리역량 강화와 주요 교통망 건설이 본 연구에서 도출된 베트남 민간부문개발 중점 지원분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가 베트남의 민간부문개발을 위해 제안한 지원 분야들 중 OECD DAC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원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 접근성 제고, 도로인프라, 에너지, 직업훈련 분야의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2010-2014년) 동안 우리나라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도국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DAC 회원국들도 베트남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1.2%)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었다. 도로인프라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체 DAC 회원국들의 베트남 도로인프라 지원 비중(22.6%)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비중(54.8%)을 지원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체 개도국에 대한 도로인프라 분야 지원 비중(15.0%)과 비교하더라도 베트남의 동 분야 지원은 상당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에너지 분야 지원(0.2%)은 DAC 회원국들의 대 베트남 에너지 분야 지원(12.1%)과 우리나라의 전체 개도국에 대한 에너지 분야 지원(6.2%)과 비교할 때 모두에 비해서 그 비중이 매우 낮다.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 지원은 전기 보급에 주력하고 있어 전기의 보급보다는 안정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베트남의 에너지 분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된다. 이에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 지원 사업 모델을 확장하여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직업훈련 분야에 대한 한국의 베트남 지원 비중(4.4%)은 DAC 회원국들(0.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나, 한국의 개도국 전체에 대한 직업훈련 분야 평균 지원 비중(5.3%)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이 직업훈련 분야에서 절대적 규모와 상대적 비중 모두 상위 공여국이라는 점(조재한 외, 201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국의 대 베트남 지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베트남 민간부문 개발 수요 분야들 중 한국의 대 베트남 국가협력전략에서 중점지원분야로 선정된 분야들인 도로인프라와 직업훈련에 지원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DAC 회원국과 한국의 대 베트남 전체 지원실적 중 각 분야 지원 실적 비중 (2010-14년)

(지출액, 2014년 가격기준)

분야	DAC 회원국의 베트남 지원	한국	
		베트남	개도국 전체
금융접근성 제고	1.2%	0.0%	0.0%
도로인프라	22.6%	54.8%	15.0%
전기 안정성, 효율성	12.1%	0.2%	6.2%
직업훈련	0.9%	4.4%	5.3%

- * 금융접근성 제고 : CRS 코드 24030(공식 금융중개기관), 24040(비공식 금융중개기관)
- ** 도로인프라 : CRS 코드 21020(도로교통)
- *** 전기 안정성, 효율성 : CRS 코드 230(에너지).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CRS 코드는 2016년에 신설되어 이전 실적에 대해서는 따로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대체 지표로서 에너지 분야 전체 실적을 활용함.
- **** 직업훈련 : CRS 코드 11330(직업훈련), 11430(응용 기술관리 훈련)

베트남은 한국의 발전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정책자문을 지원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¹¹⁾의 최초 협력 대상국이다. 전체 ODA 사업 내에서는 대 베트남 협의의 민간부문개발 지원이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해 왔지만 KSP 사업의 주제로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민간 부문개발 지원의 수단으로서 KSP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으며, KSP의 수행으로 축적된 자문 결과와 네트워크를 본 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KSP의 주제가 미시 단위로 구체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의 결과를 확장하여 본 사업화하기에 더욱 적합한 환경이다.

11) Knowledge Sharing Program

〈표 2〉 민간부문개발 관련 베트남 양자 KSP 사업 주제

연도	세부주제명
2015	하노이지역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전자산업 육성전략 베트남 중소기업 금융지원 목적을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개선
2014	베트남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IT 인프라 정책개선 연구 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수단으로서의 기술평가시스템
2013	베트남의 장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연구
2012	베트남의 노동수요 전망(2012-2020)과 고용정보서비스 구축
2011	베트남의 공항 현대화 전략 베트남의 항만 현대화 전략
2010	베트남 금융시장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베트남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기업 혁신역량 강화 베트남 기업의 경쟁력과 HRD 전략
2009	자립적 협동조합금융기관 발전방안: 베트남의 인민신용기금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산업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산학연 협력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 R&D와 기술이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2004	수출지원금융정책 및 베트남 수출입은행 설립방안 베트남의 인적자원개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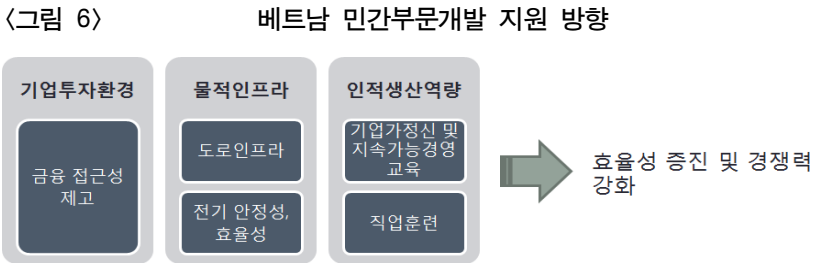
출처: '2016 KSP 성과공유 세미나' 중 윤지웅 교수 발표자료(2016)를 참고한 임소영 외(2016)

3. 대 베트남 민간부문개발 지원 방향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 경제개혁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겪으면서 경제발전 단계상 최빈국의 지위를 벗어났으며, 다른 중점협력국들에 비해 인프라와 제도 측면에서 기초적인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특히 기업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국제기구의 객관적인 지표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전반적으로 효율성 증진과 경쟁력 강화가 베트남 민간부문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 베트남 민간부문개발 지원의 궁극적인 장기 목적으로서 “효율성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설정하고, 베트남 민간 부문개발의 주요 과제로 도출된 금융접근성 제고와 도로 및 전기 부문의 인프라 개선, 기업가 정신 및 지속가능경영 교육과 숙련노동자 육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 : 임소영 외(2016)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와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베트남 민간부문개발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금융 접근 제한이 꼽힌다. 베트남과 미얀마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 대상 설문조사 (임소영 외, 2016) 결과에서도 베트남 진출 기업의 자금지원 수요가 특히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베트남 현지 수요와 우리 기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금융 접근성 제고를 베트남 민간부문개발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민간부문개발 지원 방향을 설정하였다.

최근 베트남은 국영은행과 민간은행, 외국계 은행들이 대거 설립 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상당한 양적 팽창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중앙경제경영연구소(CIEM)의 설문조사를 인용한 ADB(2015)에 따르면 담보 부족, 복잡한 과정, 높은 이율 등 때문에 베트남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충분한 대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융기회에 관한 정보 부족과 대출절차 사항들의 준수 역량 부족이 베트남 중소기업들의 주요 금융 제약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금융기회 정보 제공과 금융 교육이 요구된다. 그 밖에 대출이 필요 없거나(55%) 빚을 지고 싶지 않은 심리적 요인(15%), 또는 이미 과도한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2%)과 같이 대출 제약요인 이외의 요인들도 베트남 중소기업들이 금융지원을 받지 않는 주요 원인이었다.

베트남 민간부문의 금융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금융서비스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친환경 금융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개선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¹²⁾와 부합되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금융 방식에서 더 나아가 친환경 금융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 및 교육을 받지 못한 계층에 제공하는 금융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국가녹색성장전략(2012년)과 행동계획(2014년)을

12)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수립하여 친환경녹색성장을 국가 개발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친환경 생산 및 소비로 국가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금융기관의 리스크 회피 성향과 대기업 선호 경향으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의 친환경 공정개선과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된 활동들이 금융 지원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양한 자금방식을 활용하여 베트남 친환경 금융을 지원하는 사례들은 선진 공여기관과의 협력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베트남 특정 섹터 중소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기구의 설립을 공여기관이 지원하고, 이 투자기구가 베트남 은행의 대출을 보증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에너지 효율 개선 활동을 가능하도록 한 녹색투자기구¹³⁾도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Eisinger et. al, 2016).

금융의 공급자 측면에서의 금융 인프라 기반 마련만큼 금융을 사용하는 수요자 측면의 교육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 금융지식(financial literacy) 제고 지원이 요구된다. 베트남은 전반적으로 공식 금융서비스 활용 정도가 낮으며, 이는 특히 취약계층의 금융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¹⁴⁾ 실제로 HSBC, Visa, Citi 재단 등 몇몇 기관들은 베트남에서 금융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이 대체적으로 소규모의 특정 그룹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 기관의 이익과 연계되는 경우가

13) Green Investment Facility

14) State Bank of Vietnam, Nguyen Ving Hung 발표자료 "Evaluation of Financial Literacy in Vietnam and National Financial Education Program", 「ADB-Japan-OECD High-level Global Symposium(2015.1.22-23)」.

많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연속성과 커리큘럼의 포괄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¹⁵⁾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트남 국가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 민간부문개발 지원의 우선순위 분야 중 하나인 도로 인프라 건설의 추진 방식으로 민관협력체제(PPP)¹⁶⁾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 베트남의 인프라 개선 속도가 급속한 경제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베트남의 열악한 인프라는 자국의 수출주도 성장과 투자의 주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2020년까지 베트남 내 도로, 교량, 항구, 하수시설, 전력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¹⁷⁾ 경제성장 과정에서 베트남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지원함으로써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경제활동의 정부투자 의존성이 큰 점과 정부예산의 적자 폭이 큰 점은 최근 베트남의 경제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내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대규모 투자 금액을 베트남 국내 예산이나 ODA 만으로 조달하기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 때 주목받게 된 대안이 PPP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PPP 사업 자체의 수행도 중요하지만, PPP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투명한 조달정책이나 관련자들의 역량강화와 같은 제반여건의 지원도 요구된다. 베트남 정부는 2015년에 PPP에 관한

15) *ibid.*

16) Public-Private Partnership

17) www.usaid.gov/results-data/success-stories/vietnam-promotes-public-private-partnerships-infrastructure

법령¹⁸⁾을 제정하여 PPP 추진을 위한 정책적 틀을 마련한 바 있다.¹⁹⁾ 또한 최근 기획투자부(MPI)²⁰⁾ 내에 PPP 실과 범부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인프라 투자를 위한 PPP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²¹⁾ 베트남 MPI는 PPP 프로젝트에 관한 웹기반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PPP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유망 프로젝트 정보들을 공유하여 투자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특히 도로 교통 분야에서 PPP를 통한 프로젝트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이에 도로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ODA 계획 시, 특히 베트남 정부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의 모색이 더욱 필요하다.

V. 시사점

본 연구는 개도국 민간부문개발의 중요성을 진단하고, 특히 국별 기업환경과 민간부문 여건 분석을 통해 국가 수준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가별 민간부문개발 전략 수립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베트남 민간부문개발 지원방향을 제안하였다.

한국은 그동안 개도국 민간부문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ODA 사업 지원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18) Decree 15/2015/ND-CP

19)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Vu Quynh Le의 발표자료, “PPP Policies and Potential PPP Projects in Vietnam”, 「2016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성과 공유세미나(2016.9.28.)」.

20)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21) www.usaid.gov/results-data/success-stories/vietnam-promotes-public-private-partnerships-infrastructure

양질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개도국 민간의 발전이 핵심적인 요소로 대두되면서 우리나라도 전략적인 민간부문개발 지원 방안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ODA 현대화의 일환으로 증여, 보증, 대출, 지분투자 등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민간 지원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줄여줌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자금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필요하다.

비록 선진 공여국들처럼 개발금융기관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OECD DAC 회원국들 중 가장 큰 규모의 기타공적흐름(OOF)²²⁾ 사업을 수행 중인 국가로서 우리나라는 OOF를 활용하여 어떻게 민간부문개발 지원을 전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 주로 활용해 온 단순한 지원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금융수단이 요구된다. 이의 일환으로 협조용자 등을 통한 혼합금융²³⁾ 개발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그동안 다양한 수단의 사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던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들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 전향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개도국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시 공여국 민간부문과 협력하면서 자칫 공여국 위주의 사업이 계획되고 구속성 원조의 비중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빈곤감축이라는 공여기관의 핵심 목표를 민간부문

22) Other Official Flow

23) blended finance

개발 목표에 통합하고 명료화해야 한다. 또한 공여기관 이외의 양자 민간부문개발 원조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들에 대해서도 개발 협력 인식제고와 관련 역량강화를 실시하여 개도국 민간부문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개발 원조프로그램의 발굴, 선정 및 이행에 관한 정교한 지침 수립과 교육이 필요하다.

하드웨어와 재정 지원 중심에서 더 나아가 제도 발전 지향적인 지원을 중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일률적이고 표준화된 지원은 공여국의 발전 과정을 답습하게 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지 민간 섹터의 강점, 취약점, 역학적인 관계 등 명확한 여건분석을 토대로 국가 단위의 민간부문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보여준 국가 단위의 민간부문개발 전략 수립 프레임워크와 베트남에 대한 민간부문개발 지원 방향은 향후 민간부문개발 지원의 추진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베트남은 1992년 한-베 국교 수립 이후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70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한국의 3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상황이며,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저렴한 인건비와 젊은 인구, 규모 있는 시장 등 민간부문개발의 잠재력이 충분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ODA를 통한 협력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어 베트남은 민간부문개발 ODA의 주요 파트너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가 제시한 “효율성 증진 및 경쟁력 강화”의 베트남 민간부문개발

지원의 장기목적은 하위 주요 과제인 금융접근성 제고, 도로 인프라 구축, 전기 안정성 및 효율성, 기업가 정신 및 지속가능경영 교육, 직업 훈련에 통합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급증한 베트남 내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 메커니즘을 구상하며, 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효율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별 민간부문개발 지원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각 국의 법제도, 기업현황, 기업환경, 경쟁력, 인프라 등 전반적인 민간부문 현황과 한국과의 관계, 원조프로그램들의 추진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취합하여 국별 민간부문 개발 장기 목적과 추진 과제들을 도출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각국의 민간부문개발 ODA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과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최근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개발협력 방식 추세와 우리나라의 여건을 반영하여 새로운 사업 추진 및 자금조달 메커니즘 방식을 구체화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민간부문개발 주요 유망 부문들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임소영, 정선인, 나혜선, 이상준 (2016).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 수립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해외문헌

ADB (2015).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for Financial Sector Stability in Viet Nam. Manila, ADB.

Eisinger, F. and Cochu, A. (2016). Enabling SME Access to Finance for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in Asia, Switchasia.

OECD (2016). Development Cooperation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 Analytical Framework and Measuring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Paris, OECD.

OECD (2015).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5: Making Partnership Effective Coalitions for Action. Paris, OECD.

OECD (2004). Accelerating Pro-Poor Growth through Support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Paris, OECD.

OECD (1995). Support of Private Sector Development. Paris, OECD.

Schulpen, L. and Gibbon, P. (2001) Private Sector Development: Policies, Practices and Problems. World Development, 30(1): 1-15.

양허성 차관원조의 중장기 발전방안¹⁾

박복영²⁾, 권호³⁾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국제학연구원

I. 서론

- **(국제개발과 세계 경제지형의 변화)** 최근 국제개발에서 가장 큰 변화가 2015년 수립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수립이라면, 국제개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경제에서도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함.
- **(개발금융협력의 변화)** 국제개발 및 세계경제의 변화는 ‘개발금융 협력’에도 영향을 미쳐, 1) 금융지원에 대한 관심과 역할의 증대, 2) 개발을 위한 민간자본의 활용 강조, 3)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4) 금융파트너십 활성화 등의 변화가 발생함⁴⁾.

1) 본고는 2016년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용역 “양허성 차관원조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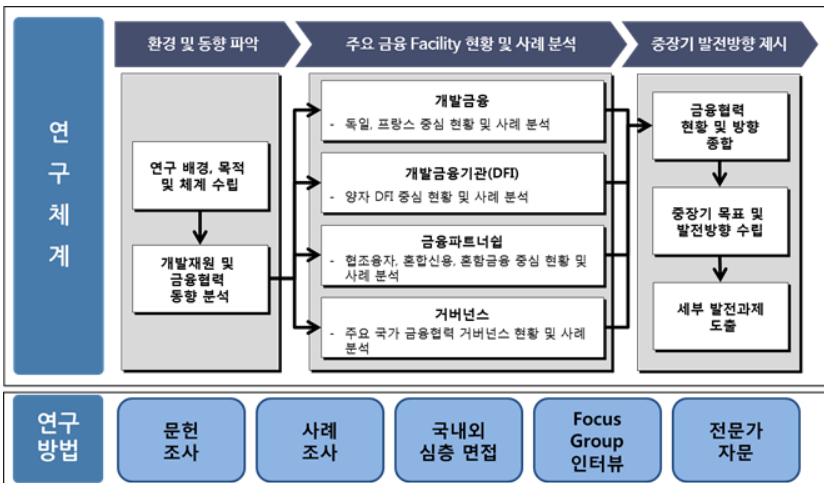
2)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3) 경희국제개발컨설팅 수석컨설턴트

4) 본 연구에서는 ‘개발금융협력’을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개발금융’은 양허성 차관을 위한 시장재원(非정부재정) 조달이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함.

- (연구의 필요성) 개발금융협력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양허성 차관도 선제적 변화 및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SDGs의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의 확대 및 개발금융협력의 다각화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국이 동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양허성 차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금융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 (연구 체계) 본 연구는 환경 및 동향 파악, 주요 금융 Facility 현황 및 사례 분석,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의 3단계로 구분되어 수행됨.

〈그림 1〉 연구의 체계의 방법



출처: 저자 작성.

II. SDG의 출범 이후 개발재원과 금융협력의 방향

- (SDG의 출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승계하는 차세대 글로벌 개발 목표로서, 2030년까지 전 세계 개발협력의 통합 목표 및 체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SDG 출범 및 개발재원의 확대 및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며 ODA의 재정의와 양허성 측정을 위한 새로운 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됨.
- ODA개념의 재정의로 인한 양허성 측정 방식의 변경, ODA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적 개발 재원의 성격을 지닌 재원을 포함하는 개념인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 공적 지원(TOSSD,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도입이 이루어짐.
- (기존 공적개발재원의 한계) 전통적인 공적개발재원(ODA)는 공여국 정부의 예산으로 조달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그 규모에 한계가 있음.
-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선진국 경기 침체에 따라 공적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음.
- OECD DAC 공여국들은 GNI의 0.7%를 ODA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평균 GNI대비 ODA비율은 약 0.3%에 그침.

- 한국의 개발협력은 대부분 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 확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이며 국내외 경제성장 둔화로 ODA 재정 확대가 어려운 실정임.
- **(민간재원 활용의 필요성)** 원조 중심의 패러다임이 개발협력 파트너십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함에 따라 개발재원의 지평이 ODA중심에서 이를 상호 보완 할 수 있는 민간재원까지 확대됨.
- **(민간재원의 활용과 ODA의 역할)** 민간재원의 적극적 활용 논의와 함께 ODA의 개발 유발 효과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함.
 - ODA를 촉매제로 새로운 민간재원 유입과 개도국 내 자체 자원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공적개발재원은 크게 ①투자 위험 흡수 ②추가적인 민간 투자에 대한 유인 제공을 통해 민간재원 유입을 촉진함.
 - 국제사회가 다양한 민간파트너십 재원 매커니즘 형성과 활용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한국도 공여국으로서 ODA를 확대하는 한편 더 많은 민간재원이 개도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개발금융을 통한 시장재원 활용)** 개발재원 확대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은 “채권발행, 지분투자, 보증 등의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개발 협력을 위해 민간 시장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
 -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은 공여국들은 개발재원에 소요되는 정부예산의 제약을 인지하고 시장재원을 이용한 금융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함.
 - 재원 조달 측면에서, 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시장 차입 재원을 함께 활용하여 재원기반을 확충함.
 - 한국도 최근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개발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완비하였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개발금융을 실제 집행하기 위하여 상세 규정 및 절차 등을 수립 중임.
 - 개발금융은 국제금융시장의 풍부한 민간 자금을 개발협력에 활용해 개발재원의 확대, 개발협력의 다양성 제고, ODA 규모 증가 등 개발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DFI를 통한 민간부문 투자 확대)** DFI(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는 공적재원과 민간 재원을 모두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개도국의 민간부문에 투자 혹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금융기관임.

- DFI는 설립 목표가 개발도상국 민간 부문 지원에 있으며, 3대 핵심요소는 ▲개도국 내 투자(in developing countries) ▲민간 부문 투자(to private sector) ▲공공 금융기관 성격(government-controlled)임.
- DFI는 정부의 출자, 민간부문의 출자(민관공동투자인 경우), 수익의 재투자, 금융시장 차입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
- DFI는 지분투자(equity), 대출(loan or debt), 준지분투자(quasi-equity) 및 메자닌(mezzanine finance), 보증(guarantees), 증여(grants) 등 다양한 민간금융수단을 활용함.
- DFI는 1970년대 이전부터 존재 했으나 2000년대 이후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며 금융지원규모가 급격히 증가함.
- 31개의 양자 및 다자 DFI의 민간부문 지원 약정액(commitment)은 2002년 약 100억 달러에서 2010년 약 400억 달러로 증가
- **(혼합금융을 통한 공적지원과 민간투자의 결합)** 최근 개발재원 확대 측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한 개발지원과 민간금융시장의 투자를 결합한 혼합금융(blended finance)의 확대가 강조
 - 혼합금융은 주로 공공부문 개발 사업에서 민관 협력을 의미하는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는 물론,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지

않는 민간사업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함.

- 한정된 공적 재원에 더 많은 규모의 민간 재원을 동원함으로써 개도국의 개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민간투자자들은 성장잠재력이 높으나 위험 또한 높은 개발도상국 개발 사업에 사업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 받은 상태에서 투자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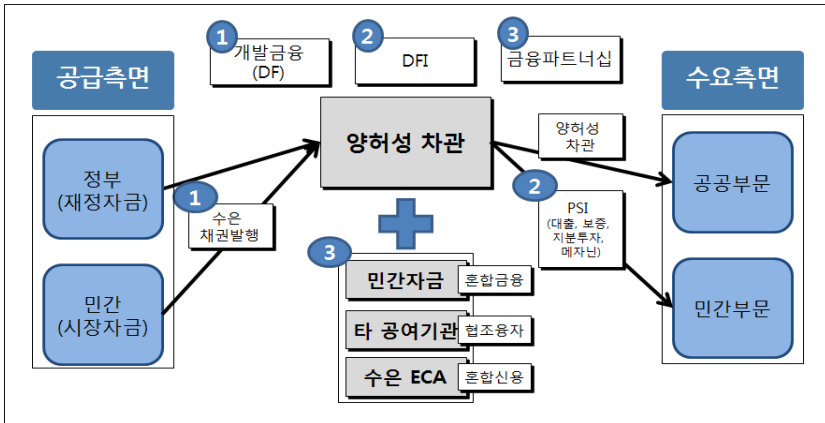
III. 개발을 위한 금융 퍼실리티: 동향과 사례

1. 개발을 위한 금융 퍼실리티의 발전과 변모

- 양허성 차관 등 개발을 위한 금융 퍼실리티는 자금공급(재원 조달) 측면, 자금수요(지원 대상) 측면, 협력(금융파트너십) 측면으로 구분이 가능
- 재원 조달(자금의 공급) 원천에는 공여국 정부의 재정자금과 민간 시장자금이 존재하며, 민간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협의의 '개발 금융'임.
- 지원 대상(자금의 수요) 측면에서 수원국의 공공부문(정부)와 민간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양허성 차관은 일반적으로 공공 부문을, DFI는 민간부문을 지원함.

- 금융파트너십의 형태로는, MDB 등 타 개발금융기관 또는 원조 기관과 협력하는 협조융자, 민간자금과 협력하는 혼합금융, 공적 수출신용(official export credit)과 협력하는 혼합신용이 존재함.

〈그림 2〉 양허성 차관 중심의 금융 퍼실리티



출처: 저자 작성.

2. 개발금융

- (개발금융의 도입과 확대) 독일, 프랑스와 같은 공여국들은 개발 재원에 소요되는 정부예산의 제약을 인지하고 시장재원을 이용한 금융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독일 KfW그룹은 국제금융시장에서 2010-2015년 연평균 약 7백억 유로의 재원을 조달하였음.

- KfW개발은행은 2015년 전체 신규 약정(commitments) 67억 유로의 64%인 43억 유로를 시장에서 자체 조달한 재원을 이용함⁵⁾.
 - 이 중 특히 개발차관(development loans) 승인액의 경우 90% 이상이 KfW 자체 조달임.
- 프랑스의 AFD는 매년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며, 채권발행 규모는 2010년 29억 유로에서 2015년 51억 유로로 약 80% 증가함⁶⁾.
- 최근 연간 채권발행 규모는 연간 신규 승인 규모의 약 60%에 달함.
- 우리나라의 연도별 약정 규모는 경쟁국인 일본, 독일, 프랑스에 비하여 작은 수준이며, 재원확대를 위하여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개발금융의 도입과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KfW의 재원조달)** KfW그룹은 소속된 기관별로 별도로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 전체 금융그룹차원에서 재원을 조달 후 개별 소속 기관에 배분함⁷⁾.

5) 2015년 금액 43억 유로는 KfW개발은행의 신규 사업에만 해당하며, KfW그룹 전체는 2015년 총 793억 유로의 재원을 조달하였고, 그 중 79%인 626억 유로를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함(KfW (2016b), Financial Report 2015, KfW Group.).

6) AFD (2011, 2015), AFD Registration Document 2010, 2015, AFD.

7) 예를 들어, 독일의 DFI인 DEG가 별도로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는 않음.

- KfW그룹에 대한 독일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은 2014년 170억 유로, 2015년 220억 유로였으며, 자본시장에서의 자체적인 자금 조달은 2014년 574억 유로, 2015년 626억 유로로 시장조달 자금의 비중이 더 높음.
 - KfW의 효율적인 시장자금 조달을 위하여 독일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증을 제공하여,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함⁸⁾.
 - 민간 자금시장에서의 재원조달은 벤치마크 프로그램(benchmark program), 기타 공모채권 발행(other public bond), 사모채권 발행(private placement)으로 구성됨.
- **(AFD의 재원조달)** AFD는 정부 재원인 정부차입금 및 보조금과 일반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과 개발협력을 수행함.
- 정부차입금의 경우 특별한 조건의 우대 자금(RCS, Resource with Special Conditions)으로 상환기간 30년, 거치기간 10년에 이자율은 0.25%임.
 - 2015년 AFD가 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의 총액은 약 51억 유로 (2015년 조달 총액의 81%)로 2014년 약 48억 유로에서 다소 증가함⁹⁾.

8) 2015년 12월 기준 KfW의 신용등급은 무디스 Aaa, S&P AAA로 최고 수준임.

9) 프랑스의 경우에도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위하여 Prapaco에서 별도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AFD에서 총괄하여 조달함.

□ (KfW의 금융협력 프로그램) 정부와 시장에서 조달된 재원을 기반으로 KfW는 다양한 개발 금융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함.

○ 정부에서 조달된 재원은 주로 정부부문(sovereign)과의 금융협력에, 시장에서 조달된 재원은 민간부문(non-sovereign)과의 금융협력에 주로 활용함.

○ KfW의 금융협력을 위한 수단은 크게 무상증여와 차관으로 구성됨.

- 무상증여의 경우 정부조달 재원만을 활용하며 최빈국을 대상으로 빈곤 감축, 기후변화, 성평등 분야 등을 지원함.

- 차관은 양허성 비율과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표준 차관 (standard loans), 개발차관(development loans), 프로모션 차관 (promotional loans)으로 구분됨.

- 표준차관은 정부에서 조달된 재원만을 활용하며, 하위 및 상위 중소득국가의 개발사업 지원에만 활용됨.

- 개발차관은 정부 및 시장에서 조달된 자금을 효과적으로 혼합하여 복합금융 (composite loan), 혼합금융(mixed loan), 저금리 차관(reduced-interest loan)으로 구분됨.

- 프로모션 차관은 시장에서 조달한 재원만을 활용하며, 소프트 차관과 시장금리 차관의 중간 수준의 이자율로 지원함.

- 2014년 기준 금융수단별 지원규모를 보면 시장 조달 자금을 활용한 개발차관의 금액(27.6억 유로)과 비율(39.4%)이 가장 높고, 프로모션차관 규모(25.9억 유로)와 비율(37%)이 두 번째로 높음¹⁰⁾.
 - 순수하게 정부지원금만으로 운용되는 표준차관의 경우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민간부문 조달자금만을 활용하는 프로모션 차관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AFD의 금융협력 프로그램)** AFD의 금융협력 프로그램으로는 차관, 증여 및 보조금, 보증, 지분투자가 존재함.
 - AFD의 차관은 금융협력 대상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비국가기관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양허성이 있는 차관(soft)과 비양허성(market-rate) 차관으로 구분됨¹¹⁾.
 - 증여 및 보조금은 프랑스의 우선연대국가군(PSZ, Priority Aid Solidarity Zone)에 포함된 최빈국에 주로 지원됨.
 - 보증은 개발도상국 내 중소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는 상업은행 및 중소기업기관에게 제공됨.

10) 2015년에 발간된 KfW Annual Report에서는 금융수단별 지원 금액 내역이 발표되지 않음.

11) 프랑스의 개발협력력을 위한 양허성 차관에는 경제재무부가 직접 운용하는 신용시장지원기금(RPE, Reserve Pays Emergents)이 존재하며, RPE는 프랑스 자채를 70%이상 포함해야 하는 구속성 성격을 보유한 차관으로, 주로 사회기반 시설 구축 및 장기 인프라 건설 사업에 지원됨.

- 지분투자는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2009년 설립된 별도의 운용사인 서남아프리카 투자지원기금 FISEA(Investment and Support Fund for Business in Africa)를 활용함.
 -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별 지원규모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양허성 국가차관의 금액(31.9억 유로)과 비율(56.3%)이 가장 높고, 양허성 비국가차관의 규모(8.3억 유로)와 비율(14.6%)이 두 번째로 높음.
- (KfW와 AFD의 위험관리) 개발금융의 활용 비중이 높은 KfW와 AFD는 체계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운영함.
- 독일의 KfW는 채권발행 등을 이용한 재원의 조달이 KfW 전체의 의사결정으로서 이루어지며, 정부재원과 자체조달 재원이 그룹의 의사결정에 따라 KfW개발은행에 할당됨.
 - 프랑스의 AFD는 자체적으로 자금조달과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며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함.
 - 만약 EDCF가 수은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개발금융을 통한 재원조달과 자금운용을 수행할 경우¹²⁾,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필수적임.

12) EDCF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3. DFI(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 (DFI의 구성)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에 투자 혹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금융기관”으로 정의되는 DFI는 양자 DFI와 다자 DFI로 구분됨.

- DAC는 2015년 기준으로 18개 기구를 양자 DFI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에 15개, 미국 1개, 일본 1개, 한국 1개가 존재함.
 - 한국수출입은행과 JBIC은 DFI와 유사하게 개발도상국에 투자 대출(investment loan)을 제공하여 잠정적으로 DFI로 분류됨¹³⁾.

- 양자 DFI의 경우 식민지 내 자국기업 보호, 자국기업의 개도국 진출 지원, 개도국에 대한 투자 확대, 개발도상국의 발전 지원 등 설립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설립 시기에 차이가 존재함.

- 유럽에 속한 15개 DFI들은 EDFI(European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라는 DFI 협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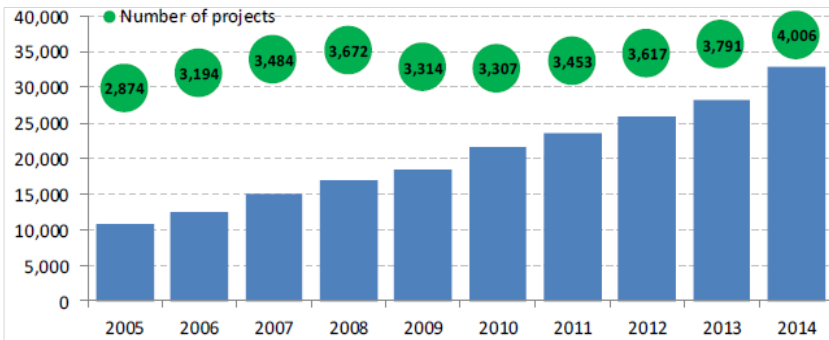
13) 한국수출입은행과 JBIC은 DFI와 유사하게 개발도상국에 투자대출(investment loan)을 제공하여 잠정적으로 DFI로 분류됨 (OECD (2015), Inclusion of the Effort in Using Private-Sector Instruments in ODA: Exploring Further the Institutional and Instrument-Specific Approaches)

○ 다자 DFI는 주로 MDB에 소속되어 산하기구 및 지역개발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AC은 2015년 기준 12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류함.

□ (EDFI의 규모 및 활동)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EDFI 기관의 투자 규모는 363억 유로로 2005년 109억 유로 대비 3배 이상 증가함.

○ 2015년 EDFI의 신규 투자는 60억 유로까지 성장하여 유럽 국가에서 지원하는 양자원조 규모 대비 약 10%정도를 차지함.

〈그림 3〉 EDFI 회원기관의 전체 포트폴리오 규모(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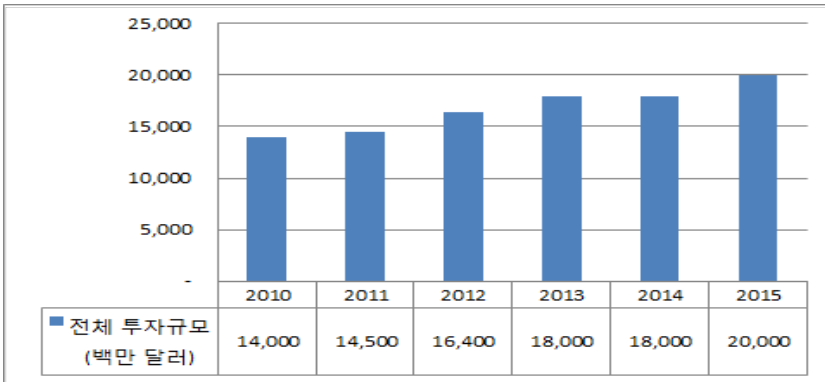
출처: EDFI(2015)¹⁴.

□ (OPIC의 연도별 투자규모) 2015년 OPIC의 전체 투자 규모는 200억 달러로 2010년 140억 달러 대비 약 43% 증가함.

14) EDFI (2015), Annual Report 2014, EDFI.

- 2015년 OPIC의 신규 투자는 약 44억 달러로 OPIC의 전체 투자 및 연도별 신규 투자규모는 양자 DFI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임.

〈그림 4〉 OPIC의 연도별 전체 포트폴리오 규모(백만 달러)



출처: OPIC(2011-2016)¹⁵⁾, 저자 재구성.

- (지역별 투자 규모) EDFI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하나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OPIC도 EDFI와 유사하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으며,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도 비슷하게 높음.
- (분야별 투자 규모) EDFI는 금융(30%), 에너지(18%), 제조/산업(16%), 기타 인프라(11%)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으며, OPIC도 EDFI와 유사하게 금융(49%), 에너지(19%)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음.

15) OPIC (2011-2016), 2010-2015 Annual Report, OPIC.

- **(EDFI의 금융수단)** EDFI는 지분 투자(equity), 준지분투자(quasi-equity) 및 메자닌(mezzanine), 대출(loan or debt), 보증(guarantees) 등의 금융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분투자와 준지분투자 및 대출의 활용 비중이 높음.
 - 2015년 기준으로 전체 EDFI의 평균 지분 및 준지분 투자의 비중은 52%로 가장 높으며, 대출이 44%를 차지하였으며, 보증은 4%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 **(OPIC의 금융수단)** OPIC도 EDFI와 유사하게 지분투자, 대출, 보증 등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나, EDFI와 금융수단의 분류 및 보고 체계가 상이함.
 - OPIC은 금융수단을 크게 금융(financing), 정치적 위험 보험(political risk insurance), 투자펀드 지원(support for investment fund)으로 구분함.
 - OPIC의 금융수단별 비중을 보면 대출과 보증으로 구성된 금융의 비중이 70% 중반으로 가장 높고, 정치적 위험 보험과 투자펀드 지원의 비중은 각각 10% 초반 수준임.

- **(DFI의 재원조달)** DFI의 재원 조달 방법은 정부 또는 민간의 출자, 수익의 재투자, 금융시장의 차입으로 구분됨.
 - DFI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원뿐만 아니라 명시적 혹은 암묵적인 보조금을 활용하여 위험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에 투자가 가능함.
 - 일부 DFI는 금융시장에서의 차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 차입할 경우 국가 보증 등을 활용하거나 기관이 소속된 금융그룹 차원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음.

- **(EDFI의 재원조달 추세)** EDFI의 기관들의 경우 최근 10년간 정부나 민간부분의 자본 증액 및 수익의 재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금융시장에 차입하는 레버리지 비율도 다소 상승하였음.
 - 2005년 83억 유로이던 전체 EDFI의 자본은 주로 정부의 추가 자본 증액과 수익 재투자를 통해 2015년 198억 유로 수준이 되어 두 배로 증가됨.
 - EDFI 중 DEG, FMO, Finnfund, OeEB, Proparco는 자본조달을 위하여 금융시장으로부터 차입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2005년 1.3 이었던 지분 대(對) 차입 비율이 2015년에는 1.8 수준으로 증가함.

- **(OPIC의 재원조달)** OPIC의 경우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지는 않으며, 자본금과 미(美) 재무부의 차입금 및 자체 준비금을 활용하여 투자함.
 - 2014년 기준 OPIC의 자본금은 5천만 달러이며, 재무부 차입금은 약 23억 달러, 법정 준비금은 약 44억 달러 규모임.

- **(DFI의 개발임무와 수익성)** 대부분의 DFI는 민간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개도국 발전과 빈곤감축에 기여한다는 개발임무(development mandate)를 갖고 있으며, 그 외 기관 또는 국가의 이익도 고려함.
 - 자체운영 및 생존을 위한 수익성 추구, 공여국의 이익 추구 등의 목적과 공식적인 개발임무 간에 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론적으로는 DFI가 개발효과와 함께 수익성(profitability)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나,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면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보다는 DFI의 특성상 수익추구를 우선할 가능성이 높음.
 - 개발과 수익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대부분의 DFI가 투자에 따른 개발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체계를 활용함.

- (DFI의 ODA 측정) 2016년 DAC 각료급회의(high level meeting)는 DFI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간금융수단(PSI, Private Sector Instruments)¹⁶⁾을 ODA로 인정하는 원칙에 합의함.
- SDG 달성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DFI에서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수단인 지분투자, 대출, 보증 등을 ODA로 인정하여 ODA의 촉매적 역할을 제고하려 함¹⁷⁾.
- 현재도 일부 국가는 PSI를 ODA 또는 기타공적지원(OOF, Other Official Flows)으로 분류하여 통계를 보고함.
- ODA 현대화에 따라 ODA의 측정방식을 현금흐름중심의 순지출 방식에서 증여등가액 방식으로 변경한 것과 유사한 방식을 활용하여, PSI를 ODA로 인정할 예정임.
 - PSI는 개발목적성과 함께 최소 증여율 대신 재무적 및 비재무적 추가성을 양허성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하여 민간재원의 동원을 강조함.
 - PSI의 ODA인정과 관련하여 PSI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특정 프로그램/펀드가 ODA 적격성 평가(ODA-eligibility assessment)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 추가됨.

16) PSI는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 지원에 활용하고 있는 대출, 지분투자, 보증, 증여 등의 금융수단을 의미하며, DFI는 PSI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기관임.

17)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수단인 PSI는 상업성과 수출금융적인 성격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ODA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일부 비판도 존재함.

- PSI를 ODA로 보고하는 방식으로는 기관중심 접근방식 (institutional approach)과 수단중심 접근방식(instrument-specific approach)이 존재하며, 국가별로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보고함.

4. 금융파트너십¹⁸⁾

- (개발파트너십과 금융파트너십) 개도국 개발을 위해 다양한 주체 (공여기관, 수원국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자선기금 등)가 참여 및 협력하는 행위를 '개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development)'라고 함.
 - 개발파트너십의 다양한 형태 중 '금융 파트너십(financing partnership)'은 재원을 복수의 주체가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금융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시너지효과의 창출, 투자재원의 확대, 효율성/효과성의 향상과 지식 전수, 조화와 혼합을 통한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존재함.
 - 금융파트너십은 거래비용, 거버넌스, 성과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성이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18) 이 부분에서는 연구진이 참여하여 발간 예정인 한국수출입은행 평가보고서 『EDCF 연계지원 사업 실태평가』의 내용을 일부 활용하였음.

- **(금융파트너십의 형태)** 금융파트너십은 협력이 되는 자금유형, 연계 협력기관, 연계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이 가능함.
 - EDCF는 금융파트너십 중에서 다자기구의 양허성 차관과 연계되는 경우를 MDB 협조융자(이하 '협조융자')로, 국내 공적수출신용 기관과 협력할 경우를 혼합신용으로 분류하여 정의함.

- **(EDCF의 협조융자와 혼합신용 현황)** EDCF는 1994년부터 2015년까지 협조융자의 형태로 36건, 혼합신용으로 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음¹⁹⁾.
 - 전체 협조융자의 규모는 약 1조 8백억 원으로 EDCF 전체 승인 액의 약 14%이며, 2007년 이후 협조융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전체 혼합신용의 규모는 약 1,560억 원으로 EDCF 전체 승인 액의 1% 미만이며, 2005년 이후 신규로 진행된 사업은 없음.
 - (국가별 협조융자) EDCF가 협조융자를 수행한 17개 국가별로 협조융자 규모의 편차가 크게 존재하며, 가장 큰 규모로 지원받은 국가는 베트남으로 총 6,240억 원(10건)의 협조융자 사업이 존재함.

19) 양자기구인 JICA와 진행한 협조융자의 경우에도 MDB 협조융자의 일환으로 간주하였으며, 협조융자이면서 혼합신용인 사업(터키 전동차 구매사업)이 1건 존재함.

- (분야별 협조용자) 전체 협조용자 승인액의 70%가 교통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에너지 분야에 12%, 나머지 분야는 6%에 불과함.
- (협력기관별 협조용자) 전체 36건의 협조용자 중 다자기구와 협력한 사업이 32건(89%)로 대부분이며, 다자기구 중에서도 ADB와 협력한 사업이 18건(50%)로 가장 많음.
- (자금형태 및 구조별 협조용자) 협조용자의 형태 중 평행용자가 금액기준 92.5%, 건수 기준 83.3%로 대다수를 차지함.

5. 혼합금융

- (혼합금융의 정의) 최근 새로운 개발재원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혼합금융이 큰 관심을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혼합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며 심지어 혼합금융의 정의도 다양함.
- 광범위하게는 다양한 금융수단을 혼합하여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를 모두 혼합금융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존재함.
- 어떤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증여 또는 양허성 자금과 공공기관의 비양허성 자금이 혼합되는 경우를 혼합금융으로 정의함.(public-public partnership)

- 또 다른 경우에는 민간분야의 자금 지원까지 포함하여 혼합금융으로 정의하고 있음.(public-private partnership)
- **(혼합금융 연구 및 분석 주제)** 혼합금융의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혼합금융 추진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이슈에 대한 분석 및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이러한 분석 및 연구는 통계, 실증분석, 사례분석 등과 관련된 기술적/경제적 분야와 실증연구를 위한 모델, 정책 분석, 등과 관련된 질적/효과적 분야로 구분됨.
 - 기술적/경제적 분야에는 1)혼합금융의 현재 및 잠재적 규모의 측정, 2)가용한 혼합금융 수단, 3)혼합금융의 주체, 4)혼합금융의 대상 및 수혜자, 5)혼합금융과 SDG 관계 등이 존재함.
 - 질적/효과적 분야에는 1)통계 및 정보의 가용성/투명성/책임성 강화, 2)혼합금융과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 3)성과의 모니터링과 평가, 4)혼합금융과 개발정책과의 일관성, 5)혼합금융의 민간재원 구축효과 등이 존재함.
- **(혼합금융의 현황 및 규모)** 최근 혼합금융과 관련되어 각종 통계를 분석한 결과들이 발표되어, 전반적인 추세와 현황은 제한적이지만 파악이 가능함.

- OECD는 설문조사를 통해 2012~2014년 3년간 보증, 협조융자 (syndicated loan),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를 통해 동원된 민간재원을 약 364억 달러 규모로 파악함²⁰⁾.
 - Development Initiatives에서 OECD 통계를 기초로 혼합금융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혼합금융으로 조달된 개발자금 규모가 전체 개발재원의 1% 미만으로 아직까지 매우 적은 수준임²¹⁾.
 - OECD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4년 혼합금융을 통해 조성된 개발재원의 전체 규모는 약 143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ODA 규모인 1,600억 달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함.
 - 개도국에 유입된 전체 재원규모를 기준으로 혼합금융의 비중은 0.6%에 불과함.
 - 혼합금융에 대한 최근의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혼합금융의 개발재원 조달 측면에서 역할은 매우 적음.
- **(혼합금융의 추세)** 혼합금융의 비중은 적으나 최근 3년간 혼합 금융은 매년 20% 정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재 증가율로는 SDG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혼합금융만으로 조달하는 것은 어려움.

20) Benn, J., et al. (2016), "Amount Mobilised from the Private Sector by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Interventions: Guarantees, syndicated loans and shares in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Working Papers, No. 26, OECD Publishing.

21) Development Initiatives (2016), "Blended finance: Understanding its potential for Agenda 2030", Report, Development Initiatives.

- 2012년 100억 달러이던 혼합금융은 2013년 124억 달러, 2014년 143억 달러로 증가 추세임.
- 218조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²²⁾, 혼합금융을 통해 개발재원으로 민간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음.
- 만일 최근의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면 향후 혼합금융의 규모는 2020년 420억 달러, 2030년 2,52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SDG 달성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가 3.3조~4.5조 달러, 부족한 재원의 규모가 2.5조 달러로 추정됨을 고려하면, 현재의 증가 추세로는 혼합금융이 개발재원 충당에 획기적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함.

22) Schmidt-Traub, G. and J. D. Sachs (2015),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Implementing the SDGs through Effective Investment Strategies and Partnerships", Working Paper,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IV. 한국 개발금융협력의 발전방향

1. 개발금융협력의 국내외 환경

- 국제개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는 근본적으로는 세계경제와 개발도상국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함.
 - 국제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주요 구조적 변화로는 1)개도국 내 자본 유입 증가, 2)개발도상국의 분화, 3)전통 공여국의 저성장, 4)신흥공여국의 등장, 5)글로벌 공공재의 중요성의 5가지가 존재함.
 - (개도국 내 자본유입 증가) 1990년대 이후 개도국으로 자본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개발함의) 민간자본유입은 1990년대 이후 개도국 빈곤탈출의 핵심요인으로 고려됨.
 - (개발도상국의 분화) 개발도상국 중에서 중소득국 혹은 신흥경제권 비중이 증가됨.
 - (개발함의) 저소득국과 신흥경제에 대한 차별화된 개발지원이 필요함.

- (전통 공여국의 저성장) 2000년대 중반 이후 전통 공여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됨.
 - (개발함의) 전통 공여국의 재정기반 개발지원에 제약이 우려됨.
- (신흥공여국의 등장) 중국 등 신흥경제권에 의한 개도국 개발 지원이 크게 증가됨.
 - (개발함의) 개발재원 확대의 기회이면서 기존 개발규범과의 상충이라는 위협도 존재함.
- (글로벌 공공재의 중요성) 기후변화대응, 테러 및 난민억제 등 글로벌 공공재의 중요성이 증대됨.
 - (개발함의) 개발목표는 다양화 되고 필요재원 규모가 증대되었지만 해결방안은 불투명함.

2. 개발금융협력의 방향과 주요 가치

- 앞에서 설명한 개발지형의 변화는 ‘금융수단을 통한 개발협력’ 혹은 ‘개발금융협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개발금융협력의 주요 변화방향은 금융지원의 역할 증대, 민간자본의 활용, 민간부문 지원 확대, 금융파트너십 활용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금융지원의 역할 증대) 양허성 차관이나 DFI와 같은 금융지원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증대됨.
 - 무상원조 외에 금융수단을 통한 지원에 다수 공여국들의 관심이 새롭게 증대하고 있음.
 - 금융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퍼실리티도 더욱 다양해지는 추세임.

- (민간자본의 활용) 공적개발재원 자체의 효과보다 민간자본을 촉매하는 효과에 더욱 주목함.
 - 공여국의 재정상황의 악화와 제약을 극복하고, 공적자본의 비효율성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민간자본 활용을 강조함.
 - 공적자본의 민간자본 유도 효과는, 조달과정에서의 유도효과와 지원과정에서의 유도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 KfW나 AFD가 개발재원의 상당 부분을 시장에서 조달하고, 비상업적 영역과 상업적 영역의 중간지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자본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 (민간부문 지원 확대) 수원국 정부(공공)부문에 대한 지원 외에 민간부문 성장을 직접 지원하려는 경향이 증대됨.
 - 민간부문 투자의 증대는, 민간부문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 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빈곤감축이라는 인식에 기반함.

- 과거에는 정부지원을 통해 민간부문 성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직접 지원에 관심이 증대됨.
 - 특히 신흥경제에서는 잠재적 수익성 있는 사업이 존재하고, 그런 사업에 진출하는 자국기업을 지원하려는 공여국의 이해도 작용함.
 - 상업적 사업과 비상업적 사업의 중간 영역의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개발효과와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DFI의 기능에 주목함.
- (금융파트너십 활용)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공동 대응하려는 경향이 강화됨.
- 기후변화, 테러 및 난민문제 대응과 같은 글로벌 공공재 공급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필요성이 증대됨.
 - 이에 대응해 MDB나 양자 개발금융기관이 협조융자(co-financing), trust-fund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 조달 확대 경향됨.
 - 단일 프로젝트에 공적자금과 민간자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혼합금융 (blended finance)이나 multi-stakeholder initiative 등도 활성화됨.
- (주목받는 가치) 개발금융협력에서 이상과 같은 새로운 변화 방향이 나타나면서 경제성장, 촉매효과, 개발효과, 파트너십 등 새로운 가치들이 주목 받고 있음.

- (경제성장) 사회개발 중심의 MDG와 달리, 경제성장이 빈곤의 궁극적 해결책이며 이를 위해 민간부문 성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SDG에 반영됨.
- (촉매효과) 공적자금 자체의 직접적 개발효과보다는 위험감소를 통한 민간자본 유도효과에 더욱 주목하는 경향임.
- (개발효과) 지원 대상이 민간부문과 중간지대로 확대되고 지원 목적에서 수익성과 개발효과가 양립하는 경우가 발생해, 금융 지원의 개발효과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경향이 발생함.
- (파트너십)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분야가 확대되고, 다양한 민간 파트너(기업, 금융기관, 공익재단, NGO 등)와 신흥공여국 등이 등장하면서 협력적 지원이 강조되는 경향임.

3. 금융협력의 발전방안

- (중장기 목표) 현재의 정부기금 위탁기관에서 벗어나 주도적인 개발금융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함.

Vision: 세계적 수준의 금융협력 개발기관

- 30년 전에 대개도국 수출지원 및 경제협력을 위해 조성한 기금에 기반한 금융협력은 현재 한국 위상에 부합하지 않음.
- 국제적으로 개발재원의 확대가 요구되고 국내적으로도 원조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협력도 새로운 발전이 필요함.
- 대정부차관 외에 민간지원을 포함하여 협력대상 및 modality도 다변화 되는 상황에서 정부자금 기반 협력으로는 한계가 존재함.
- 재정재원의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금융협력을 위한 민간 자원 조달이 필요함.
- 국내 자본(채권)시장 역시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발전함.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모드가 다양해지고 있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서도 다양한 협력수단을 가진 전문화된 개발 금융기관이 필요함.

〈그림 6〉

3대 발전방향과 중장기 목표



출처: 저자 작성.

□ (3대 발전방향-다양성, diversity) 지원대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지원 퍼실리티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중앙, 지방) 앞 차관 외에,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부문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금융 퍼실리티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저소득국(혹은 최빈국)과 중소득국(혹은 신흥경제)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후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차별화된 지원제도가 필요함.

○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DFI기능의 도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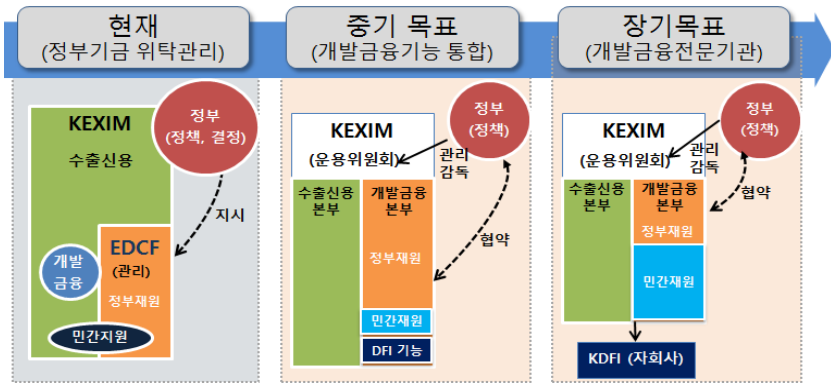
○ 지원대상과 제도의 다양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역시 정부재원과 시장조달로 다양화되어야 함.

- 구속성 조건도 더욱 완화되어 지원대상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만, 금융퍼실리티의 다양화가 실제로 가능할 것임.
- (3대 발전방향-전문성, expertise) 개발전문기관으로서 금융협력을 자기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함.
 - 수은은 단순한 기금위탁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나 금융협력의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함.
 - 재원의 일부를 기관이 직접 시장에서 조달하는 한 위험관리와 지원여부 결정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함.
 - 한편, 대정부 차관 외 준상업적 사업에 대한 지원, 민간부문 지원이 포함되므로 사업발굴, 사업성평가, 위험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필요함.
 - 개발효과와 국내기업지원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는 판단력과, 특히 개발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함.
- (3대 발전방향-협력성, partnership) 해외 개발금융기관 및 비금융 개발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함.
 - MDB 및 외국 양자금융기관과의 협조용자 등을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금융협력전문 개발기관으로서 비금융 개발파트너와의 연계사업을 적극 확대가 필요함.

□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EDCF의 발전에 따라 현재의 정부기금 위탁관리 구조의 거버넌스도 중기적으로는 개발금융기능을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개발금융전문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7〉 EDCF 거버넌스의 중장기 발전 방향



출처: 저자 작성.

○ (현재) 정부기금 위탁관리 구조

- (정부) 금융협력의 방향을 결정하며 개별사업의 최종 승인권을 보유함.
- (수은) 기본적으로 ECA기관이며 정부기금인 EDCF의 관리를 위탁받아 자금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함.

- (재원) 정부재원 단일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민간재원 조달을 위한 '개발금융'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하지만 EDCF의 채권발행 기능이 없어 ECA인 수은이 조달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예정임.
- (지원수단) 원칙적으로 대정부 차관
- (민간부문지원) ECA의 '해외진출기업 금융지원제도'(국내기업 대상)와 EDCF의 '민간협력차관'(해외법인 대상)이 있지만 DFI 기능 미흡 (활용도가 낮고 수단도 제한적)

○ (중기목표) 개발금융기능 통합

- (정부) 금융협력의 전반적 방향을 설정하고, 수은과의 '금융협력 집행 협약' 체결을 통해 정책방향을 구현함.
- (수은) 개발을 위한 금융협력을 전담하는 개발금융본부를 설치하고, 개별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을 수은이 보유함.
- (재원) 정부재원 외에 수은이 시장에서 동원한 민간재원도 활용함.
- (지원수단) 대정부차관 외에 공공기관, 은행, 민간기업 등으로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대상별 차별화된 지원 퍼실리티를 구비함.
- (민간부문지원)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하는 DFI 기능 담당 부서를 개발금융본부 내에 설치함.

- (장기목표) 개발금융 전문기관
 - (재원) 정부재원보다 민간재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결과 수는 혹은 개발금융본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됨.
 - (민간부문지원) 본부 내 부서 형태의 DFI 기능이 수출입은행 자회사로 분리하여 독립함.

4. ‘세계적 수준의 금융협력 개발기관’을 위한 기반 마련

- (금융지원 퍼실리티의 다양화) 지원대상이 다양화 되고 각 대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맞춤형(customized) 금융지원 퍼실리티가 필요함.
- 개도국 내 분화로 저개발국과 중소득 신흥경제는 경제여건과 상환능력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원 수단과 조건도 차별화 되어야 할 것임.
- 향후 지원대상이 EDCF와 같이 정부에 국한되지 않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어 대정부 차관과 차별화된 퍼실리티가 필요함.
- 민간부문 지원이 중요해지고 대부분의 나라가 DFI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도 DFI 기능의 도입이 필요함.

- 퍼실리티의 실질적 다양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의 다양화가 필요함.
 - 수은이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면 자금관리와 상환의 책임이 수은에게 있으며 더욱 차별화된 지원이 불가피하게 될 것임.
 - 재원조달 조건이 상이한 정부재원과 시장재원의 혼합비율을 달리함으로써 차별화된 퍼실리티와 지원조건을 만들 수 있을 것임.

- (개발금융기관의 자율성과 기획 기능 제고) 기금위탁 및 관리 기능을 넘어 개발전문기관으로서 금융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자율성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함.
 - 다른 공여국처럼 정부는 원조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개발 금융기관은 그에 부합하는 재원운용 및 지원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시장재원 조달이 현실화되고 그 비중이 증가하면, 금융기관이 위험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권한 및 자율성 확대는 불가피하게 될 것임.
 - 국내 원조정책, 국제사회의 추세, 수원국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협력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정책 및 기획기능 강화가 필요함.

- 현재 수은은 금융협력 사업 전문성은 축적되지만, 계획 수립 및 사업승인 등 주요 의사결정권이 없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함.
 - 수은 내 전문성 축적의 결과 기획 및 정책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 거버넌스 하에서는 실제 정책기획보다 정부 지원 업무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금융협력 전담기관이 금융협력 관련 주요한 권한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정부는 전략적 방향이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자원 배분과 사업관련 결정은 전담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는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 전담기관의 주인의식 강화, 전략적 대응성 향상, 전문성 제고, 금융수단의 다양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초 ‘개발금융’의 도입으로 개발협력을 위한 시장조달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개발금융협력 거버넌스의 조정이 불가피함을 의미함.

- (중간지대 지원 전문성 강화) 시장재원 조달(개발금융)과 DFI를 통한 민간부문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 금융협력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위 중간지대 지원역량 강화가 필요함.
- EDCF의 대정부 차관보다 더 큰 위험을 가진 주체 혹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의 발굴과 평가 역량을 축적해야 함.
- 금융조달 및 지원대상에서 민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개발금융의 수단의 다양화가 강조되면서 중간지대(gray area) 금융지원 확대가 추세임.
 - 중간지대란 상업적으로 타당성이 없는(non-viable) 사업과 위험을 감안한 후에도 상업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들 사이에 있는 사업을 의미함.
- 중간지대 영역은 상업성이 확실하지는 않고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상업성(profitability)과 위험(risk)의 평가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됨.
- 중간지대의 성공적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개발금융기관의 인센티브 구조와 자율성이 매우 중요함.

- 높은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적절한 인센티브구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개발금융기관 혹은 담당자는 사업발굴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음.
- 정부가 상업적 및 정치적 위험을 부담할 경우 위험의 평가 및 관리를 소홀히 하는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있음.
- 정부가 최종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개발금융이나 DFI 기능은 제도적으로는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해외 개발금융기관과의 협조유자 강화)** 대규모 사업이 적은 EDCF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근 강조되고 있는 민간부문 금융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MDB 및 양자금융기관과의 협조유자를 확대 및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대규모 사업이 어려운 EDCF가 대형 인프라 사업 또는 글로벌 공공재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MDB와의 협조유자가 중요함.
-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예, DFI, 혼합금융)을 다른 개발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경우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관련 지식과 know-how도 획득할 수 있음.

- 협조용자를 포함한 금융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금융파트너십 전략의 수립,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업 발굴, 협조용자 형태의 다양화 등이 필요함.
- **(비금융 개발파트너와의 연계사업 강화)** 금융협력 중심의 한국수출입은행(EDCF)과 비금융협력 중심의 KOICA로 이원화되어 있고, 다른 공공기관도 자체적으로 ODA를 추진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발파트너간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EDCF가 보유한 국제개발 금융협력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민간단체 등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함.
- **(혼합금융 도입기반 마련)** 향후 최근 강조되고 있는 혼합금융을 EDCF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한국의 관련 기관의 기본 현황 파악 및 조직 역량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OECD/WEF는 혼합금융 도입을 위하여 1)조직 기본 현황 파악, 2)조직 동의 및 인식제고, 3)혼합 금융 원칙 및 목표 사전 설정, 4)혼합금융에 대한 조직적 역량 파악, 5)혼합 금융 거래 시범 운용, 6)시범 운용 과정 검토, 7)청사진 수립 및 실행능력 제고, 8)학습 및 조정의 8단계 절차를 제시함.

○ EDCF의 혼합 금융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직 기본 현황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OECD/WEF는 혼합금융과 관련된 활동, 허가, 인식, 흥미, 수용력, 영향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권고함.

□ **(개발인식과 개발효과의 강화)** 금융협력 개발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협력의 일차적 임무(mandate)가 개발지원(development assistance)이라는 인식의 강화가 필요함.

○ 실제로 금융협력의 목적은 국내기업 지원, 경제협력 증진 등 다면적이지만 개발전문 금융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개발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존재함.

○ 국내외적으로 개발기여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게 될 것이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방향설정이나 위상강화에 장애로 작용할 것임.

○ 시장재원 활용, 민관협력,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 등과 같이 다중적 이해와 목적이 내포된 지원 modality가 증가할수록, 개발영향(impact)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더욱 요구될 것임.

○ 현재 우리나라의 양허성차관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EDCF가 개발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퍼실리티라는 인식이 약한 것이 현실임.

- EDCF가 대외원조의 한 축이라고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EDCF가 수출지원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잠재되어 있음.
- EDCF가 수출지원 수단이라는 인식은 국가위상이나 EDCF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이런 인식의 결과 대부분의 EDCF사업이 한국기업만을 contractor로 하는 '구속성'으로 운용되고 있음.

○ 국제개발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 부족, 수출촉진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의 욕구 등도 이런 인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함.

□ **(다양한 금융 퍼실리티 활용을 위한 구속성 완화)** 2010~2014년 우리나라의 구속성 차관의 비중은 약 11.1%로 타 국가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구속성원조는 수원국의 비용을 증가시킬뿐 아니라 양허성 차관의 발전에도 다양한 제약 및 기회비용을 부여함.

○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구속성 원조는 비구속성 원조보다 15~30% 더 많은 비용을 수원국이 부담²³⁾

○ 구속성원조에 따른 양허성 차관의 제약 및 기회비용적인 요소로는 효과(수익)가 높은 사업발굴의 어려움, 높은 양허성 수준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다양한 금융파트너쉽 형성의 제약 등이 존재함.

23) OECD (2001), "Untying Aid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Policy Brief, OECD.

- EDCF자금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구속성이라는 조건 때문에 수원국은 EDCF를 기피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저금리로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증가함.
 - 구속성으로 인하여 EDCF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개발 금융 파트너십에 참여가 제한됨.
- (구속성 완화에 따른 문제) 구속성 완화 시 발생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원조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동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원조재원 확대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임.
 - (전략적 구속성 완화) 타 공여국도 원조공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비구속화를 목표로 추진하지 않았으며, 내부적으로 비구속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 순차적인 비구속화가 필요함.
- **(사업 발굴 역량의 강화)** 최근 국별협력전략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준비되고 있는 CPM(country programming mission)을 포함하여 별도의 기술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업발굴 역량 강화가 필요함.
 - **(내부 인력의 관리역량 강화)** 내부 직원의 개발측면에서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별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사이동 시기의 변경, 정규직 개발협력 전문인력의 채용 등을 도입할 필요가 존재함.

참고문헌

해외문헌

- ADB (2016a), *Effectiveness of Asian Development Bank Partnership*, ADB.
- ADB (2016b), *Partnering for Development: Donor Report 2015*, ADB.
- ADB (2008), *Strategy 2020: The Long-Term Strategic Framework of the Asian Development Bank 2008-2020*, ADB.
- ADB, et al.(2016), *2015 Joint Report on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Climate Finance*, ADB.
- AFD (2016), *AFD Activity Report 2015*, AFD.
- AFD (2015), *AFD Registration Document 2015*, AFD.
- AFD (2014a), *AFD Registration Document 2014*, AFD.
- AFD (2014b), *AFD Registration Document 2013*, AFD.
- AFD (2013), *AFD Registration Document 2012*, AFD.
- AFD (2012), *AFD Registration Document 2011*, AFD.
- AFD (2011a), *AFD Registration Document 2010*, AFD.
- AFD (2011b), *Strategic Orientation Plan 2012-2016*, AFD.
- Benn, J., et al. (2016), “Amount Mobilised from the Private Sector by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Interventions: Guarantees, syndicated loans and shares in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Working Papers*, No. 26, OECD Publishing.
- Bhushan, A. and J. Clark (2016), *Canada's Development Finance Initiative: Making it Happen, Getting the Details Right*, CIDP.
- British Exporters Association (2015), “An Opportunity to level the playing field for UK exporters”, *Concessional Export Finance Consultation*, British Exporters Association.
- CIPS (2015), *Towards 2030: Building Canada's Engagement with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CIPS.
- Convergence (2016), *Case Study: Saroná Frontier Markets Fund 2*, Convergence.
- Development Initiatives (2016a), “The role of blended finance in the 2030 Agenda: Setting out an analytical approach”, *Discussion paper*, Development Initiatives.

Development Initiatives (2016b), “Blended finance: Understanding its potential for Agenda 2030”, *Report, Development Initiatives*.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2016), “Chapter 6: Canada in the World”, *2016 Budget: Growing the Middle Class*,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2015), *2015 Budget: Strong Leadership: A Balanced-Budget, Low-Tax Plan for Jobs, Growth and Security*,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DFID (2015a), *Concessional export finance consultation*, DFID.

DFID (2015b), *Response to concessional Export Credit Facility (CECF) feasibility consultation*, DFID.

EDFI (2016), *EDFI Flagship Report 2016: Investing to Create Jobs, Boost Growth and Fight Poverty*, EDFI.

EDFI (2015), *Annual Report 2014*, EDFI.

Haga, J. and B. House (2014), “Joint Submission to the House of Commons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Pre-Budget Consultations 2014*, Parliament of Canada.

Heltberg, Rasmus (2014),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rom Working in Partnership: Findings from IEG’s Work on Partnership Programs and Trust Funds”, *IEG Learning Note*, World Bank Group.

House of Common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ittee (2014), “The Future of UK Development Co-operation: Phase 1: Development Finance”, *Eighth Report of Session 2013-14*, The Stationary Office by Order of the House.

IFC, et al. (2011), *International Finance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Through the Private Sector: A joint report of 31 multilateral and bilateral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IFC.

Jones, Tim (2016), “Proposal for UK aid money to be used to promote western exports”, *Jubilee Debt Campaign*, Retrieved from <http://jubileedebt.org.uk/blog/proposal-for-uk-aid-money-to-be-used-to-promote-western-exports>.

KfW (2016a), *Annual Report 2015*, KfW Group.

KfW (2016b), *Financial Report 2015*, KfW Group.

KfW (2016c), *Management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2015*, KfW Group.

KfW (2015a), *Annual Report 2014*, KfW Group.

KfW (2015b), *Financial Report 2014*, KfW Group.

KfW (2014a), *Annual Report 2013*, KfW Group.

KfW (2014b), *Financial Report 2013*, KfW Group.

KfW (2013), *Financial Report 2012*, KfW Group.

KfW (2012), *Financial Report 2011*, KfW Group.

KfW (2011), *Financial Report 2010*, KfW Group.

OECD (2016a),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6: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Business Opportunities*, OECD Publishing.

OECD (2015), *Inclusion of the Effort in Using Private-Sector Instruments in ODA: Exploring Further the Institutional and Instrument-Specific Approaches*, DCD/DAC/STAT(2015)3, OECD.

OECD (2014a), *Background paper: Including the cost of using private-sector instruments in ODA*, OECD.

OECD (2014b),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4: Mobilising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ECD Publishing.

OECD (2013),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 France 2013*, OECD Publishing.

OECD (2012), *Aid Untying: 2012 Report*, DCD/DAC(2012)39, OECD.

OECD (2001), "Untying Aid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Policy Brief*, OECD.

OPIC (2016), *2015 Annual Report: Making an Impact*, OPIC.

OPIC (2015a), *Annual Report on Development Impact*, OPIC.

OPIC (2015b), *2014 Annual Report: Snapshots in Development*, OPIC.

OPIC (2014), *2013 Annual Report*, OPIC.

OPIC (2013), *2012 Annual Report: Building for Growth Innovating for Change*, OPIC.

OPIC (2012), *2011 Annual Report 2011: Investing with Impact for 40 Years*, OPIC.

OPIC (2011), *2010 Annual Report*, OPIC.

Romero, M. J. and J. Van de Poel (2014), *Private finance for development unravelled: Assessing how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work*, Eurodad.

- Schmidt-Traub, G. and J. D. Sachs (2015),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Implementing the SDGs through Effective Investment Strategies and Partnerships”, *Working Paper*,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te Velde, D. W. and M. Warner (2007), “The use of subsidies b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in the infrastructure sector”, *Working Paper*, No. 283,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 UK Parliament (2015), *Economic Development and future of development capital: Written statement*, HCWS122, UK Parliament.
- UN (2014),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 United Nations Publication.
- UN (2006), “Towards global partnerships”,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RES/60/215, UN.
- UNCTAD (2014),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Investing in the SDGs: An Action Plan*, United Nations Publication.
- USAID (2016), *Power Africa Annual Report 2016*, USAID.
- WEF and OECD (2015a), *A How-To Guide for Blended Finance: A practical guide for Development Finance and Philanthropic Funders to integrate Blended Finance best practices into their organizations*, WEF.
- WEF and OECD (2015b), *Blended Finance Vol. 1: A Primer for Development Finance and Philanthropic Funders*, WEF.
- World Bank (201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6*, World Bank.

국내문헌

- 곽재성, 함미자, 김용빈, 박복영, 주효연, 이종원 (2015), 『국제조달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수출입은행.
- 구윤정 (2015), “OECD DAC의 ODA 재정의와 시사점”, 『EDCF 이슈 페이퍼』, Vol. 4, No. 1, 한국수출입은행.
- 김승년 (2015), “Post-2015 민간 개발자원 확대와 개발금융의 역할”, 『한국의 개발협력』, No. 3, 한국수출입은행.

- 김은혜 (2015a), “독일 대외원조기관 분석 : KFW”, 『한국의 개발협력』, No. 3, 한국수출입은행.
- 김은혜 (2015b), “독일 개발금융기관 분석 : DEG”. 『한국의 개발협력』, No. 3, 한국수출입은행.
- 김은혜 (2015c), “프랑스 개발금융기관 분석 : PROPARGO”, 『한국의 개발협력』, No. 3, 한국수출입은행.
- 박명호 (2015), “선진 원조기관 개발협력 형태와 EDCF 파트너십 확대방안”, 『한국의 개발협력』, No. 4, 한국수출입은행.
- 박민정, 김은혜(2015), “프랑스 대외원조기관 분석 : AFD”, 『한국의 개발협력』, No. 3, 한국수출입은행.
- 박복영, 박영준, 권호, 이종원 (2015), “선진 공여국 DFI 운영 현황 분석 연구”, 『한국의 개발협력』, No. 3, 한국수출입은행.
- 박수영, 오수현 (2015), “제3차 개발재원총회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의 함의 분석”, 『개발과 이슈』, No. 24, 한국국제협력단.
- 오수현 (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간파트너십과 자원메커니즘”, 『국제개발협력』, Vol. 3, 한국국제협력단.
- 임소진, 석창민 (2016), “ODA 현대화 최근 논의 분석 I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 (TOSSD)” 『한국의 개발협력』, Vol. 3, 한국수출입은행.
- 정재형, 박민정 (2016), “ODA 현대화 최근 논의 분석 II : 민간금융수단 (PSI)의 추가성”, 『한국의 개발협력』, Vol. 3, 한국수출입은행.
- 정혁 (2015), “중장기 양허성차관 선진화 방안: 한국 ODA의 금융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의 개발협력』, 한국수출입은행.
- 정혁 (2013), “개발금융 도입을 통한 한국의 개발협력 체제 발전 방향에 관한 고찰”, 『2013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한국정책학회.
- 한국수출입은행 (2016a), 『EDCF 연차보고서 2015』,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2016b), 『금융협력의 전문적 기능과 역할』(내부업무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6c), 『대외경제협력자금[개발금융] 개요 및 운영방안』 (내부업무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6d), 『유·무상 연계강화 방안-기능별 분업 및 협업』 (내부업무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5), “SDGs 달성을 위한 자원조달 방안 : 혼합금융 (Blended Finance)”, 『EDCF 이슈페이퍼』, Vol. 4, No. 7,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2014), 『2014 세계ECA 편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2007), 『대외경제협력기금 20년사: 1987-2007』,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발간예정, 『EDCF 연계지원 사업 실태평가』,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

Gavi Alliance (2016), Funding & Finance,

<http://www.gavi.org/funding>

OECD (2016b), Country Statistical Profiles: Korea,

<http://stats.oecd.org>

OECD (2016c),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CRS

microdata),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OECD (2016d),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

Power Africa Initiative (2016), <https://www.usaid.gov/powerafrica>

대외경제협력기금 (2016), 지원업무종류,

<https://www.edcfkorea.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40010040010010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조세 · 재정통계,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Finances/B01/1#not>

EDCF

**III. 분야별 개발협력
논의동향**

2016년 DAC 회원국 ODA 잠정통계 주요 내용
김다정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심사역

2016년 DAC 회원국 ODA 잠정통계 주요 내용

김다정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심사역

지난 2017년 4월 OECD DAC는 DAC 회원국들의 2016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를 OECD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함

* OECD 통계작성반은 각 회원국이 7월에 제출한 확정통계 자료를 검증, 확인 후 매년 12월 중 발표

I. DAC 회원국 주요 내용

1. 총 ODA 지원규모

□ DAC 29개 회원국(EU 제외)의 2016년 ODA 규모(순지출 기준)는 명목 금액 비교시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실질 금액 기준(물가 및 환율 변동 감안)으로는 8.9% 증가함 (2015년 1,316억불, 2016년 1,433.3억불)

○ 명목 금액 기준 양자원조는 8.3%, 다자원조는 8.8% 증가

- 총국민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32%로 2015년 대비 소폭 (+0.2%) 상승
- 일부 회원국이 경기 침체에 따라 원조 예산을 감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ODA 실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표 1〉 DAC의 '14~'16년 ODA 금액 변화

단위: 억 불 (순지출)

구 분	2014	2015	2016
양자원조	948.1	942.1	1,019.9
무 상	904.7	888.2	-
유 상	43.4	53.9	-
다자원조	427.7	373.4	406.3
전 체	1,375.8	1,315.6	1,426.2

출처 : 저자 작성,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IDS) 참고

- 비호신청자(asylum seeker) 급증에 따른 공여국내 난민비용 (in-donor refugee costs) 지출 증가를 2016년 ODA 규모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
 - 공여국 내 난민비용으로 인한 증가 효과 제거시, ODA 실질 증가율은 7.1%
- 국가별 지원규모는 미국(336억불), 독일(247억불), 영국(180억불), 일본(104억불), 프랑스(95억불) 순이며, 한국은 20억불로 16위를 차지

〈표 2〉

2015년 OECD DAC 회원국 ODA 현황

단위: 백만 불 (순지출)

순위	국 가	ODA 규모	순위	국 가	ODA 규모
1	미 국	33,589	16	한 국	1,965
2	독 일	24,670	17	오스트리아	1,583
3	영 국	18,013	18	핀란드	1,057
4	일 본	10,368	19	아일랜드	802
5	프랑스	9,501	20	폴란드	603
6	네덜란드	4,988	21	뉴질랜드	438
7	스웨덴	4,870	22	룩셈부르크	384
8	이탈리아	4,856	23	포르투갈	340
9	노르웨이	4,352	24	그리스	264
10	스페인	4,096	25	체 코	261
11	캐나다	3,962	26	헝가리	155
12	스위스	3,563	27	슬로바키아	107
13	호 주	3,025	28	슬로베니아	80
14	덴마크	2,372	29	아이슬란드	50
15	벨기에	2,306	DAC 전체		142,619

출처 : 저자 작성,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IDS) 참고

- DAC 회원국 중 22개국의 ODA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다음 12개국이 실질 증가율 10%를 초과하는 큰 폭의 증가 기록
 - 오스트리아(+18.3%) : 공여국 내 난민지원 비용 및 다자기구 앞 원조액 증가
 - 벨기에(+19.6%) : 공여국내 난민지원비용 증가
 - 체코(+29.3%) : EU 앞 출연금 증가
 - 독일(+36.1%) : 공여국 내 난민지원 비용 증가 및 원조프로그램 규모 증가

- 그리스(+10.8%) : EU 앞 출연금 증가
- 아일랜드(+11.9%) : 다자기구 앞 원조액 증가
- 이탈리아(+20.2%) : 공여국 내 난민지원비용 증가 및 다자기구 앞 원조액 증가
- 폴란드(+42.6%) : EU 앞 출연금 증가
- 슬로바키아(+26.8%) : EU 앞 출연금 증가
- 슬로베니아(+25.3%) : 국제기구 앞 출연금 증가
- 스페인(+192.3%) : 쿠바 부채탕감
- 아이슬란드(+11.6%) : 공여국 내 난민지원비용 증가

○ DAC 회원국 중 7개국의 ODA가 감소하였으며, 4개국의 ODA가 실질 감소율 10%를 초과하는 큰 폭의 감소 기록

- 핀란드(-18.7%) : 개발분야 예산 감소로 인한 전체적인 지원액 감소
- 네덜란드(-13.1%) : 15년도에 비해 비교적 감소한 공여국 내 난민비용 지원
- 스웨덴(-31.1%) : 15년도에 비해 비교적 감소한 공여국 내 난민 비용 지원
- 호주(-12.7%) : 양자원조 지원액 감소

2. 양자간 원조

□ 양자간 원조(순지출 기준)는 전년대비 8.3% 증가한 1,019.9억불 기록

○ 프로젝트 원조 비중이 40.3%인 411.1억불로 가장 크며, 기타 27.6%(281.4억불), NGO·PPP·프로그램 원조 17.8%(181.3억불), 행정비용 6.2%(63.5억불) 순으로 지원

○ 채무구제 및 공여국 내 난민지원의 증가로 기타는 대폭 지원액이 증가하였으나, 다른 원조유형들은 감소세를 보임

- 전년 대비 채무구제는 419.2% 증가하였고, 예산지원은 14.3%, 기술협력은 22.9%, 프로젝트 원조 11.7% 감소

〈표 3〉 DAC 회원국의 양자간 원조 유형별 현황

단위: 억 불 (순지출)

원 조 유 형	2015년		2016년		증감 (B-A)	증감률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예산지원	19.6	2.1%	16.8	1.6%	-2.8	-14.3%
NGO, PPP, 프로그램 원조	195.9	20.8%	181.3	17.8%	-14.5	-7.4%
프로젝트 원조	465.6	49.4%	411.1	40.3%	-54.5	-11.7%
기술협력	52.0	5.5%	40.1	3.9%	-11.9	-22.9%
채무구제	4.9	0.5%	25.6	2.5%	20.7	+419.2%
행정비용	63.2	6.7%	63.5	6.2%	0.3	+0.5%
기 타*	140.9	15.0%	281.4	27.6%	140.5	+99.7%
합 계	942.1	100.0%	1,019.9	100.0%	77.8	+8.3%

*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개발에 대한 인식 확산비, 공여국내 난민지원
출처: 저자 작성,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IDS) 참고

3. 다자간 원조

□ 다자간 원조는 전년대비 8.8% 증가한 406.3.억불 기록

- EU연합 앞 원조 비중이 33.7%로 가장 크며, 세계은행 21.8%, UN 14.4%, 기타 다자기구 22.3%, 지역개발은행 7.8% 順으로 구성
- UN 및 지역개발은행 대한 지원액은 전년 대비 -4.1%, -0.9% 감소하였으나, EU연합(15.1%), 기타다자기구(19.4%), 세계은행 (3.5%) 등 전반적으로 상승세 기록

〈표 4〉 DAC 회원국의 다자간 원조 유형별 현황

단위 : 억 불 (순지출)

원 조 유 형	2015년		2016년		증감 (B-A)	증감률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U N	61.0	16.3%	58.5	14.4%	-2.5	-4.1%
EU연합	119.0	31.9%	137.0	33.7%	+18.0	+15.1%
세계은행	85.7	22.9%	88.6	21.8%	+3.0	+3.5%
지역개발은행	31.8	8.5%	31.6	7.8%	-0.3	-0.9%
기타다자기구	75.9	20.3%	90.6	22.3%	+14.7	+19.4%
합 계	373.4	100.0%	406.3	100.0%	32.9	+8.8%

출처 : 저자 작성,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IDS)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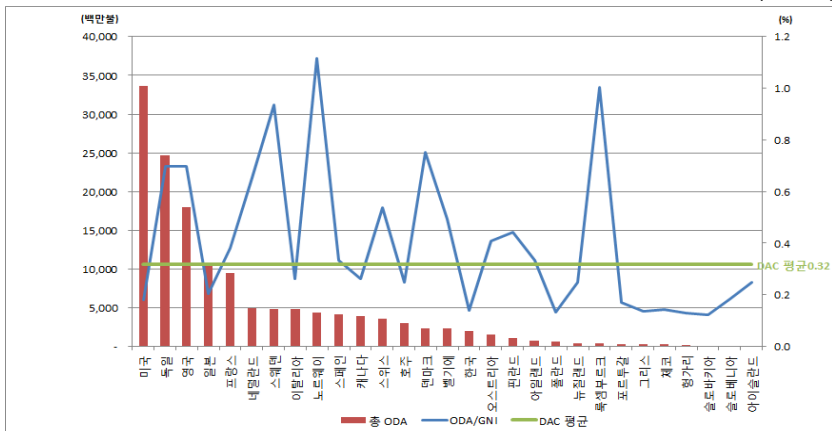
4. ODA/GNI 비율

□ 경제규모 대비 원조 수준을 나타내는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0.32%를 기록

○ UN이 제시한 ODA/GNI 비율 목표(0.7%)를 넘어선 국가는 노르웨이(1.11%), 룩셈부르크(1.00%), 스웨덴(0.94%), 덴마크(0.75%), 독일(0.70%), 영국(0.70%) 등 6개국이며, 한국은 0.14%로 25위를 기록

〈그림 1〉 2016년 DAC 회원국의 ODA 및 ODA/GNI 현황

단위: 백만불 (순지출)



출처: 저자 작성,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IDS) 참고

II. 우리나라 주요 내용

1. 총 ODA 지원규모

□ '16년 우리나라 ODA 지원규모(순지출 기준)는 총 2,232.73백만불로 전년 대비 16.6% 증가

○ 전년 대비 양자간 원조 5.5%, 다자간 원조는 53.1% 증가

〈표 5〉 2016년 우리나라 ODA 확정통계 현황

단위 : 백만 불 (순지출)

구 분	2015년	2016년	증감률(%)	비중(%)
총ODA (A+B)	1,915.39	2,232.73	16.6	100.0
양자간 원조 (A)	1,468.79	1,548.97	5.5	69.4
유상원조(EDCF)	562.37	563.47	0.2	(양자 중 : 36.4)
무상원조	906.42	985.49	8.7	(양자 중 : 63.6)
(KOICA)	(563.22)	(551.84)	△2.0	(무상 중 : 56.0)
(기 타)	(343.20)	(433.65)	26.4	(무상 중 : 44.0)
다자간 원조 (B)	446.60	683.76	53.1	30.6
(한국은행)	(225.31)	(469.34)	108.3	(다자 중 : 68.6)
총ODA(총지출 기준)	1,995.50	2,306.70	15.6	-
GNI(국민총소득)	1,383,853	1,412,380	-	-
ODA/GNI(%)	0.14	0.16	-	-
적용 환율(원/달러)	1,131.31	1,160.59	2.59	-

출처 : 저자 작성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IDS);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홈페이지(<http://oda.edcfkorea.go.kr>) 참고)

2. 양자간 원조

□ 양자간 원조(순지출 기준)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1,549.0백만불 지원

□ 양자간 원조 중 유상원조는 전년 대비 0.2% 증가하였고, 무상원조는 8.7% 증가

○ 유상원조(순지출 기준*)는 전년대비 0.2% 증가한 563.5백만불 지원

* 차관 순지출액 = 차관 총지출액 - 차관 원리금 상환액

- 유상원조는 양자간 원조의 36.4%를 차지하여, 전년(38.2%)보다 1.8%p 비중 감소

○ 무상원조는 전년대비 8.7% 증가한 985.5백만불 지원

- KOICA의 무상원조는 전년대비 2.0%(-11.4백만불) 감소하여 551.8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기타 기관의 무상원조는 26.4% 증가(+90.5백만불) 하여 433.7백만불 기록

- 무상원조는 전체 양자간 원조의 6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상원조 중 KOICA 비중은 56.0%로 전년(62.1%)보다 6.1%p 감소

- 양자간 원조의 원조 유형별 배분을 살펴보면, 프로젝트 원조가 65.8%(1,020백만불)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술협력 13.6%(210.2백만불), NGO·PPP·프로그램 원조 8.8%(136.4백만불) 순으로 구성
- 예산지원 및 행정비용은 다소 감소하여 0.1백만불, 66.4백만불 기록

〈표 6〉 2016년 우리나라 ODA 원조유형별 현황

단위 : 백만 불 (순지출)

원 조 유 형	2015		2016		증감 (B-A)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예 산 지 원	9.9	0.67%	0.1	0.01%	-0.67%
NGO, PPP, 프로그램 원조	138.4	9.42%	136.4	8.80%	-0.62%
프로젝트 원조	953.5	64.92%	1,019.8	65.84%	+0.92%
기 술 협 력	211.2	14.38%	210.2	13.57%	-0.81%
행 정 비 용	65.4	4.45%	66.4	4.29%	-0.16%
기 타	90.3	6.15%	116.0	7.49%	+1.34%
합 계	1468.8	100.0%	1549.0	100.0%	-

출처 : 저자 작성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IDS) 참고)

3. 다자간 원조

- 다자간 원조는 전년대비 53.1% 증가한 683.8백만불 지원
- '16년 실적부터 AIIB 앞 출자 및 출연이 ODA 다자간 원조 실적으로 보고됨에 따라, 다자간 원조액 대폭 증가

- UN(U\$2.99백만), 지역개발은행(U\$249.66백만) 앞 출연·출자는 증가하였으며, 세계은행(U\$10.46백만) 및 기타 다자기구(U\$5.03) 앞 출연·출자는 감소

〈표 7〉 2016년 우리나라 다자간 원조 현황

단위 : 백만 불 (순지출)

구 분	2015년			2016년			증감 (B-A)
	출연	출자	합계(A)	출연	출자	합계(B)	
UN	98.00	-	98.00	100.99	-	100.99	2.99
세계은행	63.87	134.14	198.01	43.59	143.96	187.55	△10.46
지역개발은행	60.18	50.19	110.37	75.63	284.4	360.03	249.66
기타다자기구	40.22	-	40.22	35.19	-	35.19	△5.03
합 계	262.27	184.33	446.6	255.4	428.36	683.76	237.16

출처 : 저자 작성,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IDS);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홈페이지(<http://oda.edcfkorea.go.kr>) 참고

4. 양자간 원조의 지역별·소득그룹별 현황

- (지역별) 양자간 원조의 지역별 지원 비중은 아시아가 4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아프리카 26.8%, 중남미 8.9% 順으로 지원

- 아시아 지역 원조에 대한 비중은 48.5%로 지원액은 전년 대비 23.0백만불 증가

-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는 전년대비 15.8% 증가한 415.6백만불을 기록하여 양자간 원조의 26.8%를 차지
- 양자간 원조 중 아프리카에 대한 비중은 전년 대비 2.4% 증가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전년대비 14.6% 증가한 391.5백만불 기록

〈표 8〉 2016년 우리나라 양자간 원조의 지리적 배분

단위 : 백만 불 (순지출)

구 분	2015년	2016년		'16년 기관별 금액		
		양자간 원조 중 비중	양자간 원조 중 비중	KOICA	EDCF (유상)	기타
아시아	774.5	751.5	48.5%	266.9	292.1	192.4
- 중동	66.4	65.9	4.3%	25.1	22.2	18.5
아프리카	358.8	415.6	26.8%	127.6	218.6	69.4
- 사하라이남	341.5	391.5	25.3%	108.6	219.8	63.1
중남미	114.1	138.0	8.9%	62.8	57.4	17.8
유럽	-4.4	-1.5	-0.1%	0.9	-4.7	2.3
오세아니아	8.8	8.9	0.6%	5.2	0.0	3.6
지역 미배분	217.1	236.5	15.3%	88.4	0.0	148.1
전 체	1,468.8	1549.0	100.0%	551.8	563.5	433.7

출처 : 저자 작성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IDS) 참고)

- (소득그룹별) 소득그룹별로는 최빈국 지원이 전년 대비 0.4% 감소한 577.7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양자간 원조의 37.3%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기관별 최빈국 지원 비중은 EDCF가 44.6%(261.2백만불), KOICA가 33.6%(185.7백만불)를 차지

〈표 9〉 2016년 우리나라 양자간 원조의 소득그룹별 배분

단위 : 백만 불 (순지출)

구 분	2015년	2016년		'16년 기관별 금액		
		양자간 원조 중 비중	양자간 원조 중 비중	KOICA	EDCF (유상)	기타
최빈국	580.1	577.7	37.3%	185.7	251.2	140.8
기타 저소득국	9.3	10.4	0.7%	7.1	-1.1	4.4
하위중소득국	530.0	540.1	34.9%	188.8	273.1	78.2
상위중소득국	109.7	134.8	8.7%	63.1	40.3	31.4
소득 미배분	239.7	286.0	18.5%	107.2	-	178.8
전 체	1,468.8	1,549.0	100.0%	551.8	563.5	433.7

출처 : 저자 작성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IDS) 참고)

5. 총지출 기준 ODA 지원규모

- 총지출 기준 ODA 지원규모는 2,306.70백만불로 전년(1,995.50)대비 15.6% 증가

- 유상원조의 총지출 금액은 전년(642.5백만불) 대비 0.8% 감소한 637.4백만불을 기록

- [참 고]
1. DAC 회원국의 양·다자 지원 실적 및 ODA/GNI 비율
 2. 우리나라 기관별 ODA 지원 실적

〈참고 1〉 DAC 회원국의 양·다자 지원 실적 및 ODA/GNI 비율

단위 : 백만 불 (순지출)

국가명	2015			2016		
	양자	다자	ODA/GNI	양자	다자	ODA/GNI
호주	2,752	741	0.29	2,214	811	0.25
오스트리아	783	541	0.35	970	613	0.41
벨기에	1,112	793	0.42	1,432	874	0.49
캐나다	2,972	1,305	0.28	2,714	1,248	0.26
체코	70	129	0.12	75	186	0.14
덴마크	1,880	685	0.85	1,701	671	0.75
핀란드	698	590	0.55	634	422	0.44
프랑스	5,157	3,882	0.37	5,450	4,051	0.38
독일	14,113	3,827	0.52	19,575	5,095	0.7
그리스	72	167	0.12	71	193	0.14
헝가리	47	108	0.13	18	137	0.13
아이슬란드	31	9	0.24	39	11	0.25
아일랜드	427	291	0.32	425	377	0.33
이탈리아	1,829	2,174	0.22	2,334	2,522	0.26
일본	6,147	3,055	0.2	7,053	3,315	0.2
한국	1,469	447	0.14	1,538	427	0.14
룩셈부르크	263	100	0.95	271	112	1
네덜란드	4,163	1,563	0.75	3,179	1,809	0.65
뉴질랜드	358	84	0.27	358	80	0.25
노르웨이	3,307	971	1.05	3,426	927	1.11
폴란드	100	341	0.1	148	455	0.13
포르투갈	146	162	0.16	127	212	0.17
슬로바키아	17	68	0.1	20	87	0.12
슬로베니아	25	38	0.15	29	50	0.18
스페인	355	1,042	0.12	2,489	1,607	0.33
스웨덴	4,828	2,262	1.4	3,464	1,407	0.94
스위스	2,726	803	0.51	2,783	780	0.54
영국	11,710	6,835	0.7	11,514	6,499	0.7
미국	26,654	4,331	0.17	27,937	5,651	0.18
DAC 전체	94,211	37,344	0.30	101,988	40,629	0.32

출처 : 저자 작성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IDS) 참고)

〈참고 2〉

우리나라 ODA 기관별 지원 실적

단위 : 백만 불 (순지출)

기 관 명	2015년			2016년			증감액 (B-A)
	양자간	다자간	총ODA(A)	양자간	다자간	총ODA(B)	
강원도	0.17	-	0.17	0.39	-	0.39	0.22
경기도	0.77	-	0.77	4.64	-	4.64	3.87
경상남도	0.3	-	0.3	0.29	-	0.29	△0.01
경상북도	3.43	-	3.43	3.65	-	3.65	0.22
고용노동부	1.57	8.44	10.01	0.66	8.80	9.45	△0.56
공정거래위원회	0.12	-	0.12	0.13	-	0.13	0.01
관세청	2.52	-	2.52	2.80	1.69	4.49	1.97
광주광역시	0.04	-	0.04	0.09	-	0.09	0.05
교육부	43.19	3.54	46.72	56.04	-	56.04	9.32
교육청	1.43	-	1.43	1.60	-	1.60	0.17
국가보훈처	0.17	-	0.17	0.16	-	0.16	△0.01
국무조정실	9.33	-	9.33	6.04	-	6.04	△3.29
국민권익위원회	0.07	-	0.07	0.06	-	0.06	△0.01
국민안전처	0.26	-	0.26	0.64	-	0.64	0.38
국방부	1.79	-	1.79	1.47	-	1.47	△0.32
국토교통부	4.77	0.1	4.87	4.65	0.14	4.79	△0.08
기상청	2.06	0.19	2.25	2.47	0.06	2.53	0.28
기획재정부	13.34	93.21	106.55	20.82	79.44	100.26	△6.29
농림축산식품부	11.27	11.88	23.15	13.16	12.15	25.32	2.17
농촌진흥청	13.45	0.28	13.73	15.50	0.26	15.76	2.03
대검찰청	0.31	-	0.31	-	-	-	△0.31
대구광역시	0.67	-	0.67	0.70	-	0.70	0.03
문화재청	1.48	0.53	2.01	1.52	1.04	2.56	0.55
문화체육관광부	10.57	-	10.57	8.18	-	8.18	△2.39
미래창조과학부	9.62	1.67	11.29	10.92	2.30	13.22	1.93
법무부	0.49	0.21	0.7	0.73	-	0.73	0.03
보건복지부	19.69	11.21	30.9	22.40	17.07	39.47	8.57
부산광역시	0.37	-	0.37	0.20	-	0.20	△0.17

기 관 명	2015년			2016년			증감액 (B-A)
	양자간	다자간	총ODA(A)	양자간	다자간	총ODA(B)	
산림청	6.91	2.71	9.63	10.81	0.27	11.08	1.45
산업통상자원부	14.11	1.07	15.18	13.65	1.28	14.93	△0.25
서울특별시	1.73	-	1.73	1.28	-	1.28	△0.45
식품의약품안전처	1.1	-	1.1	1.12	-	1.12	0.02
여성가족부	1.65	3.82	5.46	1.21	4.29	5.50	0.04
외교부	116.56	74.36	190.92	164.13	78.94	243.07	52.15
울산광역시	0.05	-	0.05	0.04	-	0.04	△0.01
인사혁신처	13.39	-	13.39	17.87	-	17.87	4.48
인천광역시	0.1	2.64	2.74	2.50	-	2.50	△0.24
전라남도	-	-	-	0.02	-	0.02	0.02
제주특별자치도	0.05	-	0.05	0.10	-	0.10	0.05
중소기업청	-	-	-	0.14	-	0.14	0.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91	-	0.91	3.10	-	3.10	2.19
충청남도	0.02	-	0.02	0.01	-	0.01	△0.01
충청북도	0.06	-	0.06	-	-	-	△0.06
통계청	0.85	-	0.85	1.34	-	1.34	0.49
특허청	1.19	0.01	1.20	1.41	0.01	1.42	0.22
한국국제협력단	563.22	-	563.22	551.84	-	551.84	△11.38
한국수출입은행	588.19	-	588.19	588.97	-	588.97	0.78
한국은행	-	225.31	225.31	-	469.34	469.34	244.03
해양수산부	2.21	-	2.21	2.39	-	2.39	0.18
행정자치부	2.85	-	2.85	2.67	-	2.67	△0.18
헌법재판소	0.05	-	0.05	0.02	-	0.02	△0.03
환경부	0.35	5.42	5.77	4.44	6.69	11.13	5.36
합 계	1468.79	446.60	1915.39	1548.97	683.76	2232.73	317.34

출처 : 저자 작성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홈페이지(<http://oda.edcfkorea.go.kr>)
참고)

참고문헌

해외문헌

OECD (2016). "Development aid in 2015 continues to grow despite costs for in-donor refugees" released by OECD/DAC, OECD.

웹사이트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IDS),
<http://www.oecd.org/dac/stats/idsonline.htm> (검색일: 2017년 7월 27일).

EDCF

IV. 개발협력대상국 분석

솔로몬군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조재동 한국수출입은행 심사역

인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김찬수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조사역

솔로몬군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조재동

한국수출입은행 심사역

1. 일반개황

면적	29천 Km ²	GDP	12억 달러 (2016년)
인구	60.1만 명 (2016년)	1인당 GDP	1,971 달러 (2016년)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통화단위	Solomon Islands Dollar (SI\$)
대외정책	친서방 정책	환율(달러당)	7.94 (2016년 평균)

- 솔로몬군도는 파푸아뉴기니 동쪽, 호주 북쪽 남서태평양에 위치한 군도(群島)국으로, 197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영국 여왕을 국가원수로 삼고 있는 영연방국가임.
- 농업·임업 등 1차산업의 비중이 GDP의 약 50%에 달하는 등 대체로 제조업 기반은 취약한 상황임. 또한, 기후변화에 민감한 지역에 위치하여 연간 자연재해 관련 직·간접 비용이 높음.
- 잦은 총리 교체와 의원간 이합집산에 따라 안정적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종족간 갈등으로 심화된 사회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2003년 호주를 중심으로 솔로몬군도 지역지원단 (RAMSI)을 파견하는 등 사회불안 요인도 내포하고 있음.
- 최대 수출국이자 공여국인 호주는 RAMSI 파견 등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은 교육, 의료, 인프라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원조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경제지표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e	2017 ^f
경제성장률	3.0	2.0	1.8	3.2	3.0
소비자물가상승률	5.4	5.2	-0.6	0.4	2.5
재정수지/GDP	4.2	1.7	-0.3	-1.4	-2.5

출처 : IMF

□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으로 3%대 경제성장률 회복 예상

- 2013년 이후 금 생산량 감소 등 광업 부문의 부진과 농업 생산량의 감소로 성장세가 둔화됨. 특히, 2014년 대규모 홍수 발생으로 인한 Gold Ridge 광산* 폐쇄와 엘니노 현상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으로 2015년 성장률이 1.8%로 하락함.

* 솔로몬군도 유일의 금광으로, 2014. 4월 대규모 홍수에 따른 오염수 유입에 따라 현재까지 광산 개발이 중단

- 2016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정부지출 증가, 엘니노 현상 완화에 따른 농어업 생산량 증대에 힘입어 성장률이 3.2%로 회복됨. 2017년에는 Tina 강 수력발전 건설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3%대의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금년 10월까지 건설 착수를 목표로 현재까지 총 1억 1000만 달러의 자금이 확보됨. 향후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으로부터 6,500만 달러 이상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회복세 시현

○ 식료품과 유류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국제 원자재가격 변화에 민감한 경제구조임.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도 홍수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이 더 큰 폭으로 작용하여 마이너스를 기록함.

○ 2016년에는 자국통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생산설비 부족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4%로 상승하였으며, 2017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2% 중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환율 추이(SI\$/달러): 7.30('13) → 7.38('14) → 7.91('15) → 7.94('16)

□ 홍수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확대 전망

○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각종 개혁조치, 인프라 투자 지원 등으로 2014년까지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함. 그러나, 2015년에는 홍수로 인한 세수 감소 및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함.

- 2016년에는 Gold Ridge 광산의 생산 재개 작업 및 도로·항구 등 공공 인프라 재건 작업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1.4%를 기록함. 2017년에도 Tina 강 수력발전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별목업, 중국 등 특정 산업 및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총수출에서 별목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3.6%이며, 이 중 절반 이상(56.2%)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등 특정 산업 및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최근 기후환경 악화, 남벌 등으로 삼림 파괴가 가속화되어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름. 이에 2017년 3월 임업부가 신규 별목업체 및 삼림조합 비회원에 한해 면허 발급을 중단함에 따라 경제적 타격이 예상됨.

□ 기후 변화에 취약한 지리적 환경

- 태풍, 지진, 해일 등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재정지출이 GDP의 0.5%, 재해 발생 시 평균 복구비용이 GDP의 1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16년 12월에 발생한 규모 7.8의 지진으로 인해 솔로몬군도 3개 주에 걸쳐 7,000여 명이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학교 등 공공 인프라 시설이 파괴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함.

나. 성장 잠재력

□ 미개발 광물자원 개발을 통한 성장가능성 내포

- 니켈, 보크사이트 등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는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자원개발에 따른 성장가능성이 큼.
- 2014년 9월 니켈 생산권에 대한 개발사간 분쟁*이 종결되면서 니켈 개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음.

* 2011년 정부는 호주 광산 회사인 Axiom Mining에 이사벨 섬의 니켈 탐사권을 부여했으나, 일본 광산 회사인 Sumitomo Metal Mining(SMM)이 정부로부터 광산 투자방향서(LOI)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3년간 분쟁이 지속됨. 2014년 9월 고등법원이 Axiom Mining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분쟁이 종결됨

- 2017년 3월 정부는 중단되었던 Gold Ridge 광산에 대한 개발권을 복원함에 따라 향후 광물자원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도로 재건 등 개선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2019년까지 광산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관광산업 성장 잠재력 보유

- 정부는 별목업을 대체할 신성장동력으로 관광산업을 우선순위로 두고 2015년 국가관광개발계획(National Tourism Development Strategy, 2015-2019)을 수립하여 관광부 재건, 관광 기금 조성, 제도 개혁 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동국 통계청에 따르면 관광객 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역대 최고인 23,192명을 기록하는 등 해양 및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함.
 - 정부는 2020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0,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주요 성과 지표로 삼고 있으며, 2030년까지 일자리 창출, 지역 관광 활성화 등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함.

다. 정책성과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각종 재정개혁 실시

- 정부는 IMF 및 국제기구의 차관 지원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 재정, 세제, 부채관리, 환율제도 개편 등 각종 재정개혁을 달성함.
 - 재정 및 부채 건전화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 결의한 호니아라 클럽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2013년 동 협약을 공공재정관리법 (Public Financial Management, PFM)으로 개편함. 이에 따라 공공부채가 2005년 GDP의 60%에서 2015년 말 9%대로 하락하는 성과를 거둠.
 - 2012년 고정환율제에서 복수통화바스켓제로 환율제도를 변경하여 물가지표를 관리하였으며, 2013년 국영기업의 차입 지침 등 마련, 2014년 광업 세제 및 금 수출세 개편, 장학금 관리 강화 등 투명한 재정 운영 노력을 기울임.

□ 태평양 제도 포럼 회원국 간 PACER-Plus 체결

- 2017년 4월 긴밀한 경제관계를 위한 태평양 협약(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ACER Plus)*이 8년여의 협상 끝에 호주에서 체결됨.

* 태평양 제도 포럼(Pacific Islands Forum) 회원국 간의 무역 포괄 협정으로, 태평양 섬 국가들과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경제 통합을

통해 ①일자리 창출, ②삶의 수준 향상, ③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함.

- 2018년 동 협약이 발효 시 수입 관세 철폐, 호주 및 뉴질랜드로의 노동 이동성 향상, 추가적인 개발 원조 등의 측면에서 솔로몬군도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3. 대외경제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자본재 수입 확대로 경상수지 적자 확대
- 인프라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자본재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3년 이후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함.
- 2014년 이후 원조자금 유입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에 힘입어 경상수지 적지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7년에는 Tina 강 수력발전 건설 프로젝트 본격화에 따른 자본재 수입 확대가 예상되어 경상수지가 다시 악화될 전망이다.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e	2017 ^f
경 상 수 지	-39	-50	-30	-20	-49
경 상 수 지 / G D P	-3.5	-4.3	-2.7	-1.7	-4.0
상 품 수 지	-17	-5	-21	-5	-59
수 출	448	455	414	411	407
수 입	465	460	435	416	466
외 환 보 유 액	508	496	506	534	574
총 외 채 잔 액 ^{주)}	218	225	146	143	193
총 외 채 잔 액 / G D P	19.6	19.5	12.9	12.1	15.5
D. S. R.	2.7	2.9	3.6	3.2	3.4

주 : IMF, EIU 자료를 토대로 재계산
 자료 : IMF, EIU

□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 등으로 외환보유액 증가세

- 2014년 이후 외환보유액은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 원조자금 적립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규모는 9개월 수준임.

* FDI 유입액(억 달러): 2.3('14년) → 2.6('15년) → 4.5('16년) → 5.4 ('17년)

□ 2010년 IMF의 금융지원 이후 외채 여건은 대체로 개선

- 2010년 IMF의 자금 지원을 받은 이후 정부는 적극적인 외채 관리정책*을 실시하여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2016년

12.1%까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D.S.R.도 3%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New Debt Management Strategy('12년), Public Financial Management Act('13년) 등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의회 내 지지기반 균열로 정치적 불안성 지속

○ 2014년 12월 총선에서 머내시 소가바레(Manasseh Sogavare)가 신임 총리로 선출됨. 그러나 총리의 독자적인 국정운영 및 성과 저조 등으로 인해 2015년 장관 7명이 사임하고 야당이 불신임 투표를 제기하는 등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함.

- 지난 10년간 총 7명의 총리가 교체되었고, 소가바레 총리 역시 두 차례 재임 기간* 모두 2년을 채우지 못하는 등 총리로서의 입지가 불안정함.

* 2000년-2001년, 2006-2007년 총리직 역임.

- 또한 2016년 11월 소가바레 총리의 통합민주당(UDP) 당원 자격이 일시적으로 철회되는 등 의회 내 지지기반이 취약해 안정적 정국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2. 사회안정(소요/사태)

□ 부족간 갈등이 내재되어 있어 국제사회의 지원 필요

○ 과달카날계 부족과 말라이타계 부족 등 인근 섬에서 유입된 이주민 간 갈등으로 정세 불안을 겪고 있음.

- 2014년 5월과 8월에 정부의 홍수 이재민에 대한 지원 불충분, 개발자금 사용에 대한 의혹 확산으로 폭력사태가 발생하였음. 더불어, 말라이타계 종족의 분리독립 주장 등 당분간 부족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종족간 무력 충돌, 내부 치안상황 개선을 위해 2003년 호주, 뉴질랜드를 주축으로 솔로몬군도 지역지원단(RAMSI)*이 파견됨에 따라 소요사태가 다소 안정됨.

* 2003년 4월 케마케자 총리는 부족 간 분쟁, 부패 만연 및 경제 악화로 인한 정치 혼란과 법질서 붕괴로 인해 호주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태평양도서국포럼 긴급 각료 회의에 따라 호주가 주도하는 다국적군 2000명으로 구성된 RAMSI를 파견함.

- 자체 치안 능력 개선에 따라 2013년 RAMSI 소속 군인은 모두 철수하였으며, RAMSI의 경찰 인력은 2017년까지 잔류하면서 솔로몬군도의 치안 유지를 지원할 예정임. 다만, RAMSI 철수 후 자국 경찰 재무장에 따른 혼란 재발 가능성 등 불안요소는 여전히 상존함.

□ 국회의원 면세 법안 합법화에 따른 사회 불안요인 잠재

○ 국회의원에 대한 면세 합법화에 따른 비판여론이 반부패 비정부 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중심에서 대중시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2015년 4월 국회심사위원회(PEC)가 국회의원의 비과세 연봉을 정당화하는 법안을 승인하면서 언론 및 비정부기구(NGO)의 격렬한 항의를 초래하는 등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음.

※ '16년 10월 개최된 공공포럼에서 국회의원 면세 결정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①개정안 발의, ②위원회 결성, ③대중시위가 논의됨

- 2016년 4월 고등 법원이 국회심사위원회(PEC)의 결정을 무효로 판결하였으나, 동년 10월 항소 법원이 이를 번복함에 따라 법안이 발효됨.

3. 국제관계

□ 2000년대 후반 이후 호주와의 긴밀한 우호관계 지속

○ 호주는 솔로몬군도 전체 원조자금의 75%를 제공하는 최대 원조 공여국으로, RAMSI 파견을 주도하는 등 솔로몬 군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함.

- 2006~07년 소가바레 총리 재임 기간 중 RAMSI 비난, 호주 대사 추방 등으로 한때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2008년 시쿠아 총리 집권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히 정상화되었으며, 2014년 재취임한 소가바레 총리 역시 기술적·경제적 원조 등을 고려하여 밀접한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 2015~16년 호주의 대 솔로몬군도 원조는 1.7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 긴밀한 경제관계를 위한 태평양 협약 (PACER Plus)이 체결되면서 양국간 무역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대만 정부로부터 사회 전반에 걸친 원조자금 확보

- 대만은 솔로몬군도의 주요 사업 추진에 원조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솔로몬군도는 2007년 대만의 UN가입을 지지하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대만 정부는 2008~09년 솔로몬군도의 국회청사 건립 지원 동의, 2014년 홍수피해 복구자금 3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농업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원조제공, 의료지원, 장학생 초청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IMF 등 주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 지원

○ IMF로부터 2010~11년 대기성 차관(Stand-by Credit Facility)*, 2012년 이후 1.5백만 달러 규모의 포괄적 차관(Extended Credit Facility)** 등을 지원받고 있음. 또한 2014년 ADB는 교통 인프라 투자 등을 목적으로 15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제공함.

* 지급불능 사태에 빠진 회원국의 단기적 대응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

** 저소득국에 대한 IMF의 중기적 지원수단으로, 지원조건은 이자율 0%, 상환기간 10년(거치기간 5.5년 포함)

□ 원조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 발생 시 외채상환태도 악화 우려

○ 대외 원조자금이 GDP의 12%, 정부 수입의 40% 등 동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공여국의 원조 중단 등 대외 충격에 취약함.

- 현재 공공부채는 GDP 대비 10% 수준으로 안정적이거나, IMF는 향후 원조 감소 등 대외충격으로 저성장세가 고착화될 경우 동 비중이 3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악화될 우려가 있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OECD 및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는 동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지 않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8년 9월 15일 (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 어업협정(1980년), 무상원조기본협정(2012년)

□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6년 12월 기준 4건, 23.3백만 달러 (누적)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3〉 한·솔로몬군도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4	주요품목
수 출	7,277	6,317	18,661	13,581	석유제품,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수 입	12,286	10,783	13,804	2,367	목재류, 조명기기, 어류
합 계	19,563	17,100	32,465	15,948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2016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정부지출 증가로 전년(1.8%) 대비 상승한 3.2%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도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힘입어 3% 대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재정악화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하였으며, 2017년에는 Gold Ridge 광산의 생산 재개 및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지출 증가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호주, 대만 등으로부터 원조자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본재 수입 증가에 따라 상품·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10년간 7명의 총리 교체와, 2014년 취임한 소가바레 정권 후 7명의 장관 사임 등 정국이 불안정하고, 부족간 갈등이 내재되어 있어 호주 등 인접국가들이 RAMSI를 파견하는 등 사회불안 요소도 존재함.
- 2012년 이후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2016년 기준 GDP 대비 외채잔액과 외채원리금상환비율이 각각 12.1%, 3.2%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는 등 외채여건이 개선되고 있음.

인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김찬수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조사역

I. 일반개황

면적	328.7만 km ²	G D P	2.2조 달러 (2016년)
인구	13.3억 명 (2016년)	1 인 당 GDP	1,656달러 (2016년)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통화단위	Rupee (INR)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및 실용주의	환율 (달러당)	67.20 (2016년 평균)

- 인도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연방공화국으로,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91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자유화 및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다변화되어 있으며, 세계 2위의 인구 규모를 바탕으로 대규모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여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음.
- 2014년 5월 모디정권이 출범한 이후 다양한 개방·개혁정책이 추진되어 부정부패 척결, 인프라 개발, 친기업적인 환경 구축 등 정치·사회적 안정을 위한 바탕이 마련되고 있음.
- 1985년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결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지속하는 한편, 파키스탄 및 중국과 북쪽 국경지역에서 영유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2016년 화폐개혁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세 다소 둔화

○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증가세 급락,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회계년도 기준 2010년(2010년 4월~2011년 3월) 이후 경제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2013년 농업 생산량 증가와 수출 회복, 2014년 모디 정부 출범과 함께 성장세를 회복함.

○ 2015년에는 숙련 노동자 부족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의 성장 지연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축사업 확대, 지속적인 경제개혁 노력 등으로 7.5%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음.

○ 2016년에는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와 농업부문 호조에도 불구하고 화폐개혁*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6.5%로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

* 화폐개혁: 2016년 11월 인도 정부가 '지하경제 및 통화위조' 근절을 목표로, 통용되는 주류 화폐인 500루피와 1,000루피 등 고액권 현금에 대해 통용을 금지하고 신권으로 교체하는 조치를 취함. 인도에서는 현금거래가 대부분으로 동 조치에 따라 일시적으로 현금부족 및 소비위축 현상이 나타남.

□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물가안정세 유지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기후조건에 따른 식료품과 농산물 가격 및 에너지 연료 가격 변동, 루피화 가치 하락으로 2013년까지 9%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6.7%로 둔화됨.
- 2015년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목표 공식 도입,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4.9%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도 화폐개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식료품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안정목표(2.0%~6.0%) 범위 내인 5.0%의 물가 안정세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됨.
 - 인도중앙은행(RBI)은 2015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를 공식 도입하여 물가안정 달성을 우선으로 하는 통화신용정책을 영위하고 있음.

□ 인프라 구축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지속

- 비효율적인 조세제도와 낮은 징수율로 인한 세수 부족과 더불어, 연료 및 식료품 보조금 지급 등 선심성 정책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로 인하여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음.

- 2015 회계년도에는 수입관세, 서비스세 등 간접세의 징수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 인프라 구축, 중앙정부 공무원 임금 인상 등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어 GDP 대비 -3.9%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16 회계년도에는 도로 등 인프라에 대한 지출과 함께 농촌 개발과 농민복지에 대한 예산확대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3.8%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인도 정부는 2016년 11월 화폐개혁 실시를 통해 비공식경제 축소로 세원 확대, 2017년 7월 상품서비스세 법안 시행 추진과 함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2017 회계년도까지 3.2%(2018 회계년도 이후 3%)로 제한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e	2017 ^f
경제성장률	6.7	7.2	7.5	6.5	7.0
소비자물가상승률	9.9	6.7	4.9	5.0	5.1
재정수지/GDP	-4.5	-4.0	-3.9	-3.8	-3.2

자료 :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교육 부문 투자 부족 및 취약한 보건·의료 부문

○ 2012년 기준 인도의 GDP 대비 정부의 교육지출 비중은 조사대상 118개 국 중 83위로 하위권이며, 2014년 기준 인도(2013년 기준)의 학생-교사 비율은 조사대상 112개국 중 10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함.

○ 세계경제포럼의 2016~17년 글로벌경쟁력지수(GCI)에 따르면 보건·의료부문이 취약하여 결핵의 사업상 영향(129위), AIDS의 사업상 영향(127위), 신생아 천 명당 영아 사망자 수(115위), 10만 명당 결핵 발생건수(111위), 기대수명(106위) 등 전반적으로 보건 부문이 하위권(105위/138개 국)을 기록하고 있음.

□ 열악한 사업환경 및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7 보고서('16년 10월 발표)에 의하면, 인도의 기업경영여건은 조사대상 190개 국가 중 130위로 하위권을 기록함.

- 소액투자자 보호(13위), 전기공급(26위), 자금 조달(44위) 등은 양호한 반면, 건축인허가(185위), 세금 납부(172위), 법적분쟁 해결(172위), 창업(155위) 등에서 행정처리 절차가 많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세계경제포럼의 2016~17년 글로벌경쟁력지수(GCI)에 따르면 인도의 인프라 부문 경쟁력은 조사대상 138개 국 중 68위를 기록하였음.

- 특히, 무선전화 가입자수(123위), 유선전화 회선(114위), 전력 공급의 질(88위)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2019년까지 도로, 철도, 에너지 등 인프라 부문에 44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임.

□ 과도한 공공채무로 인해 은행부문 부실화에 대한 지원 제약

○ 각종 보조금 정책, 부실 공기업 지원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2016년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은 51.8%로 인도네시아(31.6%), 필리핀(42.3%), 태국(46.3%) 등에 비해 높은 수준임.

- 2016년 공공채무 이자비용이 재정수입의 약 35%를 차지하는 등 외부충격 대응 등을 위한 재정여력이 크지 않음.

- 국영은행을 중심으로 자산부실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영은행이 전체 은행업계 자산의 75% 수준을 차지함.
 - Moody's에 의하면 상업은행의 부실채권(NPL) 비율은 2016년 3월 말 7.8%에서 2016년 9월 말 9.1%로 상승함.
 - 국영은행은 2019년까지 GDP의 2% 수준인 450억 달러의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나 정부는 국영은행 지원을 위해 110억 달러를 승인한 상태로, 국영은행 자체적인 자본조달이 어려울 경우 정부의 국영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만연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6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인도는 조사대상 176개 국 중 79위로 중국, 브라질, 벨라루스 등과 같은 순위를 기록함.
- 모디 정권 출범 이후 4,000억 달러 규모의 블랙머니 특별수사팀 신설 등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5년 12월 인도 중앙조사국(CBI)은 2,200명의 부정부패 연루 공무원 관련 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노동력과 거대 내수시장 보유

○ 인도는 13억 명(세계 2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엔경제사회국(UNDESA)에 의하면 2022년에 중국을 넘어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이 될 전망이다. 2016년 GDP(2.2조 달러, 세계 7위) 대비 민간소비 비중 61%, 내수 비중 99%로 거대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중산층 인구 급증으로 내수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PwC(2012)에 의하면, 중산층* 인구가 2010년 1.7억 명에서 2021년 3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신흥 중산층** 인구도 4.7억 명에서 5.7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산층: 가계 연소득(INR) 300,000~850,000(달러: 5,614~15,907, 2012년 평균환율 53.44 적용)

** 신흥 중산층: 가계 연소득(INR) 150,000~300,000(달러: 2,807~5,614, 동일환율 53.44 적용)

○ 2015년 기준 생산가능인구와 14세 이하 인구 비중이 각각 65.6%, 28.8%이며 생산가능인구가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풍부한 노동력 공급이 예상된다.

□ R&D 투자 등에 따른 우수한 과학기술력과 높은 ICT 서비스 수출 비중

- 2013년 상위 3개 기업의 평균 R&D 지출비를 기준으로 인도는 조사대상 44개 국 중 20위 수준으로 대규모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 세계경제포럼의 2016~17년 글로벌경쟁력지수(GCI)에 따르면, 고등교육 관련 인도는 조사대상 138개 국 중 29위를 기록하는 등 고등교육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2013년 기준 대졸 이상 졸업생 중 과학 및 공학 졸업자 비율이 조사대상 102개 국 중 8위를 기록하는 등 과학 및 공학에 강점이 있음.
-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신흥국들과는 달리 무역에서 통신기기, 컴퓨터, 정보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다. 정책성과

□ 정부-중앙은행 간 정책공조로 물가안정 달성

- 2015년 3월 인도 재무부와 인도중앙은행(RBI)은 물가 목표*를 공식 도입하기로 합의하여 물가 안정, 재정건전성 확보, 경기 부양 등

거시경제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함.

* '16.1월까지 6% 이하, '17.3월까지 5% 이하, 그 이후는 $4(\pm 2)\%$ 를 유지하기로 합의

- 이에 따라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시기적절한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에 일조함.

* '14년 말 8.0%였던 기준금리를 '15년 1월, 3월, 6월, 9월 네 차례에 걸쳐 1.25%p 인하한 이후 2016년에도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0.5%p 인하하여 6.25%로 유지

- 다만, 물가안정 목표제의 공식 도입에 따라 통화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된 점은 긍정적이나, 통화위원회 구성원 결정 및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함.

□ 모디노믹스 추진에 따른 경제성장세 지속

○ 2014년 12월 모디 정권은 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개혁·개발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음.

* 정부 신뢰구축, 창의적 의사결정, 보건·교육·수자원 개선, 정부 투명성 강화, 부처간 협력 강화, 국민에 기초한 정부, 경제살리기, 인프라·투자 개혁, 정책시행의 시의성 확보, 정책의 안정성 확보 등

- 'Make in India'* 등 모디노믹스 추진에 따라 스마트시티 구축, 초고속 열차 건설 등 신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친시장 정책이 시행됨.

* 자동차, 생명공학, 건설, 방위산업 등 제조업 분야를 육성하여 제조업 비중을 '22년까지 25%로 확대할 계획

-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노동법 및 토지법 개정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이 낮아 노동시장 경직성 등의 문제가 여전히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3. 대외거래

□ 유가하락에 따른 원유수입 감소 등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감소세

○ 상품수지 적자는 2012년 2,015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나 원유수입 감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1,102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인도는 2015년 기준 세계 3위의 원유소비국으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원유 수입규모는 회계년도 기준 2013~2014년 1,640억 달러에 달했으나 유가하락 등으로 2015년 절반 수준인 829억 달러로 급감하였으며 2016년에도 690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상품수지 적자 감소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2015년 경상수지 적자는 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273억 달러에서 225억 달러로 축소됨. 2016년에도 저유가에 따른 원유 등 수입 감소에 힘입어 경상수지 적자도 87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됨.

○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2012년 -5.0%로 확대된 이후 경상수지 적자 축소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에는 -0.4%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외환보유액 증가세 지속

○ 외환보유액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확대* 등에 따라 2013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15년 3,343억 달러, 2016년 3,487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세계 9위에 해당하는 규모임.

* FDI 유입(억 달러): 240('12년)→282('13년)→346('14년)→440 ('15년)
→450('16년)

○ 월평균 상품·서비스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2012년 5.6개월에서 2015년 7.5개월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2016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양호한 수준임.

□ 총수출 감소로 GDP 대비 총수출 비율 하락

- 총수출은 2014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주요 수출품인 석유정제 제품 등 수출 감소와 함께 2015년과 2016년에는 감소세를 나타냄.
- 이에 따라 GDP 대비 총수출 비율도 2013년 25.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19.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정부의 적극적 외채관리로 양호한 외채상환능력 유지

-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2~23% 내외를 지속하며 태국(37%), 인도네시아(35%), 필리핀(28%) 등 인근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총외채 중 중장기 외채 비중은 상승추세를 보이며 2016년 약 83.7%로 외채구조가 양호한 편임.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6년 7.8% 대로 여전히 양호한 수준임.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은 2016년 112% 수준으로 총수출 감소와 외채 증가에 따라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15년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은 24.4%로 양호한 수준이며, 2016년에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단기 유동성 관련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e	2017 ^f
경 상 수 지	-49,123	-27,316	-22,456	-8,708	-12,129
경상수지/GDP	-2.6	-1.3	-1.1	-0.4	-0.5
상 품 수 지	-162,577	-144,046	-136,885	-110,181	-119,554
수 출	319,719	328,387	272,353	259,349	279,711
수 입	482,296	472,433	409,238	369,530	399,265
외 환 보 유 액	276,493	303,455	334,311	348,650	356,234
총 외 채 잔 액	427,296	457,552	479,559	486,843	505,437
총외채잔액/GDP	22.9	22.4	23.1	22.2	22.1
D S R	5.7	6.2	7.2	7.8	7.7

자료 : IMF, EIU, OECD.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 정권 유지

- 2014년 5월 실시된 제16대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이 하원의석의 과반의석 이상(282석/총 543석)을 차지하여 10년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고 30년만에 단독 정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함.

- 모디 정권 출범 후 관료주의 타파, 인프라 개발, 기업환경 개선 등 친시장 정책을 통해 경제구조 개편과 정부신뢰 회복을 꾀하고 있음.

- 2014~15년 7%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16년에도 6.5%의 성장세를 지속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2017년 주의회 선거 승리로 모디노믹스 개혁정책 추진 다시 탄력

- 여당이 상원에서 의석의 과반수에 못미치는 30%만을 차지하는 등 열세로 인해 모디 정권의 주요 개혁안들이 의회 표류 중임.

- 모디 정권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법 및 토지수용법 개정, 통합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도입을 추진 하였으나, GST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개정안은 상원 내 여당의 열세로 인해 상원 통과에 실패함.

- 2017년 2~3월 치러진 5개 주의회 선거에서 인도국민당은 편자브 주를 제외하고 인구 2억의 우타르 프라데시 주 등 4개 주에서 연정 등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주 정부와의 공조 등으로 개혁정책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빈부격차와 계층 간 갈등으로 사회 불안 요소 상존

- 1947년 카스트 제도가 공식 철폐되고 정부의 하층카스트 우대정책 등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도인들이 동 제도를 여전히 숙명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계층 간 갈등사태가 유발되고 있음.
 - 2016년 2월 인도 하리아나 주에서 중간층 카스트에 속하는 ‘자트’들이 공무원 선발, 대학 입학 등에 부여한 ‘하층 카스트 우선할당제’ 관련 자신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 하층 카스트로 분류해 달라며 폭력 시위를 일으킴.
- 다만, 높은 소득격차 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의식, 인내와 관용의 국민성이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반군에 의한 폭력사태 발생

- 인도 차티스가르 주와 자르칸드 주 등 중동부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며 마오주의*를 추종하는 인도 공산반군(Naxalite)의 폭력 사태가 자주 발생함. 정부의 진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산반군은 빈곤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 하층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 정부의 반군 근절이 어려움.

*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이념으로, 농민중심의 혁명 추구

- 2013년 1,129건의 낙살라이트 폭력사태로 인해 39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15년 4월 반군의 공격으로 최소 13명의 경찰이 사망하였고, 2016년 2월 인도 경찰은 8명의 낙살라이트 반군을 사살함.

○ 2015년 6월 동북부 마니푸르주에서 분리주의 반군이 정부군 20명을 살해하는 등 미안마 접경 지역에서 분리주의 반군의 폭력사태가 간헐적으로 발생함.

3. 국제관계

□ 실용주의 대외관계 노선 추구

○ 성장잠재력과 대규모 내수시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내 영향력 확대 및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을 위해 모든 국가와 긴밀한 균형 관계를 유지함.

- 1985년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결성을 주도한 이후, 남아시아 지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긴밀한 정치·경제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15년 12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며 경쟁국인 독일, 일본, 브라질 정상과 4개국 회의를 개최하는 등 외교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아시아권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 및 아세안국가와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주변 국가와의 영유권 분쟁 등 갈등 지속

- 2015년 12월 인도-파키스탄 간의 전격적인 정상회담 등으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으나, 파키스탄과 1947년 분리 이후 카슈미르 지역 영토 분쟁으로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등 적대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9월 카슈미르 지역 인도군 기지가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18명의 인도군이 사망한 이후 인도·파키스탄 간의 갈등이 재연되며 국경지역 교전 위험이 증가함.

- 중국과는 2014년 9월 정상회담 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12개 협정문에 서명하는 등 경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경 지역* 영유권 분쟁 등 정치적 긴장관계를 지속함.

* 서북부 잠무-카슈미르 주, 동북부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 등 총 4,000km에 이르는 지역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황태도

□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금액은 감소세이며 승인금액 대비 미미한 수준

○ 2016년 말 기준 인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총승인액은 242억 달러(단기 38억 달러, 중장기 204억 달러)이며, 감소세인 연체금액은 중장기승인액에 대해 55.7백만 달러(중장기 승인액의 0.27%)로 미미한 수준임.

* 중장기승인액에 대한 연체금액(백만 달러): 75.6('12년 말)→101.0('13년 말)→60.7('14년 말)→70.8('15년 말)→55.7('16년 말)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은 투자적격 등급 유지

○ OECD는 인도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3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S&P, Moody's, Fitch는 각각 2007년, 2004년, 2006년에 인도에 부여한 최하위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Fitch가 2013년 6월 등급전망을 Negative에서 Stable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S&P도 2014년 9월 등급전망을 Negative에서 Stable로 상향조정함.
- Moody's는 인도의 최근 정책이 경제 성장과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여 2015년 4월 신용등급 전망을 Stable에서 Positive로 상향 조정함.

〈표 5〉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B2 (2017. 3.)	B2 (2016. 3.)
OECD	3등급 (2016. 6.)	3등급 (2015. 6.)
Moody's	Baa3 (2016.11.)	Baa3 (2015. 4.)
Fitch	BBB- (2016. 7.)	BBB- (2015.12.)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73년 12월 10일 (북한과는 1973년 12월 10일)
- 주요 협정: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74년), 과학기술협력협정('76년, '06년 개정), 이중과세방지협약('86년, '16년 개정), 투자보장협정 ('96년), 세관협력협정('06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10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14년)

□ 해외직접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제16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

- 우리나라의 인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섬유제품 등 제조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2016년 12월 말 누계 기준 43.7억 달러(신규법인 수 864건)를 기록함.

□ 교역 현황: 우리나라의 제11위 교역 대상국이며 무역수지 흑자 감소세

- 인도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8위 수출대상국, 제23위 수입 대상국임. 2010년 1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어 교역규모가 2009년 122억 달러에서 2011년 20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수입 감소로 양국간 교역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역수지 흑자도 2011년 205억 달러에서 2016년 158억 달러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상품 양허, 서비스 추가 자유화 등을 위한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이 2016년 10월(서울)과 2017년 2월(뉴델리)에 개최되는 등 양국간 CEPA 개선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표 6>

한·인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주요 품목
수 출	12,782	12,030	11,596	철강관,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수 입	5,275	4,241	4,189	석유제품, 알루미늄, 정밀화학원료
교역규모	18,057	16,271	15,785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의견

-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인 경제개혁 노력 등으로 2015년 7.5%의 고성장을 달성하였으며, 2016년에는 인프라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와 농업부문 호조에도 불구하고 화폐개혁에 따른 소비 위축 등에 따라 6.5%로 전년 대비 소폭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2~13년 9%대에서 물가목표제 도입 등으로 2015~16년 5% 이하로 둔화되는 등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음. 인프라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과 함께 농촌 및 농민 관련 예산 확대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6년 -3.8% 수준을 기록하는 등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저유가에 따른 원유수입 감소 등 상품수지 적자 축소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 적자는 감소세에 있으며, 2016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 -1.1%에서 -0.4%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친기업 성향의 모디 정부는 출범 이후 개혁정책을 추진하며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음. 인도 상원 내 여당의 열세 등이 정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2017년 주 의회 선거 승리 등으로 개혁정책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만성적인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는 우려되나, 경상수지 적자 규모 축소, GDP 대비 22% 수준의 낮은 외채비중, 단기외채 대비 4배 이상의 외환보유액 규모 등 대외지급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한국의 개발협력」 원고 기고

□ 발간 목적

- 「한국의 개발협력」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국제개발협력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개발협력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의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대외원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개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원고 게재 절차

- 기고 → 접수 → 심사 → 게재

□ 원고 집필 요령

- 내용 및 작성 : 개발협력과 관련된 최근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서술 형식으로 작성
- 형식 : 한글파일 사용 (12 폰트, 200자 원고지 기준)
- 분량 : A4 용지 20매 내외

□ 기고 및 접수

- 기고 및 접수는 E-mail 전송을 원칙으로 한다.

E-MAIL : changmin@koreaexim.go.kr

Tel : 02-6255-5691

- 기고 원고는 「한국의 개발협력」의 발간 목적에 부합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 기고 원고는 게재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 심사

- 심사 절차는 「한국의 개발협력」 편집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기고 원고의 심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절차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원고 기고지는 해당 호의 심사자에서 제외된다.

□ 게재

- 원고는 교정·교열을 거쳐 게재하며,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는 제반규정에 따라 교정 및 수정 등의 편집권한을 갖는다.

-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 원고 게재가 결정된 원고 제출자가 별쇄본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게재희망 원고 중 외부의 연구지원을 받은 원고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ttp://www.edcfkorea.go.kr>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